


시 간

통권 제 390 호 | 2016

ISSUE

한국 근현대사 이해의 보고(寶庫),
신문은 어떤 역할을 해왔나?





도서관

통권 제 390 호

2016

ISSUE

한국 근현대사 이해의 보고(寶庫),
신문은 어떤 역할을 해왔나?

본 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집필진의 개인견해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의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례

I ISSUE 한국 근현대사 이해의 보고(寶庫), 신문은 어떤 역할을 해왔나?

총론: 근현대사 이해의 보물창고, 신문을 읽자 | 006

김영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 근대 신문의 출현과 사회적 역할 | 016

김영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책임연구원

8·15에서 5·16까지의 신문: 정론지에서 대중지로의 과도기 | 034

박용규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산업화 시기 신문과 독자 | 054

채 백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민주화 이후 시기 신문과 독자의 신뢰 | 072

김세은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신문의 미래: 빅데이터가 된 뉴스 | 096

박대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신문자료 현황과 역할 | 122

정연숙 前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운영과 사무관

II 2016년 기획대담

디지털 혁명과 미래의 신문 | 142

사회: 김영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책임연구원

패널: 구본권 한겨레신문사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김영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센터장,

김익현 지디넷코리아 미디어연구소 소장

III 2016년도 연구현황

도서관정책기획단 | 158

국립중앙도서관 | 158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159

국립장애인도서관 | 159

부록: 국립중앙도서관 고신문 디지털컬렉션 | 162

ISSUE 한국 근현대사 이해의 보고(寶庫), 신문은 어떤 역할을 해왔나?

- 01 _ 총론: 근현대사 이해의 보물창고, 신문을 읽자 · 006
- 02 _ 한국 근대 신문의 출현과 사회적 역할 · 016
- 03 _ 8·15에서 5·16까지의 신문: 정론지에서 대중지로의 과도기 · 034
- 04 _ 산업화 시기 신문과 독자 · 054
- 05 _ 민주화 이후 시기 신문과 독자의 신뢰 · 072
- 06 _ 신문의 미래: 빅데이터가 된 뉴스 · 096
- 07 _ 국립중앙도서관 신문자료 현황과 역할 · 122

총론: 근현대사 이해의 보물창고, 신문을 읽자

김영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책임연구원

01

1. 신문의 특성과 역할을 살펴본다.

1) 신문(newspaper)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¹⁾

여러 미디어 가운데 역사가 가장 오래 되고 전통적으로 종이로 만든 미디어가 신문이다. 신문은 대부분 매일 발행된다. 이런 점에서 다른 인쇄매체인 책이나 잡지와 구분된다. 물론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과도 차이가 있다. 종이신문이 대부분이던 시절 신문읽기가 사람들의 일상적인 습관이 된 것은 이런 정기성이라는 속성 덕분이다. 그런데 오늘날 신문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전의 정기성과는 다른 특성도 갖게 되었다. 온라인 신문은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수시로 기사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 기사를 올리기도 한다. 전달 주기나 속보성에서 온라인 신문은 텔레비전과 거의 차이가 없어졌다. 기술발전에 따라 앞으로도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여기서는 전통적인 종이신문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이 부분은 임영호(2013), <신문원론>, 전면개정 3판, 서울: 한나래, 29-36쪽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1) 신문은 새롭고 시의적인 내용, 즉 최근의 사건이나 경향, 의견을 주로 다룬다. 신문은 시간을 다투는 상품이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품 가치를 잃게 된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 종이 신문은 마감 시간이 지난이후 긴급한 소식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호외를 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신문사마다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2) 신문은 문자로 작성된 기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신문은 시민으로서 필요한 정치적 정보와 소양을 갖추거나 지적 훈련에 적합한 매체로 평가된다. 그러나 텔레비전의 출현이후 그리고 인터넷이 대중화한 오늘날 신문은 사진, 도표, 컷 등 시각적인 자료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 신문에서는 동영상이나 음악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

(3) 신문은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문은 지면의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지면은 방송 매체에 비해 늘리기가 쉽다. 따라서 신문은 방송 매체에 비해 훨씬 많은 정보를 소화할 수 있고, 다양한 내용을 실을 수 있으며 심층적인 보도도 가능하다. 신문 기사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경우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4) 신문은 기록성이 뛰어나다. 전통적으로 신문은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유통되어, 매일매일의 소식, 사건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이 신문의 중요한 특성이자 장점이다. 다른 미디어에 비해 기록성과 보관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종이 신문은 하루하루를 기록한 역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신문은 또한 필요할 때 반복해서 볼 수 있다.

(5) 종이신문은 기사들을 잘 편집한 상태로 인쇄된다. 기사의 위치, 제목의 크기, 사진 등으로 그 기사의 중요도를 말해주기 때문에 지면을 넘기다보면 지난 하루 동안 세상흐름을 파악하기 쉽다. 신문은 또한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골라 읽을 수 있고, 속도도 자신의 생각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읽는 자세나 장소도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편집된 순서에 따라 시청하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화면 앞에 있어야 하는 인터넷 신문과 비교되는 장점이다.

2) 신문, 언론, 저널리즘은 어떻게 다른가?

신문은 언론과 저널리즘이라는 표현과 혼용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문이 저널리즘이나 언론과 밀접한 관계이지만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먼저 저널리즘(journalism)은 시의성 있는 시사 문제에 관해 보도, 해설 논평하는 활동이나 그런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분야를

말한다.⁽²⁾ 라틴어에서 매일매일을 기록한다는 뜻을 가진 *jurna*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영어 *journal*(정기간행물)이 생겼고, 여기에 행위, 주의, 제도, 직업을 의미하는 *ism*이라는 접미사가 추가되어 저널리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언론(言論)은 국어사전에서 “개인이 말이나 글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글의 의미”로 설명된다.⁽³⁾ 원래 ‘언론’이라는 단어는 조선 초기 성종 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신조어인데, ‘간쟁(諫諍)’과 비슷하게 군주에 대한 신하의 비판적 진언(陳言) 행위의 의미였고, 조선시대에는 간쟁이 더 자주 사용되었다.⁽⁴⁾ 이 가운데 언론이라는 단어가 개화기에 근대적인 신문이 출현하면서 미디어를 통한 저널리즘 활동 곧 시사적인 문제나 사실에 대한 보도 및 논평 활동의 의미가 추가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⁵⁾ 반면 간쟁이라는 단어는 저널리즘 활동과 관련해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되었다. 이와 같이 언론은 개화기이후 저널리즘의 우리말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언론, 잡지언론, 방송언론 등의 표현도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신문은 전통적으로 저널리즘 곧 언론활동으로 생산된 뉴스, 해설, 논평 기사를 기본으로 하지만 여기에 다른 정보들, 사회 각 분야의 새로운 동향이나 지식과 관련한 기사와 광고 등 저널리즘이외의 텍스트들도 포함하는 매체(*medium*)로서 저널리즘의 우리말 표현인 언론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도 엄밀하게 말하면 같은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관행상 신문을 언론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흔하다.

3) 신문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과 영향은 무엇인가?

신문을 비롯한 대중적인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 또는 기능은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를 든다.⁽⁶⁾ 첫째, 정보제공기능이다. 미디어는 사회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둘째,

(2) 임영호(2013), 위의 책, 27-28쪽.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http://www.korean.go.kr/09_new/index.jsp)

(4) 김영주(2005), 조선왕조 초기 公論과 공론형성과정 연구—簡淨-公論-公論收斂制度의 개념과 종류, 특성. <언론과학연구>, 제2권 3호, 101쪽; 김영주(2009), ‘언론’ 유사개념으로서의 ‘간쟁’에 대한 역사적 고찰. <커뮤니케이션이론>, 5권 1호, 78~79쪽.

(5) 김영희·최운호·윤상길(2011), 독립신문 논설의 언론 관련 개념 분석 - 독립신문 논설 코퍼스 활용 사례연구 -. <한국언론학보>, 제55-5호, 11-12쪽.

(6) 차배근(1999), <매스 커뮤니케이션 효과이론>, 나남출판, 25-29쪽; Severin, Werner J. & Tankard, James W.(2001), *Communication Theories: Origins, Methods, and Uses in the Mass Media*, 5th, ed, 박천일·강형철·안민호 공역(2004), <커뮤니케이션 이론: 연구방법과 이론의 활용>, 나남출판, 436-439쪽; McQuail, Denis(2005), *McQuail's Mass Communication Theory* 5th, ed, 양승찬·이강형 공역(2008),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론>, 나남출판, 127-131쪽.

미디어는 또한 사건과 정보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해석하며 논평하는 해설, 비판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해설과 논평 기능을 통해 미디어는 환경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사회규범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미디어는 문화전수 기능이 있다. 사회구성원들에게 주도적인 문화와 공통된 가치관을 가르치는 사회화 기능을 통해 사회구성원 간에 통합을 이루게 한다. 넷째, 미디어는 오락을 제공한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오락은 사람들에게 즐거움, 기분전환, 사회적 긴장 해소를 돕는다. 다섯째, 미디어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기능이 있다. 미디어는 정치, 전쟁, 경제발전, 노동, 종교영역에서 특정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사회적 행동을 권한다.

물론 이와 같은 미디어가 수행하는 역할에는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기능적 역할의 양면성이 있고, 한 기능에 다른 기능이 중복되기도 한다. 정보제공의 경우 허위 정보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의도된 해석과 평가로 여론을 오도하거나 조작할 수도 있다. 또한 사회문화 유산의 전수나 사회적 동원 기능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획일화시키고, 문화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으며 권력자의 의도에 따라 사람들을 통제하고 동원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디어가 전하는 내용이 미디어 수용자들의 인지, 태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수용자들의 속성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며, 다양하다. 특히 미디어가 널리 보급된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를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수용자들에게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나라의 미디어든 그 나라의 입장과 시각에서 보도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마련이다. 한국가내의 미디어라도 편향된 시각에서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떤 미디어는 긍정적으로 크게 취급하고, 어떤 미디어는 부정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가 제공하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 곧 미디어리터러시(media literacy)가 필요하다.

2. 신문은 정말 근현대사 이해의 보고인가?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를 보존, 관리하는 역할과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⁷⁾ 이와 같은 도서관의 역할은 지식정보사회에 더욱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⁸⁾

(7) 남태우(2013). <도서관론>. 대구: 태일사, 71-80쪽.

(8) 한국문헌정보학회 최신 문헌정보학의 이해 편찬위원회 편(2013). <최신 문헌정보학의 이해>. 한국도서관협회, 33-37쪽.

도서관은 전화, 전화선, 온라인서비스, 휴대폰,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전달의 주요한 채널 역할을 하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일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로서의 도서관이 갖는 지식의 배포능력은 인터넷이 대중화하면서 점점 더 많은 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고 있어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은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는 정보와 지식들을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원거리 이용자가 도서관이 제공하는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도서관은 다양한 정보와 지식의 저장고이다.

이와 같이 도서관이 수행하는 역할과 조금 다른 의미에서 신문 역시 지식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신문의 특성으로 설명한 기록성과 보관성은 신문을 근현대사의 보물창고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신문자료는 도서관에서 영구 보존하는 국가문헌으로 평가되는 중요한 수집대상이며 서비스 자료이다. 2016년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연간 연속 간행물 수집량의 57%가 신문 자료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신문자료실은 수집한 신문을 꾸준히 제본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9년 디지털도서관이 개관해 2015년 현재 11종의 국내전자신문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 현재 49종의 고신문 원문을 디지털화 하여 귀중본 신문 서비스 네트워크(<http://www.nl.go.kr>)를 통해 관내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호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신문자료 현황과 역할”에서 평가했듯이 귀중본 신문은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시기를 거쳐 미군정기 이후 한국전쟁과 현대로 이어지는 생생한 역사를 담고 있는, 보존과 활용 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사료이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앞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력해 두 기관에서 구축한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활용하고 통합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식의 보물창고인 고신문 기사 검색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신문을 지식의 보물창고로 활용한 사례는 근대 신문이 출현한 개화기부터 나타난다. 개화기에 신문은 책처럼 묶어서 보관해 나중에도 두고두고 보았고, 다른 사람이 빌려서 읽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시기 <동아일보> 창간에 참여했던 김동성은 개화기에 발행된 <황성신문>에서 받은 영향에 대해 “마침 임형산덕에 황성신문을 약 10년간 모아 책 몇 권을 만들어 두었다. 당시 황성신문은 로이드식이니 지금 신문 4절 한 폭이다. 이 책 열권을 차독(借讀)하니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⁹⁾고 회고한 바 있다. 김동성은 그렇게 10년간 발행한 신문을 모두 모아 만든 신문철을 읽고, 공자왈 맹자왈 하는 기존 한학이 아닌 새로운 학문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미국에 가서 신문학(新聞學)을 공부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근대적인 신문이 처음 출현한 이후 신문은 매일매일 중요한 사건과 사고를 기록한 그날의 역사로서, 사용언어와 문체의 변화를 이해하는 작업에서 시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스포츠, 광고 등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각 분야의 흐름과 동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1차 사료로 활용되고 있다. 새로운 학문과 개념이 수용된 역사 연구에서 신문은 필수적인 연구대상인 것이다.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이 펴낸 개념사 연구서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개화기에 발행된 <독립신문>, <매일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의 신문 기사를 기본 텍스트로 활용했다.⁽¹⁰⁾

이런 사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출현하고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의 한국영화사연구소가 일제강점기 시기 영화자료총서로 펴낸 자료집들도 또 다른 사례이다. 이 총서는 식민지 시기에 발행된 <매일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일간 신문에 실린 조선 영화와 연예 관련 기사 및 광고를 전부 모아 정리했다.⁽¹¹⁾ 신문 기사와 광고 그 자체가 당시의 영화를 이해하는 1차 사료라고 본 것이다. 영상물이 남아있어도 쉽지 않겠지만, 당시의 영상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실정에서 만일 이런 자료들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시기 영화와 영화 수용현상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신문이 일상생활의 보물창고임을 책으로 보여준 사례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역사신문편찬위원회(1995)가 펴낸 <역사신문>과 <세계사신문>을 비롯해, 강응천 등 여러 학자가 저술한 <근현대사신문: 근대편 1876-1945>과 <근현대사신문: 현대편 1945-2003> 등은 아예 신문형식으로 만든 역사대중서이다.⁽¹²⁾ 각 분야의 일상생활사를 매일매일 발행하는

(9) 김동성(1963). 동아일보 창간시대의 기자. 고재욱선생화갑기념논총편찬위원회편, <민족과 자유와 언론>. 서울: 일조각, 26쪽.

(10)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2004). <근대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2006).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전과 사유 지평의 확대>. 서울: 소명출판;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2007). <근대계몽기 지식의 굴절과 현실적 심화>. 서울: 소명출판.

(11)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사연구소 엮음(2008). <신문기사로 본 조선영화 1911~1917> 1 일제강점기 영화자료총서 1. 서울: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사연구소 엮음(2010). <신문기사로 본 조선영화: 1918~1920>. ;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사연구소 엮음(2011). <신문기사로 본 조선영화: 1921~1922>. ;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사연구소 엮음(2011). <신문기사로 본 조선영화: 1923>. 서울: 한국영상자료원 ;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사연구소 엮음(2012). <신문기사로 본 조선영화: 1924>. 서울: 한국영상자료원 ;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사연구소 엮음(2013). <신문기사로 본 조선영화: 1925>. 서울: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사연구소 엮음(2014). <신문기사로 본 조선영화: 1926>. 서울: 한국영상자료원.

(12) 역사신문편찬위원회(1997). <역사신문> 전6권. 서울: 사계절; 세계사신문편찬위원회(1999). <세계사신문> 전3권. 서울: 사계절; 강응천·김성환·이권우·오철우·정인경·김정·김진경(2010). <근현대사신문: 근대편 1876-1945>. 서울: 사계절; 강응천·정병준·고지훈·강양구·김영규(2010). <근현대사신문: 현대편 1945-2003>. 서울: 사계절.

신문형식으로 편집한 것이다.

〈근현대사신문〉에 대한 출판사의 책 소개에서 “근현대에 일어난 사실들을 사건이나 주제별로 나누어 신문 기사 형식으로 생생하게 서술하여, 마치 역사적 사실이 우리 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신문을 보듯이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복잡한 근현대사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정리될 것이다. 과거의 역사를 그 시대의 신문처럼 재현하기 위해 사진, 광고, 신문기사 등 생생한 당시 자료를 수집하고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주경철 교수도 이 책의 추천사에서, “역사를 살아 있는 현재의 사실로 만들어 생생하게 전달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빛난다. 굴곡 많은 근현대사의 역사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듯한 경험은 타임머신의 요술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신문은 당대 사회를 가장 생생하게 기술한 매일 매일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문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출현한 개화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생활사, 문화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사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신문을 근현대사의 보물창고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한국 사회에서 신문은 어떤 역할을 해왔나?

이번 〈도서관〉 390호에 수록한 5편의 글은 한국 사회에 신문이 출현한 이후 현재까지의 역사를 정부의 언론정책, 각 시기 신문의 역할과 독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한 신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시기별로 나눈 5편의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 신문이라는 근대적인 매체가 출현하면서 비로소 공적인 사회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하는 공공영역이 본격적으로 출현했다. 특히 1896년 창간된 〈독립신문〉은 신문이라는 근대적인 사회제도를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독립신문〉 발행에 자극받아 출현한 개화기 신문들 역시 개화, 독립을 위해 독자를 계몽하고, 독자들이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게 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식민지 시기 조선인 경영 신문들은 1920년 창간이후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언론통제 아래에서나마 조선인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1930년대 식민지 현실이 장기화하면서 조선독립의 희망과 기대가 희미해지고, 신문 역시 친일논조에 적극적이 되어 가던 1936년 손기정 선수의 마라톤 우승 보도 그 자체만으로 조선인의 긍지를 일깨우면서 민족주의가

확산된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식민지 현실의 한계에서도 조선인을 위한 신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해방이후 쏟아져 나온 신문들은 1950년대까지 정파적 신문이 대부분이었다. 정치적 선정주의 경향이 있는 가운데서도 독자들의 인기를 끌며 발행부수가 훨씬 많았던 야당지들은 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4·19 혁명과정에서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은 1950년대 정부비판의 전통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제2공화국 시기 무제한의 언론자유는 사이비 언론의 횡포가 만연하게 만들었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언론에 대한 탄압과 통제가 강력해지면서 신문은 정부와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 환경 감시 등 기본적인 언론의 사회적 역할 수행이 매우 위축되었다. 언론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나, 한국사회가 산업사회로 발전하던 당시 신문 산업은 대기업으로 엄청나게 성장했다. 1987년 민주화이후 언론의 자유가 크게 신장되어 신문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해졌다. 그러나 점차 신문 스스로 권력기구화 되어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이후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되면서 신문 산업도 시장경쟁이 치열해졌다. 무한 경쟁체제가 되면서 상업주의와 선정주의 경향이 현저해져 신문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해서라면 신문의 공공성 문제는 부차적인 목표로 전락하는 경향마저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신문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는 많이 하락한 실정이다.

20세기 한국 신문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한국 신문이 수행한 긍정적인 역할도 많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신문이 널리 보급되어 그 영향력이 훨씬 커진 현대 산업화시기이후 긍정적인 역할들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많았고, 그런 양상은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신문들은 앞에서 살펴 본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는 신문의 본질과 존재이유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 공공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4. 신문을 읽어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안목을 키우자.

한국 사회에서 신문 산업의 위기가 시작된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광고수입이 감소하면서 신문사의 경영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종이신문의 발행부수가 빠르게 감소하여 신문의 위기가 가속화되었다. 종이신문의 발행부수

감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¹³⁾ 무엇보다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증가하고 인터넷이 대중화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다. 여기에 그동안 주류언론들이 권력과 유착하여 무책임한 보도태도를 보였고, 보도내용에서 국민의 입장보다 광고주인 기업이나 언론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도 있어 독자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다. 특히 젊은 청소년층 가운데 신문을 읽는 독자층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상미디어나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소비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물론 종이신문을 읽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뉴스소비가 감소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⁴⁾ 하지만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들은 공적인 성격의 뉴스보다는 연예, 오락, 스포츠 등 감각적이고 흥미위주의 뉴스들이 더 선호되고 있다. 이처럼 수용자들이 뉴스를 읽는 매체가 신문에서 인터넷으로 이동하면서 전통적으로 종이신문이 수행했던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공론장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사회현실을 바로 보고,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하는 뉴스콘텐츠 접착이 드물어지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뉴스이용매체가 종이신문에서 영상 매체, 인터넷, 모바일로 이동하면서 전통적인 저널리즘 역할이 약화되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신문독자가 감소한다고 해서 신문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문이 환경을 감시하고, 해설하며, 논평하는 본래의 저널리즘 역할에 충실하다면, 신문은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보루라고 말할 수 있다. 신문은 저널리즘 역할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와 사회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의 미래”에서 박대민 연구위원이 지적하듯 종이 신문발행이 감소하면서, 윤택기는 멈춰가더라도, 신문이 수백 년간 지켜온 저널리즘의 사회적 가치야말로 미래에 뉴스가 데이터가 되어 수많은 콘텐츠로 부활할 가치가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신문 읽기는 읽는 사람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르는데도 매우 유용하다.⁽¹⁵⁾ 그런데 신문이 제공한 내용을 올바르게 수용하고 해석하려면 신문구독 능력이 필요하다. 신문뿐만 아니라 미디어 전반에 대한 수용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13) 한국언론진흥재단 편(2010). <한국신문의 미래전략: 디지털 시대의 건강한 뉴스 생태계를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13-14쪽.
 (14) 최영재(2005). 사라지는 신문독자: 신문구독 이탈현상, 원인, 결과. 김경호 외 7인. <사라지는 신문독자>. 커뮤니케이션북스, 102-103쪽.
 (15) 임성관(2015). 독서 운동과 NIE 활동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권 3호, 참조.

신문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호 특집 대담에서 미디어콘텐츠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된 것도 그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가운데서 특히 뉴스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뉴스 콘텐츠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의미하는 뉴스 리터러시가 매우 필요하다.⁽¹⁶⁾ 단순한 뉴스접촉만이 아니라 심층해설과 분석 기사를 읽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한국 사회와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는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문의 특성과 역할을 교육시켜 신문을 잘 이해하도록 이끌면서, 신문을 학습교재로서 적극 활용하는 교육사업이 NIE(Newspaper in Education)운동이다. NIE 운동의 목표는 신문 기사를 활용해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비판적이고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길러주면서 한편으로 신문 제작 과정을 공부함으로써 정보가 전달 과정에서 어떻게 왜곡될 수 있고, 정보들을 어떻게 취사선택해야 하는지 배우는 것이다.⁽¹⁷⁾ 따라서 NIE 교육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교양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비판적인 읽기 능력을 키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언론전문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도하여 청소년들의 신문읽기를 유도하고 권장하는 사업을 전개하면서 관련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¹⁸⁾

신문을 읽자. NIE 교육이 아니더라도 미디어리터러시와 뉴스리터러시 능력은 신문을 읽는 데서 출발한다. 꾸준히 읽다보면 읽기 능력이 향상되어 주체적이고 균형 잡힌 신문 읽기능력도 형성될 수 있다. 읽기능력이 향상되면 어떤 기사가 편파적인 보도태도를 보이는지 또는 객관성이 결여된 기사인지에 대한 안목도 생기기 마련이다. 수용자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관점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들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종이신문을 읽지 않더라도 신문사가 제공하는 뉴스를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서 읽을 필요가 있다. 현재를 기록한 것이 매일 매일의 역사이다. 지나간 과거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서막이다.(What is past is prologue) 다가올 미래를 더 잘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매일매일의 기록으로 역사를 쓰고 있는 신문을 읽을 이유는 충분하다.

(16) 이정훈(2012), 뉴스 리터러시: 새로운 뉴스 교육의 이론적 탐색,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9호, 87쪽.

(17) 한국신문협회(2011), 〈국내 NIE 현황조사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17쪽.

(18) 황유선·주민정·김재선(2013), 〈NIE 연구학교 운영효과 분석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32-35쪽.

한국 근대 신문의 출현과 사회적 역할

김영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책임연구원

02

1. 한국 사회와 근대 신문의 출현

조선왕조시대에는 공공적으로 세계 각국의 문물과 정세변화를 정기적으로 알려 준 매개체가 전혀 없었다. 다만 승정원에서 매일 발표한 소식을 필사하여 양반 관료들에게 전달하는 필사신문 <조보>(朝報)가 있었다.⁽¹⁾ <조보>는 관리의 임면사항이나 지방 관리가 지방 주요 소식을 왕에게 보고하는 장계, 그에 대한 국왕의 비답 등을 담아 나라의 주요 소식을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조보>가 소식전달 매체로서 인기를 끌자, 1577년 개인이 <조보>를 인쇄해서 판매해 독자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조보를 인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국왕 선조가 이를 금지시키고 처벌했다. 그 후 정조시대 정조가 <조보>를 인쇄해서 발행하는 게 어떻겠는지 의견을 내었으나 국가기밀의 누설이라며 관료들이 반대해 실행되지 않았던 것이 조선시대의 사회분위기였다.⁽²⁾

그러나 먼저 개항하여 서구 열강의 발전을 쫓아가던 일본에 의해 1876년 조선이 개항되어 나라를 근대적으로 개혁하고 발전시키면서, 열강의 세력침투에 대응하여 자주 독립을 유지시켜야하는 문제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은

(1) 박정규(1982), 조선왕조시대의 전근대적 신문에 관한 연구: 朝報와 그 유사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참조.

(2) 김영희(2009), <한국사회의 미디어 출현과 수용: 1880~1980>,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4-25쪽.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조선정부는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당시 정부 주요 인물들은 영선사와 수신사로, 중국과 일본의 근대적인 문물을 시찰했다. 이들은 두 나라에서 근대적인 미디어인 신문이 다수 발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신문의 역할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신문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신문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 글은 근대 신문이 출현한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 시기까지 신문이 어떻게 출현하고, 당시 신문이 어떤 상황에서 발행되었는지, 그 사회적 역할을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개화기 근대신문의 출현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출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은 1883년 10월 출현한 〈한성순보〉이다. 근대적인 정부기구로 설립된 통리아문(지금의 외교부)의 산하기구 박문국에서 창간했다. 〈한성순보〉는 10일에 한번씩 발행한 책자형 신문으로 내국기사, 각국근사와 요즘의 물가정보인 시치탐보(市値探報)를 실었다. 내국기사는 관리의 임면사항을 다룬 관보가 주요 기사였고, 각국근사는 외국의 전쟁, 군비, 근대적인 문물과 제도 등을 소개한 기사들이었다. 〈한성순보〉는 순한문으로 3,000부 정도 발행되어 주로 양반독자들에게 보급되었다.⁽³⁾ 그러나 〈한성순보〉는 1884년 12월 갑신정변으로 〈한성순보〉를 발행하던 박문국의 화재로 발행이 중단되었다. 갑신정변이 나자 한성순보가 일본과 연결된 사람들이 발행한다고 오해하여 박문국을 불태웠기 때문이었다.

열흘에 한 번씩이지만 1년 넘게 발행되던 신문을 보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은 신문이 다시 발행되기를 바랐다. 1886년 1월 25일 〈한성주보〉 창간호의 ‘주보서’는 다음과 같이 창간경위를 설명했다.⁽⁴⁾

(3) 정진석(1990).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 95-97쪽.

(4) 〈한성주보〉 1886. 1. 25. 周報序(번역문).
http://libproxy.snu.ac.kr/3bbc32d/_Lib_Proxy_Url/snu.koreaa2z.com/viewer.php?seq=88#1842

갑신정변이 일어나 박문국이 철폐되고 순보가 간행되지 않게 되자 상하관민이 모두 말하기를 사람의 정은 보는 바에 따라 옮겨감이 참으로 심한 것이로다. 과거 순보가 창간되지 않았을 적에는 불편한 것을 모르고 지냈더니 순보가 간행되다가 중단되니 겨우 틈었던 이목이 다시 어두워지는 것 같다고 하며 모든 사람들이 간행을 바라고 폐간을 바라지 않았다. 상(上)께서는 이런 실정을 살피 아시고 통리아문에 명하시어 다시 박문국의 설치에 대한 가부를 의논케 하시니, 모두들 “다시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사회에 처음으로 등장한 신문을 읽으면서 그들의 이목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는 것은 사람들이 신문을 통해 그 이전 사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자극을 받아 가는 과정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하여 1886년 1월 <한성주보>가 창간되었다. 한성주보는 7일에 한 번씩 발행했고, 일부 국한문기사와 한글 기사도 실었다.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독자들이 신문을 구독료를 지불하고 본다는 의식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구독료가 제대로 걷히지 않아 경영이 어려워져 1888년 7월 <한성주보> 발행도 중단되었다. 이후 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과 잡지는 있었으나,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은 한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최초의 민간 신문 <독립신문>의 출현과 사회적 역할

그러다가 1896년 4월 7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 <독립신문>이 순 한글 전용으로 창간되었다.⁽⁵⁾ 조선시대 내내 한문사용에 익숙해있던 우리나라에서 한글만 사용하는 신문이 출현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갑신정변 때 미국으로 망명했던 서재필이 귀국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발행한 신문이었다.⁽⁶⁾ <독립신문>은 창간당시 4면을 격일로 주3회 발행했는데, <그림 1>과 같이 1면에 지금의 사설인 논설을 배치했고, 2면엔 관보, 외국통신(외신), 잡보(사회면), 3면 잡보, 선박 출발표, 우체시간표, 광고 등을 실었다.

(5) 1957년 조직된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독립신문> 창간 기념일인 4월 7일을 신문의 날로 정해 기념해오고 있다.

(6) 채백(2006). <독립신문 연구>. 서울: 한나래, 67-76쪽.

제4면은 영문판 The Independent 로 발행하다가, 1897년 1월 5일부터 영문판을 분리해 격일간 4면의 영자 신문을 따로 발행했다. <독립신문>은 1898년 7월 1일부터 일간으로 발행하다가 1899년 12월 4일 정부의 압력으로 폐간되었다.

개화 인사 서재필이 창간한 <독립신문>의 발행목적은 나라를 근대적으로 개혁하면서 자주 독립을 위해 국민을 계몽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독립신문>은 논설을 통해 외국의 발전된 제도를 소개하고, 과학, 의학, 교육, 위생, 생활습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회 각 분야의 새로운 제도와 문물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전했다. <독립신문>은 또한 <독립신문> 창간지후 개화운동을 위해 서재필이 설립을 주도한 시민사회단체 독립협회의 기관지 역할을 하면서, 독립협회가 추진하는 개화독립 운동을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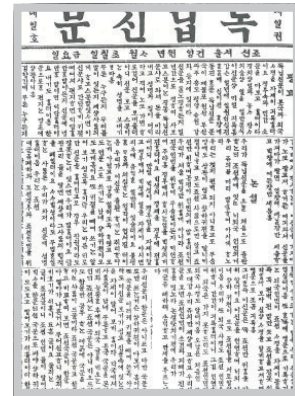


그림 1. <독립신문> 창간호
1896. 4. 7.

<독립신문>이 창간되던 무렵은 1894년 청일전쟁이후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열강과 일본의 영향력이 각축을 벌이며 나라의 이권을 쟁탈해 가던 혼란과 급변의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신문>의 보도를 통해 그 이전에는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공공적인 문제들을 알게 되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조정의 시책, 중앙과 지방 관리들의 잘한 일, 잘못된 일, 조선의 이권을 침탈하려는 열강의 행태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독립신문>의 등장은 이 시기 독자들에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왜 개화가 필요한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자각을 갖게 한 것이다. <독립신문>에서 공적인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보도와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신문이라는 매체를 매개로 한 공공영역(mediated public sphere)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⁷⁾

<독립신문>의 창간호는 2,000부가 발행되었는데, 바로 3,000부로 늘릴 만큼 독자들의 반응이 좋았다.⁽⁸⁾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신문이 없어서는 세상이 컴컴해야 견딜 수 없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⁹⁾ 독자들은 <독립신문> 발행이 “완고한 조선이 변하여 개명한 대한”으로 진보하는데 중요한 매개가 된다고 생각했다.⁽¹⁰⁾ 그리하여 지나는

(7) 김영희(2009), 앞의 책, 26-28쪽.

(8) The Independent, 1896. 4. 9.

(9) <독립신문>, 1898. 4. 12. 론설

(10) <독립신문>, 1899. 4. 17. 독립신문 생일.

신문팔이들이 한글로 쓰인 신문을 팔에 끼고 거리를 다니고 있는 풍경과 사람들이 가게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광경은 1897년 이래의 우리나라의 새로운 현상이었다.⁽¹¹⁾ 일반 국민들이 <독립신문>을 읽고 신문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신문 기사를 마치 지배자에 대해 소송하는 것 같이 알고 있었다. 신문을 읽은 다음에는 이웃 사람에게도 돌려서 한 장의 신문이 200명의 독자를 가지게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읽고,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었다는 기록도 있다.⁽¹²⁾

독립협회운동이 활발했던 1898년 1만 여명의 군중이 모인 대규모의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어 공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신문>이 지속적으로 독립협회운동을 보도함으로써 국민을 계몽하고 각성시킨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이전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개화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보수수구파들이 개화와 개혁을 주장하는 독립협회 운동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켰다. <독립신문> 발행도 사옥 반환 압력으로 1899년 12월 4일자를 발행하고 결국 중단되었다. 그러나 <독립신문> 출현이후 한국사회에 근대적인 신문제도가 정착하고 발전해갔다는 점에서 <독립신문> 창간과 발행의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개화기 신문의 계몽적 역할

<독립신문>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자, 이에 자극받아 독립협회 운동에 적극 참여하던 개화지식인들이 주도하여 1898년 새로운 민간 신문 <미일신문>, <태국신문>, <황성신문> 등이 창간되었다. 1899년 12월 <독립신문> 발행은 중단되었으나, 다른 신문들이 계속 발행하면서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도 신문 미디어가 하나의 사회 제도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일본의 침략정책이 노골적으로 전개되면서 이에 대항하며 형성된 민족주의적 의식이 곧 애국계몽사상이다. 애국계몽사상가들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실력양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사회 각 부문에서의 실력양성을 계몽하고 지도하는 애국계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그 대표적인 분야의 하나가 언론을

(11) Bishop, E. B.(1905). Korea and her Neighbours, 이인화 옮김(1994).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서울: 살림, 503쪽.

(12) Mckenzie, Frederick A.(1920). Korea's Fight for Freedom, 이광린 역(1969). <한국의 독립운동>. 서울: 일조각, 41-42쪽.

통한 계몽운동이었다. 국권상실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한국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국민 계몽이 매우 시급하다고 인식한 때문이었다.

민족진영의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데국신문>, <만세보>, <대한민보> 등 신문이 발행되어 애국계몽운동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과감한 논조와 비판의식으로 독자들의 호응이 높았던 <대한매일신보>는 1908년 1만부 이상을 발행하여 당시 신문가운데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아 그 파급효과가 매우 컸다.

개화기 신문과 신문독자의 개화

개화기 신문 독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힌 독자투고를 신문사에 보냈고, 각 신문은 이를 기서(寄書)라 하여 자주 게재했다. 다음의 기서는 일반민중이 신문에 접촉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이해해 간 과정을 잘 보여준다.

학산초부는 본디 향곡천봉으로 지식이 천단하고 문견이 고루하야(중략) 다만 날이 나면 농사짓고 날이 지면 쉬고(중략) 임군의 힘이 내게 무엇이 있으리오하고 세계상 형편과 나라의 성쇠를 모르더니 일전에 어떤 친구가 무슨 글 한 장을 가지고 와서 보기를 청하거늘(중략) 그 친구의 간곡한 성의를 저바리기 어려워서 강잉히 받아 가지고 일편을 낭독한즉 분한 일도 허다하고 추치도 많거니와 잡보에 한말과 논설의 유리함과 강개격렬한 말은 가히 사람으로 하야금 흥금이 쇠각하야 무슨 의사가 열일 듯도 하고 나태황집한 자로 하야금 경계함이 될 것이오 완약한 자로 하야금 회과천선을 개관이라 어시호 좋은 친구 하나를 맞났도다 하고 그 신문 갖다 주던 후의를 치하하고 날마다 보기를 청하야 날이 새면 신문 오기를 고대하더니...(13)

평생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이외의 일에 대해서는 거의 알 수 없었고, 알고고도 하지 않았던 한 농부가 매일 신문을 접하면서 자신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13) <데국신문>, 1903. 6. 23. 「학산초부의 기서」

하게 된 것이다. 개화기 신문은 또한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는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는 좋은 매개체였다. 불행히 여자로 태어났다고 하며 27세로 나이를 밝힌 한 독자는 “근년에 뜻있는 이들이 신문을 발행해서 세계이목을 밝게하며 세계형편을 목격하듯이 격절한 언론과 충애하는 마음이 어진 스승과 사랑하는 벗과 같은지”라고 하여 신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표현했다.⁽¹⁴⁾

이렇듯 신문을 읽으면서 보통사람들이 차츰 새로운 세계에 눈뜨게 되었던 것이다.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지식과 정보로 형성된 새로운 인식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여성독자들이 힘을 모아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 한 사례를 보면, <데국신문>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들은 <대한매일신보>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기문을 보냈다.⁽¹⁵⁾

우리 무리는 여인이라 암매한 지식을 밝히기 위하여 사회교육을 받고저하되 한문을 능통치 못함으로 국문으로 발간한 데국신문을 날마다 보기를 이천오백호에 달하였더니 불의에 붓대를 던지고 애독하시는 동포를 영벌하노라 하는 론설을 보매 데국신문이 정지되는 비황이 있는지라 이 신문은 본래 국문으로 처음 발간한 독립신문과 매일신문을 계속하여 발간한지 임의 십개년에 그 공효를 말할지면 일반보통 남녀사회의 이목을 밝히는 기관이 되어 얼마큼 개명진보가 되었고..

라고 하면서, “사정으로 말할지면 밝기를 기다려 날마다 보는 것이 일조에 없어지는 것은 심히 섭섭하고 공익으로 말할지면 일반 사회의 이목되는 기관이 없어지니 어찌 개탄치 아니리오”라고 했다. 따라서 <데국신문>이 발행을 중단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계속 발행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여자들 7명이 힘을 모아 돕기로 하였으니 다른 사람들도 지원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날마다 신문배달을 기다려 신문을 애독한 이 시기 여성독자들의 모습, 그들의 새로운 의식과 구체적인 행동으로의 실천은 신문이 이들에게 깊이있는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아와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14) <대한매일신보>, 1908. 3. 3. 기사

(15) <대한매일신보>, 1907. 9. 25. 잡보.

1908년 제물포에 사는 18세 기생 룡운도 신문을 처음으로 읽게 되어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깨달은 바 있어 이제 자신은 기생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공부하러 가겠다며 <대한매일신보>에 기사를 보냈다.⁽¹⁶⁾ 자신의 기사를 독자들도 부지런히 공부하여 개화, 개명하라고 권하는 내용이었다.

일제시기 언론인으로 활동한 소설가 이광수는 민족의식이 싹트던 청소년기에 자신이 받은 신문의 정신적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¹⁷⁾

우리는 배달을 기다리기가 급해서 신문사에 가서 직접 한 장씩 사오는 일이 많았다. 굶다란 사호 활자로 박은 모두 몇 마디 안 되는 신문이었으나,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 나라의 운명과 일어 전쟁의 전황과 세계 대세에 대한 목마름을 만족할 수가 있었다. 더구나 유근, 장지연, 박은식 등의 논설은 성경 현전과 같이 애독하였다. 신채호가 『대한매일신보』에서 날카로운 필진을 벌인 것은 그로부터 이삼년 후이었다.

이와 같이 개화기 대부분의 독자들은 신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신문으로부터 지식과 정보를 얻었고, 그렇게 접한 지식과 정보가 그들의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다. 개화기 신문이 그 이전의 한국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자아형성의 매개체로 등장한 것이다.

개화기 신문독자들은 또한 서로를 잘 모르면서도 신문 읽기를 통해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서 민족을 느끼면서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했다. 애국계몽기에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은 신문이 만든 공공영역에서 제시된 의제설정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전국민에게 파급된 대표적인 여론형성 사례였다.⁽¹⁸⁾ 국채보상운동은 개항이후 일본에서 도입된 차관이 점점 늘어나 1907년에 1300만원에 이르면서 엄청난 부담으로 정부가 더욱 일본에 의존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금연과 절약으로 국채를 상환하여 재정적으로 주권을 회복하고자 추진한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1907년 1월 29일 대구의 한 출판사였던 광문사가 주동이 되어

(16) <대한매일신보> 1908. 5. 22. 3. 기사 교육이 매일 급선무.

(17) <이광수전집> 7(1970). 나의 고백. 서울: 삼중당, 222쪽.

(18) 김영희(2009). 앞의 책, 30-31쪽.

경상남도 진주에서 1914년까지 <경남일보>가 발행되었으나, 그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억압받던 조선인들에게 3·1운동 이후 출현한 지하신문과 해외에서 조선인이 발행해 유입되던 신문들이 소통과 정보추구 욕구를 다소나마 충족시켜 주면서 항일독립의식을 고취시켰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합법적으로 신문을 발행하게 하여 3·1운동으로 폭발한 민중들의 독립 열기를 가라앉히고, 신문 내용을 통해 민심과 여론동향을 파악하고자 했다.⁽²⁰⁾ 조선총독부가 3개의 민간신문 발행을 허가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한 이유였다. 언론자유 허용이라기보다는 일제의 통치정책의 변화에 따른 언론정책의 전략적 변화였다.

그러나 일제는 주로 친일적이거나 타협적인 성향의 개인과 단체에게만 신문발행을 허가했다. 그렇게 해서 1920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신문> 이 창간되었다. 친일기업단체인 대정친목회가 창간한 <조선일보>는 1924년 신석우가 인수한 후 비타협적 민족주의계열의 성격을 보였다.⁽²¹⁾ 한편 호남 대지주집안의 김성수가 창간한 <동아일보>는 민족주의 우파 또는 민족개량주의적 성향을 나타냈다. <시사신문>은 친일단체인 국민협회의 민원식이 창간했다. 그러나 친일신문으로 일반 민중의 호응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민원식이 피살되면서 폐간되었다. <시사신문> 폐간 이후에도 일제에 호의적인 인사들에게 신문발행을 허가했다. 최남선에게 <시대일보> 발행을 허가했다가, 경영난으로 발행이 중단되면서, 이상협이 <중외신문>, 노정일이 <중앙일보>, 여운형의 <조선중앙일보> 등이 발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1920년대는 조선인 경영 신문들이 식민통치체제의 한계 안에서나 조선민족의 신문의 역할로서 어느 정도 충실했다. 조선인 경영 신문들이 독자들의 호응 속에 발행부수를 늘리며 활동이 활발해지자, 조선총독부는 1925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해 신문출판물을 단속했고, 1928년 치안유지법을 개정해 통제를 강화했다. 신문보도나 논평내용이 총독부당국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정간, 압수, 삭제 등의 방법으로 탄압한 것이다.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중일전쟁 이후 더욱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1930년대 신문들의 논조는 점차 위축되어 갔다. 총독부 당국자도 1929년 광주학생사건 이후 조선인 경영의 민간신문들이 총독정치에 순응하여 논조가 온건하게 변했다고 평가할 정도였다.⁽²²⁾

(20) 박용규(2015). <식민지 시기 언론과 언론인>. 서울: 소명출판, 19-23쪽.

(21) 박찬승(1991).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박찬승(2000). 일제 지배하 한국 민족주의의 형성과 분화.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5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참조.

(22) 김영희(2009). 앞의 책, 100쪽.

근대적인 신문이 처음 출현한 개화기의 신문독자들이 개화에 관심이 많았던 대체로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었던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일제시기에도 개화기 이래 민족계열 신문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던 전통이 여전히 이어졌다.⁽²⁵⁾ 특히 지방의 경우 “시골을 가서 보면 석유등잔에 흐미한 불빛 밑에서 동리사람이 모여 앉아서 신문장이 헤어지도록 돌려 가면 읽는 거기는 신문에 난 말이면 만고의 진리로 듣는 형편”이었다.⁽²⁶⁾ 물론 1920년대 후반부터 신문 보도의 여러 문제들이 잡지에 자주 지적되고, 특히 무책임한 상업성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것을 보면, 이 시기부터 점차 신문에 대한 객관적 인식도 형성되기 시작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31년 일본의 만주침략 이후 언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자 신문의 논조는 일제의 지배정책에 순응하여 온건해졌다. 1937년 일제의 황민화정책과 민족말살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더욱 적극적인 친일논조를 띄게 되었다. 이미 현실타협적인 성향을 형성하기 시작했던 신문독자들은 이러한 논조의 신문에 장기적으로 접촉하면서 점차 일제의 지배질서와 식민지 현실에 적응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인 경영의 민간신문을 더 많이 읽었지만, 또한 최신의 정보와 동향을 파악하려는 현실적인 필요와 이해에 의해 총독부 기관지, 국내에서 발행되었던 일본어신문 및 일본에서 들어오는 일본어신문의 구독이 점차 증가했다.⁽²⁷⁾ 그런데 총독부 기관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신문들은 모두 철저하게 일제의 시각과 이해관계에 의해 제작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들 신문들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자부심으로 식민지 조선을 모든 면에서 무시했다.⁽²⁸⁾ 이런 신문들에 접촉하면서 당시의 사회기득권층이었던 신문독자들이 거부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일상의 삶을 유지하고, 출세와 성공을 위해 일제에 대한 타협과 적극적인 친일인식을 지녀야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25) 두선생(1923), 신문당국자에 경고하는 일언, <개벽> 제37호, 62-66쪽; 이돈화(1935), 조선신문의 특수성과 그 공과, <개벽> 2월호, 28-31쪽.

(26) 무명거사(1931), 조선신문계종횡단, <동광> 제28호, 76-80쪽.

(27) 김영희(2009), 앞의 책, 100-104쪽.

(28) 강동진(1980),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서울: 한길사, 41-49쪽.

일제강점기 시기 조선인 경영 신문의 역할 평가

1930년대 이후 식민지 사회와 언론현실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 바로 이 시기 조선인 경영 신문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해 두 가지 사례를 주목해 보기로 한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

먼저 식민지시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1929년에 시작해 1934년까지 전개한 문자보급을 중심으로 한 농촌계몽운동 사례이다.⁽²⁹⁾

일제강점기 시기는 1920년대에 보통학교 설치가 점차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의무교육이 시행되지 않아 대부분의 국민은 여전히 문맹상태였다. 1930년도 2천4백4십만명 인구가운데 1천5백9십만명이 문맹자로 문맹율이 77.7%였다. 두 신문이 문자보급운동을 추진한 것은 이런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는 표어를 앞세운 <조선일보>는 「한글원본」을, 브나로드운동으로 부른 <동아일보>는 「한글공부」와 「산수교재(일용계수법)」를 만들어 여름방학을 맞아 귀향하는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이들이 고향의 문맹자들을 가르치도록 한 것이다. 두 신문은 문자보급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사업의 성과를 적극 보도했다. <동아일보>의 문자보급운동에는 4년 동안 5,751명의 계몽대원이 참가해 전국 1,320개 지역에서 97,598명에대해 강습을 실시했다.⁽³⁰⁾ 배급된 교재는 210만부였다. <조선일보>는 문자보급운동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더욱 환기하기 위해 한글기념가와 문자보급가를 현상 공모해 당선작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림 3>은 그 당선작이었다. 그러나 이 운동이 큰 호응 속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조선총독부는 1935년부터 신문사가 주관하는 문자강습회를 금지시켰다. 한글맞춤법통일안 사용 보급을 명분으로 문맹을 퇴치하여 조선인의 역량을 키우려는 민족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한 때문이었다.



그림 2. 브나로드운동 포스터와 주민들 (동아일보) 1932.7.9. 3.

(29) 김영희(2013). 계몽과 홍보에서 수익창출과 문화권력으로: 한국 신문 문화사업의 전개. 박용규·김영희·윤상길 외. <한국 신문의 사회문화사>, 한국언론진흥재단, 227-228쪽.

(30) 정진석편(1999). <문자보급운동교재 조선일보·동아일보 1929~1935>, 서울 LG상남언론재단, 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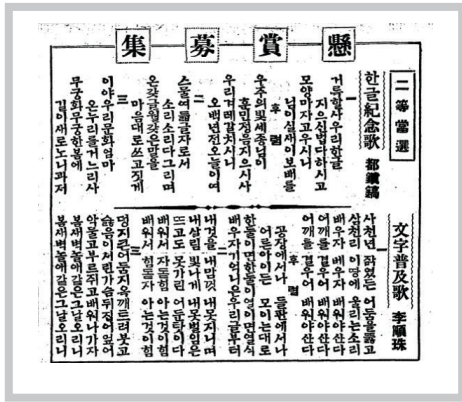


그림 3. 현상공모에 당선된 한글기념가와 문자보급가
(조선일보) 1931. 1. 14. 1

물론 이런 성과를 대단한 것으로 설명한다면 과대평가일 것이다.⁽³¹⁾ 1930년 문맹인구가 1,590만명이므로, 최대 20여만 명에게 문자를 보급했다고 해도 문맹률은 1.26% 감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운동에 1만 4천여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실제 전국 많은 지역에서 문자보급 강의가 실시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자보급운동 실시가 금지되거나 중지된 지역이 적지 않았다고 해도 문자보급운동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이때 중학생이었던 장준하는 3년 동안 브나로드운동의 학생계몽대로 활동했다. 이 활동으로 갖게 된 신문에 대한 인식을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³²⁾

이때부터 나는 신문을 높게 보게 되었으며 인연 깊은 나의 지도자적인 대상으로, 아니 당시 우리 온 겨레를 지도하고 있는 존재로 아주 믿어 버리게 되었다. 실로 이 무렵 나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는 비극의 나라였으며 칠흑장막과 같은 절망의 나라였었다. 이때에 모든 청년들은 거개가 이와 같은 비극과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해 버리거나 아니면 겨우 일제에 붙어 호구책으로 입신출세의 길을 노리거나 하는 것뿐 아무런 희망과 장래의 징조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오직 동아와 조선이 있었던 것이다. 이 두 신문만이 캄캄한 우리 조국을 비춰 주던 유일한 등불이었으며 희망이었다. 최소한 그때 나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장준하가 1950년대의 대표적인 잡지 <사상계>를 발행한 것은 일제강점기 시기 조선인 경영의 두 신문의 사회적 역할을 인상 깊게 경험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³³⁾ 식민지라는

(31) 김현경(2008), 민중에 대한 빛: 브나로드 운동의 재조명, <언론과 사회> 16권 3호, 88쪽.

(32) 장준하(1963), 一市民이 읽은 30년간의 신문, 고재욱선생화갑기념논총편찬위원회 편, <민족과 자유와 언론>, 서울: 일조각, 355-356쪽.

(33) 김영희(2012), 장준하의 언론사상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제59호, 68쪽.

그랬다. 조선이 전 세계를 이겼다. 조선 반도 전체가 약 한달 간 뜨거운 열풍에 휩싸였다. 유난히 비가 많이 왔던 그해 여름 조선 사람들은 수해 속에서도 노인부터 코흘리개까지 모두 '손기정'을 입에 달고 다녔다. 시상대 위에서 월계관을 쓴 머리를 숙인 채 일본 국가를 들으며 묵묵히 서 있던 손기정의 모습은 1930년대 조선 민족의 표상이 되었다.

손기정이라는 영웅의 탄생과 신드롬의 확산에 신문보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선사회에 마라톤은 민족을 하나로 묶으며 민족주의적 의식을 크게 고취시켰다. 신문이라는 미디어를 매개로 한 한국 사회의 스포츠민족주의의 본격 출현이었다.

그런데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손기정의 올림픽 마라톤대회 우승 소식을 보도하면서 일장기를 삭제해 보도했다.⁽³⁶⁾ <동아일보> 일장기말소사건은 <동아일보>의 이길용 기자가 손기정선수 가슴에 단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한 사건이다. 이후 마라톤은 한국 민족의 독립정신을 일깨우고, 민족적 자부심을 형성시킨 항일 민족정신의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³⁷⁾

<동아일보>는 이 사건으로 8월 29일부터 무기정간 처분을 받았다. 무기정간은 총독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10개월이 지난 1937년 6월 2일에야 해제되어 6월 3일 복간할 수 있었다. 근신의 의미로 자진 휴간계를 내었던 <조선중앙일보>는 결국 복간하지 못하고 폐간되었다.

이상의 사례들이 말해주듯 일본의 식민치하라는 상황에서도 당시 조선인 경영의 신문들은 보도와 논평이라는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했다. 또한 각 분야의 새로운 동향과 관련 정보를 전달하면서 교육, 광고기능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 1930년대 후반에도 친일적 논조의 한계에서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공적인 매개체라는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측면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논조의 차이가 별로 없었음에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굳이 폐간한 것은 전쟁기간 물자절약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조선인 경영신문들에게 그와 같은 제한된 역할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조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6) 채 백(2008). <사라진 일장기의 진실: 일제 강점기 일장기 말소 사건 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01-112쪽.

(37) 박종진·김동규(2012). 한국 마라톤의 전개와 민족사적 의의. <한국체육철학회지> 20권 3호, 186-187쪽.

4. 맺음말

이상에서 개화기 근대신문의 출현에서 일제강점기 시기까지 한국 언론의 역사를 언론정책,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독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앞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언론의 역사에서 나타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의 의미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 글은 특히 신문들의 사회적 역할을 평가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바라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사회에 근대적인 신문은 1876년 개항이후 나라를 근대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시급한 시대적 과제로 인식한 개화 인사들이 국민을 개화, 계몽하는 교육수단으로 신문을 창간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는 정기적으로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가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출현한 것으로 그 의의가 있었다. 그 후 순 한글신문 <독립신문>의 창간으로 한국 사회에 공적인 사회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하는 공공영역이 본격적으로 출현했다. <독립신문>의 창간과 발행은 신문이라는 근대적인 사회제도를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독립신문> 발행에 자극받아 출현한 개화기 신문들 역시 개화, 독립을 위해 독자를 계몽하고, 독자들이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게 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1910년 나라가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된 이후, 대부분이 신문이 폐간되었다. 1920년에야 조선인의 신문발행이 허가되어 식민지 시기 조선인 경영 신문들은 일본의 식민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필요에 의해 출현했고, 그런 한계와 조건 아래에서 운영되었다. 1920년대는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언론통제 아래에서나마 조선인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1930년대 식민지 현실이 장기화하면서 조선독립의 희망과 기대가 희미해지고, 중일전쟁이후 언론에 대한 탄압과 통제가 강화되면서 조선인 경영 신문의 논조가 많이 약화되어 갔다. 합법적인 공간에서 최소한의 민족적인 활동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신문의 논조가 변화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³⁸⁾ 조선인 경영 신문들은 1937년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친일적인 논조를 보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조선인 신문이라는 상징성이 부담되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결국 폐간시켰다.

(38) 박용규(2015). 앞의 책, 98-99쪽.

이렇게 친일논조에 적극적으로 되어 가던 1930년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문자보급운동으로 문맹퇴치에 앞장섰다. 또한 1936년 손기정 선수의 마라톤 우승 보도는 보도 그 자체만으로 조선인의 긍지를 일깨우면서 민족주의를 확산시킨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식민지 현실의 한계에서도 조선인을 위한 신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 시기 신문 평가에서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을 함께 논의해야 할 이유이다.

8·15에서 5·16까지의 신문: 정론지에서 대중지로의 과도기

박용규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03

1. 들어가는 말

한국 사회구조의 기본적 틀이 형성된 역사적 계기로서 1945년의 8·15 광복과 1961년의 5·16 군사정변을 들 수 있다. 8·15가 일제강점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동시에 분단체제가 형성되는 출발점이었다면, 5·16은 권위주의 체제 속에 경제성장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8·15부터 5·16까지의 16년은 식민지에서 벗어난 한국 사회가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과도기였다고 볼 수도 있다.

언론사적으로도 8·15부터 5·16까지의 16년의 세월은 식민지시기의 특성이 사라져가며 새로운 성격의 언론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과도기였다. 일제강점기의 언론이 식민지 현실에 저항하는 정론지(政論紙)적 역할을 요구받았고, 이런 언론의 특성이 8·15 이후에도 한 동안 계속되다가 1950년대 중반 이후 서서히 변화되어 나갔다. 정론지적 특성이 정파지라는 형식으로 다소 변화되어 지속되던 가운데 대중지적 요소도 부분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 신문의 특성이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의 신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16년의 기간을 크게 미군정기, 이승만정권 시기, 민주당정부 시기 등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각 시기마다 신문의 성격이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신문의 소유와 경영, 언론정책과 언론법제, 논조와 독자의 반응 등으로 나누어 정리할 것이다.

2. 미군정기의 신문

1) 쏟아져 나온 신문과 열악한 경영상태

해방 직후 억눌렸던 정치적 욕구가 터져 나오면서 수많은 신문들이 발행되었다. 1940년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된 이후 해방 직전까지 한국어 신문으로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하나만이 발행되었지만, 해방 직후 서울에서만 수십 개의 신문이 창간되었다. 특히 다양한 정치·사회세력들이 등장하고 이들이 각종 언론매체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주의·주장을 펼쳐나가면서 소위 정론지(政論紙) 시대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 인쇄시설이나 용지 등의 제작여건이나 문자해독인구 및 산업발전 수준 등의 기본적인 조건은 매우 불충분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념적 색채가 명확했던 이 시기 대부분의 신문들은 경제적으로는 제대로 존속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결국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대부분의 신문들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했다가보다는 일종의 정치활동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상우는 “일제하에서 싹트기 시작한 신문의 상업성은 이데올로기의 혼란 속에서 질식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¹⁾

이 시기 신문들은 대부분 좌우의 정치세력과 직접,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념적 대립이 첨예하던 상황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신문을 소유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런 정치세력을 지지하여 후광을 업고자 했던 자본가에 의해 흡수, 발행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열악한 조건에서 신문을 발행하며 자본을 끌어들이 수 있는 영향력있는 정치인을 경영진으로 영입했던 경향도 신문의 정론지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거물사장주의’라는 비판까지 나왔다.⁽²⁾ 이에 따라 이 시기 거의 모든 신문의 사장이나 고문이 주요 정치인들이었다.

이렇듯 미군정기 신문들의 대부분은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신문을 발행하였다. 특히 주요 정치세력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던 소수의 신문들을 제외한 나머지 신문들은 대부분 신문의 정상적인 발행에 필요한 자본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신문을

(1) 이상우, <한국 신문의 내막>, 삼성사, 1969, 17쪽.

(2) 한경수, 한국 신문계의 동태: 1946년 회고, <백제>, 1947년 1월호, 33쪽.

발행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부터 발행되었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들의 경우 자본금을 모을 수 있는 기업형태를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다. 따라서 극소수의 신문만이 특정 정치세력이 전폭적인 지원 속에 신문운영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듯 이 시기 신문들은 자본금이 영세했을 뿐만 아니라 판매와 광고수입을 확보하기도 대단히 어려웠다.⁽³⁾ 특히 문자해독인구의 부족과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구매력의 부족 때문에 신문의 발행부수는 대부분 2-3만부에 불과했고 산업의 발달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광고수입의 확대도 거의 불가능했다. 당시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으로서 자료가 남아 있는 <동아일보>와 <서울신문>의 경우에도 적자를 보거나 겨우 면할 정도였다. 특히 한민당의 사실상의 기관지였던 <동아일보>나 <매일신보>를 개제했던 <서울신문>이 다른 신문에 비해 자본금 규모도 컸고 발행부수도 비교적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두 신문보다 열악한 상황에 있던 신문들의 경영 상태는 더욱 나빴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시기 신문들은 빈약한 자본과 열악한 경영 상태에도 불구하고, 주로 좌우익 정치세력의 수단으로서 발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미군정의 언론통제와 언론구조의 형성

미군정은 진주 직후 언론자유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많은 신문들이 창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의 언론정책은 점령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라는 한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었다. 박권상은 미군정 언론정책의 기본성격은 미군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하며, “엄연한 현실은 미군은 해방군이면서 동시에 점령군이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는 때로는 일치되는 개념이지만 때로는 겹쳐지지 않는 분리되는 개념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반되는 개념일 수 있다. 그것은 언론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주장했다.⁽⁴⁾

즉 진주 직후 미군정이 ‘정당한 의미의 치안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언론자유를

(3) 박용규, 미군정기 한국 언론구조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59-60쪽.

(4) 박권상, 미군정하의 한국 언론에 관한 연구(상), <신문과 방송>, 1987년 10월호, 65쪽.

허용하겠다고 밝혔던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⁵⁾ 미군정 초기의 언론정책은 일제강점기에 비해서는 비교적 언론자유를 허용하는 편이었지만, 후기로 갈수록 통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미군정 점령정책의 목표가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으로 귀착되면서 언론통제도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미군정은 점령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세력들의 언론활동은 지원하는 언론정책을 실시하기도 했다.

1945년 9월 7일에 공포된 맥아더 포고 2호는 연합군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미국인 또는 연합군을 해하는 자는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렇듯 추상적인 범죄규정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던 맥아더 포고 2호는 미군정 언론통제의 기본방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박용상은 맥아더 포고 2호가 미군의 점령정책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⁶⁾ 맥아더 포고 2호의 이러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은 결국 각 시기의 상황에 따라 좌익은 물론 우익 언론까지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미군정이 1945년 10월 공포한 법령 19호는 등록제를 통해 언론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언론통제의 ‘준비작업’이었다.⁽⁷⁾ 미군정은 1946년 5월 허가제를 규정한 법령 88호를 공포했고, 1947년 3월 정기간행물의 신규허가 금지는 물론 기존 정기간행물도 일정기간 발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가를 취소한다는 공보부령 1호를 공포했다. 이러한 법령들은 점령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장애가 되는 언론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목적으로 한 것들이었다.

미군정은 1946년 8월 전남의 3개 신문을 폐간 또는 무기 정간시키고, 9월에는 서울에서 발행되던 주요 좌익신문 3개를 발행 정지시키고 9명의 언론인을 구속하는 강력한 언론탄압을 시행했다. 이후 미군정은 좌익신문들의 활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여, 1947년 8월에 대한제국시기의 광무신문지법까지 사용하여 좌익언론인을 구속하기도 했다.⁽⁸⁾ 경무부장이었던 조병옥이 1947년 8월에 “남조선을 파괴하려는 행동을 선동하는 보도에

(5) <매일신보>, 1945. 9. 12.

(6) 박용상, <한국의 언론법사-미군정시의 언론규제>, <관훈연구>, 24권 1호, 1987, 167-168쪽.

(7) 송건호, <한국 현대 언론사>, 삼민사, 1990, 31쪽.

(8) 뽕원순, <메스 커뮤니케이션 법제이론>, 법문사, 1984, 40쪽.

대해서 발본적 처단이 내릴 때가 올 것이다“라고 단언한 데에서도 드러나듯이⁽⁹⁾ 점차로 단독정부수립에 방해되는 언론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한편 미군정은 점령 직후부터 적산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우익세력이 신문을 발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즉 총독부 기관지들이었던 <매일신보>나 <경성일보>의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성일보> 등 주요 우익신문들이 발행될 수 있었다. 또한 대한독립촉성중앙협의회 선전부장이었던 이종영도 적산이었던 선광인쇄소를 이용해 극우지 <대동신문>을 발행했다. 이외에도 미군정은 폐간된 좌익신문의 인쇄시설을 접수하여 우익이 다시 신문을 발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이렇듯 주요 우익계 신문들이 대부분 미군정이 접수했던 적산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신문발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효율적인 점령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좌익에 비해 열세에 있었던 우익신문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미군정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듯 미군정이 적산 인쇄시설의 이용과 불하라는 지원과 특혜를 선별적으로 일부 우익신문에게 제공했던 것은 결국 단독정부수립이라는 목표의 달성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다.

3) 이념적 대립에 따른 논조와 독자들의 반응

이념적 대립 양상을 반영한 이 시기 신문들의 정론지적 성격은 신문의 논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 신문들의 이념적 대립은 단순히 사실 등을 통한 대립뿐만 아니라 사실보도에 있어서도 자파에게 유리한 보도만을 일삼아 허위, 왜곡보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홍종인은 4-5개의 신문을 보아야만 비로소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보도에 있어서조차 신문마다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고 비판했다.⁽¹⁰⁾ 당시 신문들 사이에 치열한 논전이 전개되면서 정치적 주장을 담은 사실은 물론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명서나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기사 또는 특정 세력을 비방하는 기사들이 타블로이드판 2면의 좁은 지면을 거의 메울 정도였다.

중요한 정치적 계기를 둘러싸고 벌어진 신문들 사이의 치열한 논전은 단순히 좌우익이라는

(9) <조선일보>, 1947. 8. 10.

(10) 홍종인, 정계와 언론과 정당, <신천지>, 1946년 6월호, 19쪽.

이념적 대립에 의해서만 촉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1945년 말의 ‘신탁통치’ 보도를 계기로 좌우의 신문의 첨예한 대립이 나타났고, 지면을 통한 대립이 때로는 좌우의 세력의 상대 진영 신문에 대한 물리적 공격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1948년에 단독정부 수립을 앞두고는 이를 지지하는 우익신문들과 이에 반대하는 나머지 신문들이 대립하기도 했다.⁽¹¹⁾ 중요한 계기마다 신문들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활동을 했던 것은 기자들이 스스로 특정 정치세력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듯 생각했던 풍토와도 관련이 있다.⁽¹²⁾ 이런 상황에서 기자들의 조직과 활동도 이념적 대립을 반영하고 있었다. 즉 1945년 10월에 일부 우익신문과 좌익계 신문의 기자들이 주도했던 조선신문기자회가 결성되었고 1947년 8월에는 우익계 기자들이 주도한 조선신문기자협회가 결성되어 대립되기도 했다.⁽¹³⁾

미군정기의 신문들을 통해 드러났던 다양한 주장들은 일반 민중들에게 내재되었던 욕구들이 표출된 것으로서 여론의 동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1940년 폐간되기 직전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발행부수를 합쳐서 대략 12만부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1946년 10월에 전체적으로 백만 부의 신문이 발행될 수 있었다는 것은⁽¹⁴⁾ 잠재되어 있던 독자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일제말기 신문들의 논조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던 많은 독자들이 해방과 함께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들을 찾기 시작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시 독자들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신문을 선택하면서도 신문들의 이념적 대립에 대해서는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대개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반대되는 신문에 대한 비난이었지만, 때로는 이념적 대립 속에 사실보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언론계 전체를 겨냥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¹⁵⁾ 이 시기의 독자들은 아직 일부 지식인층으로 제한되어 있었을 텐데, 이들은 비록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에 맞는 신문을 선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신문들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정치적 주의, 주장을 앞세우는 신문들의 정론성(政論性)을 인정하면서도 사실보도에 대한 충실함을 요구했던 것이다.

(11) 문종대, 미군정기 신문의 이데올로기 구조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12) 우승규, 조선 신문계 전망. <백민>, 1947년 4·5월호, 24쪽.

(13) 박용규, 미군정기 언론인 단체들의 특성과 활동.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2007, 135-162쪽.

(14) 김영희, <한국 사회의 미디어 출현과 수용: 1880-1980>,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158쪽.

(15) 채 백, 계몽의 대상에서 행동하는 독자까지, <한국 신문의 사회문화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3, 41-42쪽.

3. 이승만정권 시기의 신문

1) 시장의 미성숙과 영세한 신문산업

정부수립 직후 신문사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보수 세력의 분열과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점차로 이승만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이른바 ‘체제내적 반대지’가 등장하게 되었다.⁽¹⁶⁾ 특히 매우 열악한 시장조건 속에서 신문들이 정부나 특정 정치세력의 지원에 의존하여 신문을 발행해야만 할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문들은 정치세력과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논조가 결정되어 이른바 ‘야당지’와 ‘여당지’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신상초는 “대중성을 표방하는” 일간지가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론(政論)을 내세우는 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풍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¹⁷⁾ 그러나 당시에는 정치적 비판을 위주로 하는 정론성(政論性)에 대한 독자들의 선호가 여전히 높았기 때문에 야당지들의 정론성은 곧 대중성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민주당이 결성되기 전인 1955년 초까지 <서울신문>은 정부의 기관지이고 <동아일보>는 민국당의 기관지라는 평가를 받았다.⁽¹⁸⁾ 1955년 9월에 민주당이 결성된 이후 민국당 기관지 소리를 듣던 <동아일보>와 가톨릭에서 발행했던 <경향신문>은 이제 민주당 구파와 신파를 대변하는 이른바 야당지라는 평가를 받으며 이승만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다. 한편 이승만 정권의 원조자금 특혜 배정이나 특별 은행융자로 자본축적을 해나갔던 기업이나 자유당 관련 인물들에 의해 발행되는 이른바 여당지들도 등장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특정 정치세력과 무관하며 그렇다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었던 중립지들도 있었다.⁽¹⁹⁾ 이와 같은 소유구조 때문에 당시 신문의 병폐를 하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배경으로 하는 정략적인 신문”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체나 실업가를 배경으로 하는 상업방패적인 신문”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²⁰⁾

(16) 송건호, 앞의 책, 83쪽.

(17) 신상초, 한국 신문계의 후진성, <새벽>, 1955년 1월호, 117쪽.

(18) 최 준, 신문정비의 방법론, <새벽> 1955년 1월호, 123-124쪽.

(19) 최영석, 1950년대 한국 신문의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54-55쪽.

(20) 최홍조, 신문은 독자에게 친절한가?, <신태양>, 1956년 3월호, 54쪽.

당시 신문 산업에 나타난 가장 커다란 특징은 경제적 조건이 신문 산업의 성장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대단히 취약했다는 점이다.⁽²¹⁾ 문자해독인구나 경제적 빈곤으로 판매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또한 전쟁으로 인해 산업 기반시설이 파괴되었고 전후 원조경제에 의존하는 경제발전과정에서 제조업의 성장이 매우 미약했다는 것은 광고시장의 확대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했던 것이다. 발행부수가 많았던 <동아일보>의 광고수입이 20%를 크게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 대부분의 신문들은 주로 구독료에 의존하는 생존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인쇄용지나 인쇄시설 확보에 소용되는 생산비 부담이 매우 컸다는 요인도 신문 산업의 성장을 어렵게 만들었다.⁽²²⁾

정부수립 직후부터 전쟁이 끝난 1953년까지는 대부분의 신문이 자본금의 규모도 작았고 경영상태도 거의 적자였다. 신문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던 1954년부터 자본금과 순이익은 다소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신문 전체적으로는 자본금의 규모가 제조업보다 작았고 매출액 이익률도 제조업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²³⁾ 따라서 1950년대 중반에 신문경영만으로 '독립채산'을 해나가는 신문이 전국적으로 불과 3-4개에 불과하다고 지적될 정도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컸다.⁽²⁴⁾

이러한 상황에서 1954년 6월에 한국 최초로 상업주의를 표방했던 <한국일보>가 창간되면서 상업주의적인 경영전략이 도입되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광고유치와 독자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경영전략은 물론 다양한 문화사업을 본격화하여 다른 신문들이 이를 뒤따르게 만들었다. 상업주의적인 경향의 등장은 구독료 수입증대를 위해 신문들의 증면경쟁으로 이어져, 주요 중앙일간지들은 1954년에 1일 2면(주14면)발행에 주 1회 4면 발행, 1955년부터는 1일 4면(주28면) 발행, 1956년부터는 1일 조석간 6면(주42면), 1958년 12월부터 조석간 4면씩 1일 8면(주56면) 발행을 하게 되었다. 증면과 함께 구독료도 인상돼 1954년에 200환이던 것이 1959년에는 600환으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협소한 판매시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자본과 광고 및 판매시장의 협소함 때문에 경영면에서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했다.

(21) 장용호, 한국 신문 산업의 구조변동, <한국 사회변동과 언론>, 소화출판사, 1995, 18쪽.

(22) 광복산, 한국 신문의 구조적 과제, <사상계>, 1959년 2월호, 108쪽.

(23) 최영석, 앞의 글, 31-34쪽, 47-48쪽.

(24) 신상초, 앞의 글, 117쪽.

2) 정치적·법적 통제의 강화

이승만 정권은 1948년 9월 언론정책 7개항을 발표하여 강력한 언론통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²⁵⁾ 특히 이승만 정권은 정부에 대한 비판조차 반공에 위배되는 것으로 몰아가려는 강력한 언론통제를 실시하려고 했다. 이것은 정부에 대한 신문의 비판에 대해 이승만이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써대니 그것은 공산당 방식이야”라는 견해를 피력했던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²⁶⁾

정부수립 직후 이승만 정권은 주로 잔존해 있던 진보적 성향의 신문에 대한 통제에 주력했다. 이승만 정권은 효율적 언론탄압을 위해 1948년 12월 새로운 ‘신문지법’ 제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에 따라 언론탄압을 위해 불가피하게 광무신문지법을 이용했다.⁽²⁷⁾ 그러나 1952년 3월 국회가 광무신문지법의 폐지를 결의하자 이승만 정권은 1952년 ‘출판물 법안’, 1954년 ‘출판물에 관한 임시단속법안’, 1956년 ‘국정보호임시조치법안’ 등을 제정하려다 실패했고, 이후 협상선거법안, 국가보안법등 언론탄압 조항을 삽입한 법령의 국회통과를 강행하기도 했다.⁽²⁸⁾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정권은 미군정 법령 88호나 공보부령 1호 등 과거의 악법들을 동원하여 신문에 대한 정간, 폐간 조치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1954년 이후 11개의 신문이 정간이나 폐간 조치를 당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 4개는 정치적 사유로 정간이나 폐간을 당했다.⁽²⁹⁾ 이승만 정권은 신문 난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언론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³⁰⁾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체계적으로 언론사 정비 또는 통폐합을 시도하지는 못했다. 특히 1955년의 <동아일보> 무기정간처분이나 1959년의 <경향신문> 폐간처분은 모두 미군정 법령 88호를 적용한 것으로 이른바 야당지에 대해 강력한 탄압을 가했던 것이다.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1954년에 장기집권을 위해 무리하게 ‘사사오입개헌’을 한 이후 비판적 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1960년의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정과 장기집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억누르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25) 송건호, 앞의 책, 78-79쪽.

(26) <경향신문>, 1956. 9. 18.

(27) 정진석, <한국 현대 언론사론>, 전예원, 1985, 257-261쪽.

(28) 이강수, 1963, 13-14쪽.

(29)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연감>, 1968, 592쪽.

(30) 최 준, 앞의 글, 121-124쪽.

있다.⁽³¹⁾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은 언론인에 대한 각종의 제재조치나 신문사에 대한 테러 및 신문배포방해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언론탄압을 자행하였다.

한편 이승만 정권은 모든 신문들이 인쇄용지나 운전기의 구입을 위해서 반드시 원조자금의 지원을 필요로 했던 상황에서, 원조자금 관리라는 절대적 권한을 이용하여 언론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특히 이승만 정권은 여당지라고 알려졌던 신문들에 대해서 원조자금을 특혜 배정하여 신문기업이나 또는 관련 기업의 자본축적을 도왔고 경제적 특혜로서 관련기업에 은행용자를 알선해주기도 했다.⁽³²⁾ 실제로 1958년 현재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원조자금의 경우, 연합신문사 사장이었던 김성곤의 금성방직은 25억 6천 4백만 환이었고 <자유신문> 사장 백남일의 태창방직은 39억 6천만 환이었다.⁽³³⁾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원조자금 특혜배정이나 은행특별용자 등은 비판적인 성향의 신문을 순차시키는데 이용되지는 못했고, 단지 여당지라고 하는 신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종의 포상의 성격을 지닌 것에 불과했다. 다만 이 시기에도 “모일간지는 용자교섭을 순조롭게 추진시키기 위해 편집진용을 교체시켰다가 용자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보고 다시 날카로운 논조로 돌아감으로써 독자들을 당혹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받는 일도 있었다.⁽³⁴⁾ 이것을 보면 이른바 여당지로 알려진 신문들 이외에도 정부에 의한 특별 용자를 얻기 위해 노력한 신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정파성의 존속과 독자들의 반응

이 시기 신문들이 이른바 여당지와 야당지로 대립하여 정파성을 드러냈던 것은, 영세했던 당시 주요 신문들이 특정 정치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발행되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판매수입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신문들에게는 정론성이 곧 독자들에게 영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기 때문이다.⁽³⁵⁾ 따라서 당시 신문들의 정론지적 성격은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신문판매를 위한 전략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 시기 신문들은

(31) 이관구, 노기자사는 살아 있다. <새벽>, 1960년 1월호, 139쪽.

(32) 오소백, 신문계의 반역아. <신태양>, 1958년 8월호, 108-109쪽.

(33) 최영석, 앞의 글, 55쪽.

(34) 박동운, 신문의 생태. <새벽>, 1960년 4월호, 56쪽.

(35) 이상우, 전환기 한국 신문의 내막. <신문평론> 1968년 겨울호, 80쪽.

이른바 여당지와 야당지로 대립되어 일관되게 대립적 논조를 보였다. 특히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고 여당지들은 지지의 논조를 보였던 반면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다소 유동적 논조를 보였다.

이렇듯 신문들이 정파성을 보이면서 신문지면에서 정치기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5·16 직후 최고회의 공보담당 위원이었던 강상욱은 기존의 신문들이 “지나치게 정치기사가 많아 국민의 정치의식이 과도히 민감하게 되었으며, 지면에 정서가 부족하고, 종업원이 흑사당하며, 따라서 신문이 재미없게 되어 독자가 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³⁶⁾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가 연예·오락·스포츠 기사의 확대 등을 시도하면서 다른 신문들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상업주의적인 논조의 등장이 기존 신문의 정파적 성격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좁은 판매시장에서 독자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파적 기사와 함께 상업주의적 기사들도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1950년대에 기자들의 임금수준은 여전히 매우 낮았고 여러 신문사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신분보장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³⁷⁾ 이렇듯 열악한 조건 속에서 기자들의 저항적 기질이 강조되었던 것은 직업적 권익쟁취를 위한 기자들의 투쟁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열악한 직업환경은 촌지수수라는 부패한 직업적 관행을 정착시키기도 했다.⁽³⁸⁾ 정파지적 경향이 강했던 당시 언론계의 풍토에서 기자들은 직업적 권익쟁취보다 정권의 언론탄압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조직적인 차원의 대응을 보이지는 못했다. 특히 대부분의 기자들은 자신이 소속된 신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활동하는 양상을 보였을 뿐이다.

이승만정권의 통제 속에 전체적으로 신문들이 보수적인 논조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독자들은 대체로 정부 비판적인 야당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흥분과 불만의 교차에서 신문의 그런 방향을 즐기는 대중의 심리” 탓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던 것처럼⁽³⁹⁾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야당지에 대한 상대적 선호로 나타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승만정권은 야당지에 대한 구독 중단을 강요하는 등 야당지 독자를 탄압하기도

(36) 조선일보사사편찬위원회, <조선일보 70년사>, 조선일보사, 1990, 279쪽.

(37) 이강수 외, 한국 신문인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조사, <신문연구소학보>, 1집, 1964, 39쪽.

(38) 오소백, 신문계의 반역아, <신태양>, 1958년 8월호, 112-116쪽

(39) 한경수, 도하 신문을 채점한다, <신태양>, 1956년 3월호, 62-63쪽.

했지만 이런 시도는 역효과를 낼 뿐이었다.⁽⁴⁰⁾ 도시화와 교육기회가 확대되면서 정부비판적인 언론활동에 공명하는 독자층이 더욱 늘어났던 것인데, 이들 중 다수는 교육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배웠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의식을 갖게 되었던 젊은 층들이었다.⁽⁴¹⁾

4. 민주당정부 시기의 신문

1) 언론사의 급격한 증가와 사이비 언론

정기간행물 발행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사태’(沙汰)가 났다고 표현될 정도로 정기간행물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⁴²⁾ <표 1>에 나타난 대로, 신문의 경우 8개월 만에 그 수가 4·19 이전에 비해 3배나 늘어났다. “등록신청자의 거의 전부가 정기간행물 발행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이나 인원의 확보 및 재정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당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거절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등록을 받았고, 이로 인해 정간물 수가 급증했던 것이다.⁽⁴³⁾

일간신문사 수가 3배 정도 늘어났지만 발행부수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4·19 이전에 130만부 내외였던 것이 1961년 3월말 현재 140만 내외로 늘어나는데 그쳤다.⁽⁴⁴⁾ 이것을 보면 4·19 이후 생긴 신문들이 충분한 재정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했고, 발행부수도 보잘 것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문사의 수적 증가는 분명히 언론 자유의 산물이었지만, 재정적 기반도 없이 신문 발행을 하나의 이권으로 보고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 발행된 신문들은 과거와는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최준은 “위와 같이 우후죽순처럼 약 2배로 각종의 정기간행물이 불어나게 된 원인은 첫째, 오래간만에 언론의 자유를 되찾았다는 것, 둘째, 등록제로 누구나 손쉽게 간행물을 발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 셋째, 종전과 같은 정기간행물의

(40) 채 백, 앞의 글, 43쪽.

(41) 김영희, 앞의 책, 219-220쪽.

(42) <편집인협회보>, 1961, 4, 5.

(43) <동아일보>, 1960, 7, 5.

(44) <한국일보>, 1961, 4, 9.

제한이 또 다시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측 아래 하나의 이권으로 인식하였다는 것 따위를 들 수가 있겠다”라고 주장했다.⁽⁴⁵⁾

표-1 언론사 수의 증가

	4·19 이전	1960. 11. 1	1960. 12. 31	1961. 2. 28	1961. 3. 31	1961. 4. 30
일간신문	41	103	112	112	112	115
통신	14	177	237	261	274	308
주간신문	136	353	429	469	476	487
월간	400	403	433	261	470	464
기타	118	146	167	175	177	193
합계	709	1,182	1,378	1,475	1,509	1,567

자료: <경향신문>, 1961. 4. 6; <편집인협회보>, 1961. 4. 5.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손쉽게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언제 또 다시 허가제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인식이 갑작스런 언론사의 수적 증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런 수적 증가는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일간신문보다 주간신문, 주간신문보다 일간통신이 이처럼 많은 신규 등록을 하게 된 이면에는 미처 언론인으로서의 자세나 양식이 없이 또는 기업적 체제나 인적 구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명예욕이나 악질적인 기업 의도에서 신문 통신을 발행코자 한 동기가 숨어 있었다고 간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악질 기업인은 재정지반이 빈약하여 정기간행물을 부정기적으로 간행할뿐더러 그들이 스스로 채용한 사원들에게 적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이 많으므로 결과적으로 언론의 본래 사명에 배치되는 사이비 언론인, 공갈 기사를 낳게 하여 일종 사회 문제가 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지적도 나왔다.⁽⁴⁶⁾

제한된 판매 시장과 광고 시장을 감안할 때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채 출발한 언론이 어떤 행태를 보였을지는 자명했다. 이른바 사이비 언론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언론 자유가 허용되면서 양적인 증대는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질적으로는 더 저하된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다. 최석채는 “사이비 언론인의 범람” 문제를 “언론계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이비 언론인”과 “언론계가 책임 져야 할 사이비 언론인”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45) 최 준, <한국신문사> 중판, 일조각, 1982, 444쪽.

(46) <편집인협회보>, 1961. 4. 5.

주장했다. 그는 “전자는 도저히 신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영터리 간판을 내걸고 공갈 협박을 일삼는 부류, 후자는 정당한 신문들이 그 경영상의 모순으로 신분증을 납발한 무급기자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여 기존 신문의 경우에도 사이버 언론인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⁴⁷⁾ 새롭게 등장했던 신문뿐만 아니라 기존 신문의 경우에도 불합리한 경영으로 운영난에 허덕이면서 출혈경쟁을 했기 때문에 사이버 언론인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다.

2) 언론자유 의 신장과 남용

4월 혁명으로 등장한 허정 과도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언론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승만정권 시기의 언론 탄압이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고, 그만큼 국민들의 언론자유에 대한 요구가 컸기 때문에 서둘러 언론자유를 허용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또한 4월 혁명 과정에서 신문들이 수행했던 역할이 컸다는 점도 언론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⁴⁸⁾

우선 가장 먼저 언론자유 의 신장을 상징했던 것은 <경향신문>의 복간이었다. 대법원은 4·19가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60년 4월 26일에 <경향신문>에 대하여 “발행허가 정지의 행정처분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경향신문은 정간된 지 361일 만인 1960년 4월 27일 조건부터 복간할 수 있었다.⁽⁴⁹⁾

과도 정부는 우선 발행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해 1960년 5월 1일에 허가제를 규정한 군정법령 88호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⁵⁰⁾ 1960년 5월 14일에는 일부 의원들에 의해 “신문등 및 정당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는데, 이 법률안은 국회에 이미 제안되어 있던 내각책임제 개헌안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군정법령 88호 및 55호의 무효를 전제로 하여 동 법령에 대체시키기 위한 입법조치였다.⁽⁵¹⁾

<동아일보>는 사실을 통해 위 법률안 내용 중 공보실에 등록하고, 납본까지 하도록 규정한

(47) 최석재, 언론의 책임이란 무엇이나?, <사상계>, 1961년 11월호, 93쪽.

(48) 오소백, 4·19와 언론, <한국의 언론> 1집, 문화공보부, 1968, 334쪽.

(49) 최 준, 앞의 책, 441쪽.

(50) <경향신문>, 1960, 5, 1.

(51) <동아일보>, 1960, 5, 15.

부분은 여전히 언론탄압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⁵²⁾ 이런 비판은 과거 이승만정권 시기에 공보실이 언론자유를 “침범, 말살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편과정에서 공보실이 없어지고, 그 기능이 국무원 사무처에 흡수되면서 이런 비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결국 동 법률안이 1960년 6월 24일에 제정되어, 7월 1일에 공포됨으로써 미군정법령 88호는 사실상 폐지되고 이제부터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제가 실시되게 되었다.⁽⁵³⁾

또한 1960년 6월 15일에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새 헌법 13조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종래의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건 없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길을 열었다. 다만 28조 2항에서 일반 유보조항을 두어 언론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의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단서 규정에서 “허가나 검열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하여 언론에 대한 사전억제의 금지를 명문화하였다. 1960년 5월 30일에는 국가보안법이 개정되면서 언론제한 조항이 삭제되었고, 6월 23일에는 선거법에 들어 있던 언론단속 조항도 역시 삭제되었다.

민주당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런 언론정책의 기초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민주당 정부는 부분적으로는 언론 통제를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정부는 1960년 9월에 이미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던 군정법령 88호 5조의 규정은 대체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가⁽⁵⁴⁾ 비판 여론이 일고 국회에서 폐기를 요청하자⁽⁵⁵⁾ 그때서야 미군정법령 88호 5조를 폐지하고 그 대체법으로서 “외국정기간행물배포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⁵⁶⁾ 또한 1961년 2월에 혁신계 세력을 대변하던 <민족일보>가 창간되자, 이 신문의 인쇄 대행을 하던 <서울신문>에 압력을 가해 인쇄를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 비난을 듣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유일의 혁신계 신문에 대한 이번 인쇄 증지는 장정권의 졸렬한 언론정책에서 나온 한 개의 케이스가 아니겠는가”라는 비판도 나왔다.⁽⁵⁷⁾

한편 여당계의 신문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세계일보>는 새로 편집국장 천관우를

(52) <동아일보> 1960. 5. 15.

(53) 정진석, <한국 현대 언론사론>, 전예원, 1985, 353쪽.

(54) <경향신문>, 1960. 9. 16.

(55) <경향신문>, 1960. 10. 28.

(56) <경향신문>, 1960. 11. 14.

(57) <민국일보>, 1961. 3. 3.

맞이하러 7월 9일자부터 제호를 〈민국일보〉로 고쳤고, 〈연합신문〉은 이관구를 사장 겸 주필로 맞아 7월 2일자부터 〈서울일일신문〉으로 고쳐 종래의 보도 및 논평의 태도를 전환시켰다. 〈서울신문〉도 허정 과도정부가 위촉한 오종식을 사장으로 하여 7월 27일자부터 복간했다. 민주당 정부는 과거의 여당계 신문들에 대해서도 개입하지 않는 등 언론 자유를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했다.⁽⁵⁸⁾

민주당정부는 외국간행물 국내 배포에 대한 규제를 시도했고, 혁신계 신문에 대한 통제를 통해 실시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민주당 정부 하에서 언론들이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국무원 사무처장이었던 정현주의 회고대로 “민주당 정부는 제도상으로 뿐 아니라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언론에 대해 매우 관대했다”고 볼 수 있다.⁽⁵⁹⁾ 실제 자유당 정부 때와는 달리 민주당 정부가 직접 언론을 장악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천관우는 당시의 언론계 상황에 대해 “언론의 자유는 ‘절후(絶後)’는 몰라도 분명히 ‘공전(空前)’의 것이었다. 도리어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서는 안 되겠다고 스태프들이 선의의 자제를 하곤 하는 정도”였다고 주장했다.⁽⁶⁰⁾ 김규환도 “장면정권 하의 1년은 한국의 언론자유를 위한 이른바 ‘황금시대’였다”는 평가까지 했다.⁽⁶¹⁾ 또한 김진홍도 한국의 언론사에서 이 시기가 거의 “유일한 자유”기에 해당하며 “백화제방과 같은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⁶²⁾

3) 무책임한 보도와 독자들의 비판

4·19 이후 재정적 기반도 없는 신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사이버 언론으로 인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이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4·19 직후 “모 신문기자가 어느 장관에 대해 금품을 요구하였는데, 그 장관은 혁신시대에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거절하자

(58) 최 준, 앞의 책, 441쪽.

(59) 정현주, 민주당 정부는 과연 무능했는가, 〈신동아〉, 1985년 5월호, 265쪽.

(60) 〈기자협회보〉, 1970. 7. 31.

(61) 김규환, 한국 저널리즘의 석금, 〈사상계〉, 1961년 11월호, 77쪽.

(62) 김진홍, 〈언론통제의 정치학〉, 흥성사, 1983, 46쪽.

그 기자는 불쾌한 언사로 위협하였다”고 한다.⁽⁶³⁾ 일부 사이비 기자들의 발호는 행정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최근 모장관이 국회 증언에서 기자등살에 지방 행정의 조직과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이며 그것을 단속하려면 공무원의 뒷구멍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⁶⁴⁾ 또한 국회 민의원 내무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양주군에서만 2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행패로 인해 행정업무가 마비된 지경이라는 논의까지 있었다.⁽⁶⁵⁾

이런 현실 속에서 “4·19후 쏟아져 나오는 신문기자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찾아와서 기사를 몇 줄 써 들고는 손을 내미는 바람에 기자라면 말만 들어도 입에서 신물이 돈다”는 사람까지 나왔다.⁽⁶⁶⁾ 이러한 사이비 언론의 문제점은 1960년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의 4달 동안에만 공갈, 협박 등으로 인해 경찰에 입건된 사이비 기자수가 34건에 61명이나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⁶⁷⁾ 이런 현실은 일부 언론인의 잘못된 의식이 가져온 결과였다. “신문기자 하면 무슨 특권의식을 불러일으키기가 일쑤고 이는 곧 공짜와 통한다고 착각하는 새로운 ‘프로 저널리스트’가 많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라는 비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다.⁽⁶⁸⁾

위와 같은 문제가 주로 지역 주재 기자들이나 신생 신문 기자들의 문제였다면, 기존 주요 신문들은 정치적 선정주의라는 또 다른 문제를 드러냈다. 즉 “한국의 저널리즘은 정치적 불안과 민중의 불만, 그리고 저항정신에 최대한으로 편승, 영합하는 정치적 썬셰이셔널리즘이 상업주의를 위한 유력한 방법으로 살아왔다”는 평가까지 나왔다.⁽⁶⁹⁾ 이승만정권 시기부터의 언론계 보도 관행이 언론 자유가 확대된 현실에서 더욱 극성을 부렸던 것이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광고보다는 판매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독자들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판매 확대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선정적인 정치기사에 중점을 두는 보도관행을 낳았던 것이다. 4·19 이후에는 이런 관행이 더욱 일반화 되어, 이제 거의 모든 신문들이 이런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63) <조선일보>, 1960. 5. 11.
 (64) <경향신문>, 1961. 4. 7.
 (65) <조선일보>, 1961. 4. 6.
 (66) <동아일보>, 1961. 1. 11.
 (67) <조선일보>, 1960. 11. 7.
 (68) <경향신문>, 1961. 4. 6.
 (69) 김규환, 앞의 글, 81쪽.

정현주는 “4·19 이전에는 정부에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이른바 야당지와 정부의 입장을 무조건 옹호하는 여당지와 확연히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4·19 이후에는 모두 야당지가 되었다. 독재정권에 대해서 무조건 두둔만 하던 정부기관지들조차 민주당정부에 대해서는 한술 더 뜬 비판적 자세가 되었다. 이런 민주당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이승만 정권하의 야당지처럼 권위를 인정받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회고했다.⁽⁷⁰⁾ 최준은 신문의 논조에 대해 “한낱 비판에 그치고 그 결함을 시정할 수 있는 대안 내지 건설적인 논설이 드물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자유당 시대의 독재정권과 싸우던 논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저항을 앞세우는 ‘야당 정신’만 있지, ‘계몽과 지도성’에 근거한 대안의 제시가 없다고 비판하였다.⁽⁷¹⁾

표-2 민주당 정부의 시책에 대한 신문들의 보도 태도(사실)

신문명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논조 (긍정)찬성, 격려, 긍정, 지지, 동조, 제안	8	3.9	49	22.0	48	14.0	80	23.1	94	20.0
(부정)반대, 비난, 부정, 경고, 의문, 반성 촉구	100	49.0	110	48.0	70	21.0	154	44.6	281	59.8
(중립)요망, 충고, 희망, 기대, 회피	94	46.1	66	30.0	209	65.0	111	32.3	95	20.2

자료: 왕종선 외, 신문사실 조사분석, <신문연구소학보> 제2집, 1965, 107쪽.

<표 2>를 보면 4·19 이후에도 모든 신문들이 강력한 정부 비판적 논조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면을 지지했던 <경향신문>조차 비판적 논조가 강했다는 것에서 당시 언론들의 민주당 정부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정치적 선정주의를 드러낸다고 지적받기도 했던 신문들의 활동은 정부의 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최석채는 “4·19 이후의 무정부 상태 혹은 무력 정부 하에서 진정한 의미로서의 야당이란 있을 수도 없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거늘 무턱대고 데모 군중에 영합하고 정부를 후려갈기는 선동기사라야만 옳은 신문인줄 착각한 나머지 사회의 혼란에 부채질을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고 지적했다.⁽⁷²⁾

(70) 정현주, 앞의 글, 265쪽.

(71) <조선일보>, 1961, 4, 2.

(72) 최석채, 앞의 글 94쪽.

오죽하면 이런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강해졌던 신문들은 정부의 힘마저 누르다시피 되었던 것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왔다.⁽⁷³⁾ 민주당 정부에서 국무원 사무처장을 지낸 정현주는 민주당을 괴롭힌 ‘삼신(三新)’이 있었다고 하며, “신민당(민주당 구파), 신평회(민주당 소장 그룹), 그리고 신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⁷⁴⁾ 언론의 무책임한 비판과 유행처럼 번진 각종 시위가 민주당 정부가 제 역할을 하기 힘들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된 언론들은 이제 집단적 압력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4월 혁명 이후 기사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신문사에 집단항의를 하거나, 심지어는 난입하는 일까지 빈번하게 벌어졌다.⁽⁷⁵⁾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데는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탓도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중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하려고 했던 당시 사회 분위기의 영향도 컸다. 이런 사태에 대해 <경향신문>은 “언론을 주먹으로 꺾지 말자”는 기사를 실었고, 나아가 이런 행동을 “4월 혁명에 흘린 피를 더럽히는 망동”이라고 지탄하기도 했다.⁽⁷⁶⁾ 특히 <동아일보>는 “직접 폭력수단으로 당치도 않은 요구조건을 관철시키려는 풍조”가 이런 사태를 가져왔다고 질책하기도 했다.⁽⁷⁷⁾

조용중은 “4·19로 세상이 바뀌면서 언론은 그제서야 정치권력에도 몰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허약한 장면 내각을 출범 초부터 죄인 다루듯 몰아치지 시작했다”고 주장했다.⁽⁷⁸⁾ 이런 신문의 무조건적인 비판에다가 사이비 언론들의 행태까지 더해지면서 독자들의 언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나타났다. 1960년 12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독자들 중 58.5%가 “기자의 질이 얕다”고 답변했고, 57.6%가 “기자들이 이권운동을 한다”고도 답변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독자들 중에서 46.1%가 언론의 보도가 “편파적”이라고 답변했고, 43.8%가 “과장적”이라고 답변했다.⁽⁷⁹⁾ 잘 모른다고 답변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비율은 대단히 높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이비 언론과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 신문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비판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73) 김태웅, 민정복귀와 언론자유, <신문연구>, 3권 2호, 22쪽.

(74) 정현주, 앞의 글, 265쪽.

(75) 합동통신사, <합동연감> 1961년판.

(76) <경향신문>, 1960. 6. 2.

(77) <동아일보>, 1960. 12. 11.

(78) 조용중, <저널리즘과 권력>, 나남, 1999, 146쪽

(79) 장 용, 신문의 책임과 신문인의 질, <신문연구>, 3권 1호, 1962, 78~80쪽.

5. 맺는 말

8·15 광복 직후 언론계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일제강점기에 비해 훨씬 많은 수의 신문들이 발행되었고, 이런 신문들의 논조도 이념적으로 매우 다양했다는 것이다. 정론지적 특성이 지속되었던 미군정기의 신문은 경영면에서는 매우 열악했다. 미군정은 초기에는 어느 정도 언론자유를 허용했으나 후기로 갈수록 강력한 통제를 실시해 많은 신문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신문들은 다양한 계기마다 이념적 갈등과 대립을 보여주었는데, 많은 독자들이 자신의 이념적 지향에 맞는 신문들을 읽으면서도 사실보도에 충실하지 않는 경향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이승만정권이 등장한 이후 신문의 수도 줄어들고 이념적 다양성도 사라졌다.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신문들은 여당지와 야당지로 나뉘어져 정파성을 드러냈다. 이승만정권은 야당지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탄압을 가했지만 야당지의 비판적 논조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는 못했다. 야당지에 대한 독자들의 선호는 이승만정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4·19 이후 언론자유가 허용되면서 신문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런 신문들 중에 상당수는 부실한 경영으로 인한 사이버언론의 행태를 보여주었다. 민주당정부는 신문발행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었고, 비판적 논조에 대한 어떤 규제도 가하지 않았다. 언론자유와 남용으로 인해 사이버언론과 정치적 선정주의의 폐해가 나타났고, 독자들은 점차 신문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8·15 광복 직후부터 5·16 군사정변까지의 16년 동안에 신문들은 경제적으로 내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특히 신문사 수가 급격히 늘어난 민주당정부 시기에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미군정 초기 잠깐 언론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후 오랫동안 신문들은 강력한 언론통제를 받았다. 4·19 이후 갑자기 언론의 자유가 급격히 신장되면서 언론 자유의 남용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언론의 자유가 제약되던 시절에 권력에 대해 비판적인 역할을 하여 독자들의 호응을 받았던 신문들이 언론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나타난 폐해들로 인해 독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민주당정부 시기 언론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나타났던 혼란은 5·16 군사정변 이후 강력한 언론탄압을 실시하는 빌미가 되었다. 민주당정부 말기에 언론의 책임을 내세우며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무위로 돌아갔다. 5·16 이후 신문들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언론통제를 받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급격히 성장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제 신문들은 정론지적 특성에서 벗어나 서서히 대중지적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산업화 시기 신문과 독자

채 백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04

1. 머리말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산업 각 부문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며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향상되었다. 특히 제조업의 성장으로 전국적인 내수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광고 시장도 점차 확대되었다.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도 점차 심화되면서 신문 산업이 성장할 중요한 토대가 형성되었다.⁽¹⁾ 이러한 바탕 위에서 신문들은 기업적 성장을 거듭하여 대중적 보급을 이루며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신문을 읽으면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성장과 산업화의 이면에는 군부 독재의 장기 집권으로 사회 각 부문에 대한 통제와 탄압이 극심하게 전개되었다. 언론 부문도 예외가 아니었다.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은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언론은 이에 굴복하고, 나아가서 독재 정권에 협조하면서 기업화에 매진하였다. 이러한 언론에 대해 독자들의 비판은 거셌다. 경제 성장과 함께 교육 기회도 확대되면서 독자들의 수준도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지만 언론이 그 수준을 맞추어주지 못하였다. 그러면 이 시기의 신문 발전과 독자들의 대응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1) 장용호(1995). 한국 신문산업의 구조 변동: 매체경제학적 접근. 유재천 외 엮음,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서울: 소화, 20-21쪽.

2. 박정희 정권기의 신문과 독자

1) 박정희 정권의 언론 정책과 통제

(1) 박정희 정권의 언론 정책

박정희 정권은 언론에 대해 탄압과 회유의 양면적인 통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강압적 수단으로 언론을 탄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이 채찍과 당근으로 언론을 굴복시키고 나아가 언론을 정권의 유지,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집권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정치권력은 언론에 대해 탄압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면 언론을 통해 자신들 권력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쟁점화되면서 권력의 유지가 힘들어진다. 쿠데타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도 정당성에 문제가 있기에 필연적으로 언론을 탄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였다.

쿠데타에 성공한 군부세력은 바로 언론 정비에 착수하여 1961년 5월 23일 최고회의 포고 제11호로 ‘사이비 언론인 및 언론기관 정화’라는 명분으로 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등록 사항을 위반한 많은 언론사들을 통폐합한다고 공표하였다. 이 조치는 사이비 언론인과 언론기관을 정화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상 언론을 약화시키고 통제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였다.⁽²⁾

1962년 6월 28일 군사정부는 언론정책의 근간을 공포하였다. 이는 ‘언론을 기업으로 육성하고 그 내용을 향상’시킨다는 방침과 함께 언론자유와 책임, 언론인의 품위와 자질, 언론기업의 건전성, 신문체제의 혁신, 언론정화라는 기본 방침 5개항을 제시하였다. 이어 7월 30일에는 언론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발표하였다. 이는 언론을 기업적 측면에서 지원하며 동시에 규제하는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그중에서 이후 한국 언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단간제와 시설기준이다. 단간제는 당시 한 신문이 조간과 석간을 함께 발행하던 것을 하루에 한번만 발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 조치는 신문의 비판적 정론성 보도를 줄이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시설 기준은 도시 규모에 상응하는

(2) 김해식(1994). 『한국언론의 사회학』. 서울: 나남, 96쪽.

인쇄 시설을 갖춘 자만이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기준에 미달되는 신문사들은 60일 이내에 정리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력을 갖춘 자본가들만이 신문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치들은 살아 남은 신문사들에게는 경쟁의 부담이 줄고 과점 체제를 통해 안정된 경영 기반이 확보되며 새로운 시장 참여를 봉쇄하는 진입장벽도 되는 등 커다란 혜택이 되었다. 이 시설기준은 1992년 위헌판결을 받을 때까지 한국 언론의 발전을 제약하는 규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³⁾

(2) 언론관련 법제의 정비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언론 정책을 법제화하였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963년 12월 12일 공포된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시설기준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등록 취소의 권한도 공보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시설기준이나 발행 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공보부 장관이 재량으로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 조치만으로 언론사를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독소 조항이라 평가되고 있다.⁽⁴⁾

박정희 정권은 1964년 보다 근본적인 언론 통제를 위해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제정하려 하였다. 이 법은 언론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언론의 활동을 규제하자는 것이 주된 골자로서 자율적으로 추구해야 할 언론의 윤리를 법에 의해 타율적으로 규제하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1964년 8월 2일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언론계는 이 법을 위헌적이며 비민주적인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운동에 나섰다. 여기에 각 언론 단체와 사회 단체들이 참여하여 언론윤리위원회법철폐투쟁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이 반대 운동은 점차 확산되어 이 법은 결국 보류되었다.⁽⁵⁾ 하지만 이를 계기로 언론은 서서히 권력의 채찍과 당근에 굴복하기 시작하였다.

(3) 야당지에 대한 탄압

박정희 정권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비롯하여 여러 강압적 수단을 동원하여 야당지들을

(3) 채백(2015). 「한국언론사」. 서울: 컬처북, 336-341쪽.

(4) 김서중(1996). 정기간행물 관계법의 변천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광복 이후 제5공화국까지의 정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3-54쪽.

(5) 채백(2005). 「한국언론수용자운동사」. 서울: 한나래, 151-162쪽.

굴복시켰다. 대표적 야당지 <경향신문>은 1966년 강제로 경매처분에 넘겼다. 1947년 창간된 <경향신문>은 가톨릭을 배경으로 하여 이승만 정권기부터 대표적 야당지로서 정부 비판에 앞장섰다. 박정희 정권은 <경향신문>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거래 은행에 압력을 가하여 1966년 1월 경매로 넘어가게끔 하였다. 경매에서 박정희 정권은 대리인을 내세워 낙찰받음으로써 <경향신문>의 소유권을 탈취하다시피 하였다.⁽⁶⁾

<조선일보>는 코리아나 호텔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정권으로부터 여러 특혜를 받았다. 호텔의 건립 자금은 언론사에 대한 상업 차관으로는 첫 사례로서 당시 국내 금리가 연 26% 정도였지만 연 7-8%의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조선일보사는 이 자금으로 호텔을 건축하였으며 완공 후에도 관광객이 적어 매출에 차질을 빚자 본점 신축을 계획 중이던 주택은행에 압력을 넣어 호텔 건물에 입주하게 하는 부당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⁷⁾ 이러한 특혜 조치를 통해 <조선일보>도 권력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말았다.

1968년에는 <동아일보>의 자매지 《신동아》 12월호에 실린 기사를 반공법 위반으로 문제삼아 《신동아》의 홍승면 주간과 손세일 부장을 구속하였다. 이들은 3일 만에 석방되었으나 이 사건의 부당성을 사실로 반박한 <동아일보> 천관우 주필과 함께 퇴사하게 되었으며 발행인 겸 부사장이던 김상만도 사퇴하였다. 이 사건으로 마지막 야당지 <동아일보>도 박정희 정권에 굴복하고 말았다.⁽⁸⁾ 당시 신문편집인협회 회장이던 최석채는 이 사건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사퇴하면서 <기자협회보>와 인터뷰를 통해 당시 언론의 상황을 ‘신문이 편집인과 기자의 손에서 떠났다’고 표현하였다.⁽⁹⁾

(4) 경제적 혜택과 신문의 기업적 성장

채찍과 당근을 앞세운 박정희 정권의 언론 정책에 언론사들은 순응하면서 기업적 성장을 거듭하였다. 당시 언론들에게 주어진 경제적 혜택으로는 첫째 언론사의 운영 자금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들 수 있다. 특히 신문사들에 대해서는 외국 차관을 저리에 장기 등의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였다. 신문사들은 이 자금을 고속 운전기의 도입과 사옥 증축, 호텔 건설 등에 사용하였다.

(6) 주동황 외(1997). 「한국언론사의 이해」, 서울: 전국언론노조연맹, 93-96쪽.

(7) 김혜식(1994). 앞의 책, 119-120쪽.

(8) 주동황 외(1997). 앞의 책, 105-106쪽.

(9) <기자협회보> 61호, 1968. 12. 27.

둘째로는 언론의 다각경영을 허용하고 지원하였다. 신문사가 다른 매체를 겸영하는 것과 다른 산업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 시기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주간 신문이나 잡지, 월간지들을 창간, 발행했다. 주간지들이 속속 창간되면서 치열한 선정성의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1968년 9월 창간된 《선데이서울》로서 오늘날까지도 선정적 언론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이때에 각 신문사들이 잡지 부문에 경쟁적으로 뛰어 들었던 것은 대부분 차관을 통해 고속 운전기를 도입하여 과잉 인쇄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결과였다. 인쇄 능력은 배가되었지만 발행 부수는 단기에 급증하지는 않으므로 운전기를 놀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한 감가 상각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인쇄 매체인 잡지를 경쟁적으로 창간하였던 것이다.

신문사들이 전파 매체를 소유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1963년 <동아일보>가 동아방송을 개국한 것을 비롯하여 <중앙일보>는 창간 첫해인 1965년 12월부터 동양라디오와 동양TV방송을 통합 운영하였다.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향신문>도 문화방송과 통합되었다. 또한 언론 이외의 유관 분야나 다른 업종에 진출하는 것도 허용되어 제지업, 광고업 뿐만 아니라 호텔업, 문화 사업 등에도 진출하였다. 이처럼 언론사들은 경영을 다각화하여 수입원을 다변화함으로써 적자나 도산의 부담을 덜고 이윤 극대화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¹⁰⁾

언론인에 대해서도 정권의 혜택이 주어졌다. 정계와 행정부의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유신 체제 하에서 대통령이 추천하는 유정회 국회의원들의 일정 부분은 항상 언론계 간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행정부 각 부처의 대변인은 대부분 언론인들로 채워졌으며 그 외에도 문공부나 청와대 등으로 진출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상당 수 언론인들은 정관계 진출을 꿈꾸게 되어 이들에게 권력에 대한 견제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었다.⁽¹¹⁾

(5) 신문의 탈정치화와 획일화

신문의 기업화가 진행되면서 그 내용도 상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비판적 논조는 약화되었다. 정부에 불리하거나 비판적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보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당시 신문들은 내용면에서 차별성을 잃고 획일화되고 말았다. 이는 권력의

(10) 채백(2015). 앞의 책, 355-359쪽.

(11) 위의 책, 359-360쪽.

통제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당시 신문사들이 카르텔 체제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배제하고 공생을 모색한 결과였다. 신문마다 지면의 내용이 차별성이 없어서 제호와 연재 만화, 연재 소설만 제외하고는 다를 게 없다는 평가까지 받게 되었다. <동아일보> 지면에 실린 신문평⁽¹²⁾을 통해 어느 독자는 ‘일간지 체제의 평준화’를 지적하면서 신문마다 면수뿐만 아니라 면 배치도 똑같으며 외신의 경우 글자 하나 안틀리고 똑같은 경우도 있음을 비판하였다.

신문의 탈정치화와 획일화로 급기야 ‘연탄가스 중독’에 걸렸다는 비판까지 받게 되었다. <동아일보> 주필로 있다 1968년 《신동아》 필화 사건으로 그만 둔 천관우가 당시의 언론을 ‘연탄가스에 중독’되었다고 평가한 것이다.⁽¹³⁾ 당시 언론의 상황과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평가라고 하겠다.

2) 박정희 정권기의 신문 독자

(1) 독자의 대중화와 비판적 인식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소득 수준도 점차 높아져 독자층도 꾸준히 확대되었다. 1969년 말 문공부가 시행한 전국신문구독자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267만 8,155부로서 1967년에 비해 52만부가 늘어 33.8%의 급속한 증가를 보였으며 전국 가구의 50%가 신문을 정기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0.9가구당 1부를 정기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나⁽¹⁴⁾ 상당 수의 가구가 2종 이상이 신문을 정기구독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국민의 다수가 신문을 구독하게 되었다는 것은 신문의 보급이 엘리트 중심의 단계를 넘어 대중화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이는 전술한 생활 수준의 향상 외에도 교육 기회의 확대와 문맹률 감소도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1970년에는 농촌 지역도 주민의 57%가 의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⁵⁾ 문자 문화의 기반이 확대되고 신문들의 독자를 위한 상업적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독자의 대중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12) <동아일보> 1979. 1. 12. 5면.

(13) <동아일보> 1969. 9. 23. 5면.

(14) <경향신문> 1970. 4. 21. 7면.

(15) <경향신문> 1970. 10. 2. 5면.

그러나 권력의 통제에 굴복, 협조해가면서 경제적 혜택의 단물에 빠져 있는 신문의 모습은 독자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에 따라 독자들의 비판은 짝을 틔우기 시작하였다. <경향신문> 1965년 4월 6일자의 ‘신문의 날’ 특집은 다양한 독자들의 신문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 복덕방 주인은 “관권과 대결해서 민권을 옹호해 온 것이 한국의 신문인데 요즘은 형편없이 무기력해진 것 같다”며 그래도 매일 보기는 하지만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비판하였다.

1972년의 10월유신 이후 언론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권력에 의해 더욱 철저하게 통제되고 그에 맞장구치며 혜택에 취해 있던 유신기 언론에 대해 독자들의 비판은 높아만 간다. 당시 신문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은 <경향신문>이 1979년 4월 7일 신문의 날을 맞아 기획한 ‘독자가 참여하는 오늘의 신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잘 드러난다. 언론학 교수부터 다양한 직종의 8명이 참여한 이 기사에서 6명의 응답자가 신문이 개성없이 천편일률적, 획일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한 주부는 “조간에서 본 기사를 그대로 다시 석간에서 보는 것은 여간 짜증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 독자들의 행간 읽기

이 기사에서 서강대 교수 최창섭의 발언은 당시 신문의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 준다. 그는 “신문을 읽기는 하되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졌다. 기사의 겉 내용보다 행간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풍조가 강해진 것은 그만큼 신문이 신뢰도를 잃은 까닭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이 행간 읽기가 당시 신문과 정치 권력, 그리고 독자의 관계를 집약적으로 보여 준다. 권력의 통제에 순응하여 현실을 외면하는 신문에 독자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그래도 기자들이 무언가 암시를 남겼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그 무언가의 암시를 찾으려는 노력이 바로 이 ‘행간 읽기’다. 소설가 박완서도 <동아일보> 1979년 4월 6일자에 실린 ‘나의 신문평’에서 지면에 가득한 활자를 읽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느끼게 된다면 이 때문에 ‘행간을 더듬게 된다’고 술회하였다.

독자들이 신문의 행간을 애써 찾아 읽으려고 시도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래도 신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었음을 말해 준다. 정치 권력의 탄압이 두렵고 사주의 압력을 뿌리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양심이 살아 있는 기자들이 무언가 단서를 남겨 놓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에 행간을 읽으려는 독자들의 눈물겨운 노력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3) 독자들의 저항

신문에서 정치적 비판을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독자들은 여전히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1971년 <경향신문>이 실시한 독자 조사 결과를 보면 기사 코너별 열독률에서 정치 관련 기사들이 대부분 상위를 차지하였다. 같은 신문사가 1972년에 행한 조사에서도 정치 기사가 열독률 1위를 차지하였다.⁽¹⁶⁾

독자들의 관심은 정치 문제를 가장 우선하고 있지만 당시의 신문들은 독자들의 욕구는 외면한 채 상업적 경쟁에만 몰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독자들의 비판은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주간지들의 선정적 경쟁이 과열되자 이에 대한 대학생 독자들의 비판과 저항이 뒤따랐다.

먼저 표적이 되었던 것은 선정성 주간지들이었다. 《선데이서울》 등의 선정적 주간지들에 대해 서울대 문리대 기독교학생회는 1969년 6월 10일 교내에서 집회를 열어 탈선 마스크 화형식을 벌이고 불매운동을 결의하였다. 학생들은 “현대문명을 좀먹는 방종한 섹스와 난폭한 리크리에이션은 마스크를 통해 순진한 동심을 타락시키고 사회윤리를 매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¹⁷⁾

학생들의 과격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이즈음부터 정계의 핵심 쟁점이 되었던 3선개헌을 둘러싸고 언론이 보여준 무비판적 보도 태도는 수용자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각 대학의 시위에서 언론인을 규탄하고 각성을 촉구하는 결의문들이 연이어 채택되더니 급기야는 대학생들이 언론 화형식을 벌이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1971년 3월 24일 서울 법대생들은 교내에서 언론인을 규탄하는 성토 대회를 열고 대학신문, 일간신문, 잡지 등을 소각하는 언론 화형식을 거행하였다. 나아가 서울대 문리대, 법대, 상대의 학생회장단 10여명은 그해 3월 26일 동아일보사 앞에서 언론 규탄 집회를 열어 화형식을 시도하였다. 긴급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집회는 10분여 만에 무산되고 말았지만 대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진 언론 화형식은 언론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언론사 바로 앞에서 화형식이라는 극단적 행동이 이루어지자 언론인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언론에 대해 깊어가는 불신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언론계에 팽배하기 시작하였다.⁽¹⁸⁾

(16) <경향신문> 1971. 10. 6., 15면., <경향신문> 1972. 4. 6., 5면.

(17) <조선일보> 1969. 6. 11., 7면.

(18) 채백(2005), 앞의 책, 169-188쪽.

(4) 독자들의 연대와 참여

독자들의 비판과 저항에 기자들은 언론자유수호운동으로 응답하였다. 언론 화형식 직후인 1971년 4월 15일 <동아일보> 기자들이 ‘언론자유수호선언’을 하였으며 뒤를 이어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이 동참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그해 10월에는 위수령, 11월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972년에는 유신을 단행하는 등 더욱 강압적인 정책을 펼쳐 기자들의 운동은 위축되고 말았다.

그러자 대학생들이 다시 언론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학가의 시위 현장에서는 언론이 거의 빠짐없이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1973년 10월에는 <경향신문>부터 언론의 본분을 다할 것을 다시 선언하기 시작하여 각 언론사 기자들이 같은 취지의 언론자유수호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자 <동아일보> 기자들은 그해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였다.⁽¹⁹⁾ 이러한 움직임은 다시 다른 언론사로 파급되어 전국 30여개 언론사 기자들이 언론자유수호를 결의하였다. 이들의 결의는 사실 보도, 기관원 출입 금지, 언론인 연행 거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기자협회도 25일 기자들의 언론자유수호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6일에는 ‘언론자유 수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²⁰⁾

박정희 정권은 자유언론수호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한 <동아일보>에 광고 탄압이라는 새로운 통제를 시도하였다. <동아일보>에 광고를 하기로 계약했던 광고주들에 압력을 행사하여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74년 말부터 광고주들이 광고를 철회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광고란이 백지로 나가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광고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자본주의 언론의 특성을 이용한 탄압책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의 광고면이 1974년 12월 26일자부터 백지로 나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서 독자들이 나서서 빈 광고면을 격려 광고로 채우기 시작하였다. 1974년 12월 30일자에 원로 언론인 홍종인의 의견 광고에서 시작되어 1975년 신년호에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신민당의 광고가, 1월 4일자에 자유실천문인협회의 격려 광고가 게재되었으며 1월 7일부터는 일반 독자들의 격려 광고가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이 격려 광고운동에는 그야말로 전국 각지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19) 채백(2015). 앞의 책, 375-376쪽.

(20) <기자협회보>. 1974. 10. 30.

대부분 익명이 많았지만 신분을 밝힌 사례 중에는 절반 정도가 학생들로서 대학생 뿐만 아니라 중고생 및 초등학생까지 참여하였다. 그 외에도 전문직에서부터 농민과 주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직업 집단이 참여하였으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교포 및 외국인들도 참여하였다.

독자들의 열띤 참여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탄압에 굴복한 동아일보사는 그해 3월 17일 회사에서 농성 중이던 언론인들을 폭력배를 동원하여 강제로 해산하였으며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소속 언론인 118명을 해고하였다. 회사 측은 그해 7월 11일 ‘긴급조치 9호를 준수한다’고 서약하고는 7월 16일부터 다시 광고가 게재되기 시작하면서 <동아일보> 격려 광고 운동은 막을 내리고 말았다.⁽²¹⁾

3. 전두환 정권기의 신문과 독자

1) 전두환 정권의 언론 정책과 통제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독재정권이 끝나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한국 사회의 시대적 당위를 무력으로 억압하고 집권하였다. 그 과정에서 언론에 대해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폭압적인 탄압 조치를 자행하였다.

(1) 언론인 대량 해직

전두환 정권의 언론 장악은 1980년 언론인 강제 해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차 언론인 강제 해직은 1980년 8월 2일부터 각 언론사별로 단행되어 전국 37개 언론사에서 717명이 해직되었다. 이때의 해직은 보안사가 통보한 대상자 명단뿐만 아니라 언론사주의 자체 해고가 곁들여진 것으로 결국 신군부 세력과 언론사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2차 언론인 대량해직은 그해 12월의 언론통폐합에 따른 것이었다. 언론사 통폐합 과정에서 직장을 잃게 된 언론인들과 지방지의 1도 1사제 도입, 지방주재기자 폐지 등으로 대거 해직된

(21) 이상은 채백(2005), 앞의 책, 189-213쪽.

언론인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언론사 통폐합으로 인해 해직된 언론인은 모두 305명에 이른다. 이처럼 1980년의 언론인 강제 해직은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언론 내부의 저항세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언론통제를 손쉽게 수행하기 위한 언론장악 전략의 일환이었고, 여기에 언론사주의 끼워넣기식 해직이 곁들여진 언론사상 유례없는 비극이었다.⁽²²⁾

(2) 언론통폐합

언론인 대량 해직에 이어 신군부세력은 대대적인 언론통폐합에 착수하였다. 먼저 신군부는 1980년 7월 31일 172종의 정기간행물을 등록 취소하였다. 이는 당시 발행되던 간행물의 12%에 달한다. 문공부가 내세운 명분은 부조리, 외설,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간행물을 ‘사회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는 <기자협회보>, 《월간 중앙》, 《창작과비평》, 《뿌리깊은나무》, 《씨울의 소리》 등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정론성 잡지들이 대거 포함되어 그 의도가 비판적 논조의 정기간행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0년 11월에는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통신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언론통폐합이 단행되었다. 11월 14일 신문협회와 방송협회는 ‘건전언론 육성과 창달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해 전국의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의 대대적인 통폐합을 통한 언론구조개편을 실시할 계획을 결의했다. 자율 결의의 형식이었지만 이는 철저히 전두환 정권의 강압과 협박에 의한 것으로서 결의문도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²³⁾

그해 12월 15일까지 이루어진 언론 통폐합의 주요 특징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지방에는 1도 1사, 즉 1개도에 하나의 신문만 남기고 통폐합하였다는 점이다. 언론통폐합으로 전국의 신문 숫자가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살아남은 신문들의 시장 점유율은 크게 늘었다. 뿐만 아니라 조간과 석간의 비율이 균형적으로 조정되어 중앙지나 경제지는 각각 신문시장을 양분하면서 일종의 과점 체제를, 그리고 지방지는 지역신문 시장에서 독점 체제를 누리게 되었다. 새로운 신문의 시장 진입도 전혀 없었으며 신문 카르텔이 존속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신문사들은 안정된 시장 구조 속에서 비약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22) 주동황 외(1997), 앞의 책, 169-170쪽.

(23) 위의 책, 174-176쪽.

(3) 언론통제 기구의 정비

전두환 정권은 이어서 앞으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저항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판으로서 언론기본법을 제정하였다. 1981년 1월 5일 공포된 이 법은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문공부 장관이 신문 통신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발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사법적 판단없이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만으로도 언론의 생존권 자체를 박탈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언론기본법은 또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영장을 받아 정기간행물과 방송의 표현물을 압수할 수 있게 하였다. 압수의 근거가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통제권자가 권력을 남용할 소지가 있었다.⁽²⁴⁾

이처럼 언론 통제 시스템을 갖춘 전두환 정권은 언론의 일상적 보도에 대해서도 보도 지침을 통해 통제하였다. 보도 지침이란 문화공보부 홍보조정실이 각 언론사에 매일 보낸 지침으로서 구체적인 기사의 보도 여부뿐만 아니라 크기나 위치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통제하였다. 당시 언론들은 대부분 이 보도 지침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중앙 6개지의 보도 지침 이행률은 평균 77.8%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⁵⁾

(4)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경제적 혜택

다른 한편으로 전두환 정권은 살아 남은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 여러 경제적 특혜를 제공하였다. 가장 큰 혜택은 언론 통폐합을 통해 독과점 체제가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신생 언론사의 시장 진입도 봉쇄되어 신문사들은 독과점을 기반으로 눈부신 기업적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다. 또한 신문사들의 다각경영을 지원하였다. 신문사들의 잡지 발행을 대폭 허용하여 대부분 신문사들이 여러 종류의 잡지를 창간하였다. 그밖에도 중소기업의 고유 업종인 인쇄업, 각종 문화사업, 스포츠사업, 부동산 임대 등에까지 진출을 허용하였다. 당시 다각경영을 통한 언론사의 수입이 평균 20%에 육박할 정도였다고 한다.

세계 상의 혜택도 주어졌다. 신문사의 윤전기 도입을 위해 1981년말에는 관세법 부칙을 개정하여 1982년 1년간 20%의 관세를 4%로 대폭 인하하였다. 이 기간 중 전국 12개 신문사가 30여대의 윤전기를 도입함으로써 도합 수십억원의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하였다.

(24) 김민환(1996),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 502쪽.

(25) 김해식(1994), 앞의 책, 162-163쪽

이러한 특혜 조치를 바탕으로 해서 신문사들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기업화의 기반을 닦아온 신문 기업들은 제5공화국 시기에 들어서 여러 개의 계열기업까지 거느리면서 대기업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5공화국이 끝나는 1987년까지 4대 신문기업의 매출액을 보면 1980년에 비해 3.26배로 증가했다.

기자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졌다. 우선 급료가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취재 수단에 대한 면세, 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에 의한 해외연수와 여행, 언론인 금고의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저리 융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되었다.⁽²⁶⁾

(5) 언론 통제에 대한 언론의 대응

정치권력의 통제와 회유에 대해 언론은 아무런 저항 없이 순응하면서 정권 홍보에 앞장서서 ‘정권의 시녀’ 혹은 ‘권력의 나팔수’라는 불명예스러운 명칭까지 얻게 되었다. 신군부의 등장과 집권 과정에서 신문과 방송은 앞다투어 전두환을 미화하고 영웅시하는 이른바 ‘용비어천가’를 외치더니, 5.18 광주민중항쟁의 왜곡, 편파 보도 등으로 전두환의 집권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5공화국 출범 이후 언론들의 행태는 바로 ‘땡전뉴스’와 ‘또한뉴스’라는 말이 잘 보여 준다. 이 말은 당시 텔레비전 방송의 뉴스를 빗대어 나온 말이다. 저녁 9시 뉴스에서 시보가 땡하고 울리고 나면 바로 첫 마디는 매일 ‘전두환 대통령은’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땡전 뉴스’라는 말이 나왔으며 이 첫 뉴스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또한 이순자 여사는’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또한 뉴스’라는 말이 나왔다.⁽²⁷⁾ 언론의 일반적인 관행과 뉴스 가치가 전적으로 무시되면서 정권 홍보에 충동원된 측면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비판의 기능이 거세된 당시의 언론은 “존재 가치도 없다”는 평가를 받아야 했다. 1983년 정기국회에서 야당인 민한당의 오홍석 중앙상위의장은 대표 연설을 통해 언론 문제에 대해 이처럼 언급하면서 당시 사회는 언론이 막혀 ‘만성적 경화증’에 걸렸다고 평가했다.⁽²⁸⁾

(26) 이상은 주동항 외(1997). 앞의 책, 186-188쪽.

(27) 강준만(2000). 『권력변환』. 서울: 인물과사상사, 530쪽.

(28) <동아일보> 1983. 10. 25. 3면.

2) 전두환 정권기의 신문 독자

(1) 독자들의 불만과 비판

굴절된 언론에 대해 수용자들의 불만은 높아만 갔다. 박정희 정권기부터 시작된 언론 불신도 더욱 깊어졌다. 당시의 언론에 대해서 언론인 스스로도 ‘국민과 정부, 어느 쪽으로부터도 호응받지 못하는 불신 언론’이라고 자평할 정도였다.⁽²⁹⁾ 국민들로부터는 언론의 제 역할을 못한다고 외면당하면서 정부로부터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독자들의 불신 때문에 취재원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것은 물론 시위 현장 등에서는 경찰로부터 폭행당하고 학생들로부터도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³⁰⁾

대학가와 노동계는 기성 언론을 부정하면서 스스로 대안적 언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영등포산업선교회는 <노동자신문>을 창간하면서 “모든 언론이 압살당한 채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노동자들은 그나마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이 땅의 언론과 노동자의 현실입니다”라고 선언하였다. 서울대생들도 <전진>이라는 매체를 창간하면서 “이 땅에 언론이 존재하는가? 정부는 국민을 ‘일방 언론’하고 국민은 정부에 ‘무언론’하며 대학 언론은 국민대중의 언론에 대한 불신, 무관심 속에 자기 표현의 길을 찾아 인간됨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이 부재하는, 부재하게끔 강제된 오늘의 현실을 보라!”고 당시의 언론 상황을 비판하였다.⁽³¹⁾ 이처럼 독자들에 의해 언론의 존재가 부정될 정도로 불만이 팽배했던 상황이었다.

(2) 유연비어의 횡행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여 언론이 막힌 사회에서는 대부분 유연비어가 나타난다. 중요한 일이 발생하여 정보에 대한 욕구가 높음에도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정보가 부족할 때 그 욕구와 정보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유연비어이다. 유연비어는 그 출처는 확인 불가능하지만 나름대로 사건이나 대상에 대한 설명의 틀을 갖추고 있다. 공적 언론이 막힌 경우 그 대체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³²⁾

박정희 정권기부터 전두환 정권기까지 언론이 침묵하는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터지면

(29) <기자협회보>, 1985, 12, 17.

(30) 채백(2005), 앞의 책, 241-245쪽.

(31) 민중문화운동협의회(1989), 「80년대 민중·민주운동 자료집II」, 서울: 학민사, 70-73쪽.

(32) 채백(2013), 계몽의 대상에서 행동하는 독자까지: 한국 신문 독자의 사회문화사, 박용규 외, 「한국신문의 사회문화사」, 서울: 한국 언론진흥재단, 55쪽.

유언비어가 생겨나면서 정보에 목말라하던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1979년의 12.12사건과 1980년의 광주항쟁이 대표적 사례이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사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발표만을 반복하는 언론은 수용자들의 정보 욕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그 격차를 온갖 유언비어들이 메우면서 수용자들은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유언비어를 오히려 더 신뢰하는 현상까지 생겨났던 것이다.⁽³³⁾

전두환 정권기에는 1982년의 장영자 사건이나 1983년의 김영삼 신민당 총재 단식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잇따라 터졌지만 언론이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자 유언비어들이 생겨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정부는 그때마다 이러한 현상을 엄단⁽³⁴⁾한다고 엄포를 놓곤 했다. 신문들도 이에 맞장구치며 유언비어는 사회적 불신만을 높여 국민총화에 역행한다며 막힌 언론을 뚫어야 한다는⁽³⁵⁾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

(3) 독자들의 침묵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상실한 언론에 대해 독자들도 할 말을 잃었다. 아니 할 말이 있어도 그 말을 담아낼 매체도 없었으며 이를 엮어낼 조직도 없었기에 독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신문에 대한 비판과 항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언론인이나 언론사를 향해서 이루어질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당시 <동아일보>의 김중배 논설위원은 ‘신문기자, 당신들’이라는 제목의 칼럼⁽³⁶⁾에서 “요즘 나는 신문의 신문다운 구실, 신문기자의 신문기자다운 사명을 당부하는 독자들의 전화를 하루에도 몇통씩 받는다. 더러는 거리에서 만나서도 듣는다. 더러는 간곡한 사연의 편지를 적어 보내는 분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칼럼은 이어서 “침묵하는 민중은 할말이 없어서 침묵을 지켰던 건 아니다. 침묵은 결코 무성(無聲)이 아니었다. 침묵은 오히려 대성(大聲)이었다”고 하여 당시 독자들의 침묵이 갖는 의미를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은 당시 언론계와 독자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침묵하고 있었지만 독자들은 당시의 신문에 대해 불만과 비판을 점차 키워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독자들의 불만과 비판은 당시 시행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다. 각 신문사들이 창간 기념일 등을 맞아 특집의 일환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언론에 대한 평가를 묻는

(33) 위의 논문, 55-56쪽.

(34) <매일경제> 1986. 11. 3. 11면.

(35) <동아일보> 1983. 5. 28. 3면.

(36) <동아일보> 1983. 6. 18. 3면.

항목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사례가 많았다. <조선일보>가 198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전체의 58.7%가 중립 내지는 부정적인 반응이었으며 1984년 <한국일보>의 조사에서도 전체의 44%가 ‘신문이 원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조선일보>가 1985년 시행한 조사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약 43%가 ‘언론 자유’라고 응답하여 당시의 언론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³⁷⁾ 이처럼 신문에 대한 독자들의 불만과 비판은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4) 영상 시대의 도래와 신문 독자

1980년대 한국의 신문은 텔레비전이라는 또 하나의 힘겨운 경쟁 상대를 맞아야 했다. 1970년대부터 보급이 확대되면서 중요한 매체로 자리잡기 시작한 텔레비전은 전두환 정권의 출범과 함께 칼라 시대의 막을 열며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였다.

이제 텔레비전은 신문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며 대중문화의 총아로 등장하게 되었다. 국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주요 매체로 오랫동안 부동의 지위를 누려오던 신문이 1980년대 들어 텔레비전에 밀리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실시된 언론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주요 정보 매체로 텔레비전이 1위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앙일보>가 실시한 조사에서 1981년에는 텔레비전이 48.9%, 신문이 36.2%였으며 1982년에는 각각 48%와 41.5%를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매체에 대한 신뢰도에서도 텔레비전이 신문을 앞서기 시작하였다. <중앙일보>의 조사에서 1981년에는 텔레비전이 40.4%, 신문이 37.3%였으며 1982년에는 텔레비전 48.0%, 신문 39.5%로 나타났다.⁽³⁸⁾

당시 방송도 권력의 통제에 앞장 서서 협조한 것은 신문보다 더한 상황이었다. ‘땡전뉴스’ 말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편파와 왜곡 보도로 점철되었지만 텔레비전이 오락 매체로서 국민들에게 친숙한 존재로 자리하였으며, 영상으로 현장을 보여 준다는 매체의 장점이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³⁹⁾

(37) ‘우리나라 신문 독자가 보는 신문상’ 『신문과방송』 제172호, 1985. 4., 44-54.

(38) 위의 글.

(39) 채백(2013), 앞의 논문, 58쪽.

(5) 독자들의 탈정치화

정치와 언론에 대한 불만이 점차 높아가면서 독자들의 정치적 관심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전술한 대로 신문 기사의 관심도와 열독률 조사에서 오랫동안 정치 기사가 거의 1등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4년 <한국일보>가 행한 조사에서 가장 관심있게 보는 지면을 묻는 항목에 정치면을 제치고 사회면이 1위를 차지하였다. 그해 언론연구원의 조사에서 열독률을 조사한 결과 사건 기사가 70.1%로 가장 높았으며 스포츠 기사와 생활정보가 58.7%와 51.8%를 차지하였으며 정치 기사가 51.7%로 뒤를 이었다.

정치 기사에 대한 불신도 매우 높았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러한 결과는 더욱 두드러졌다. 1983년 성신여대 통계학과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신뢰하는 면을 조사한 결과 스포츠면이 69%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가 문화면을 선택한 반면 정치면은 1%에 불과하였다. 1984년 고려대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82.9%가 정치 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⁴⁰⁾

이러한 결과는 당시의 언론 통제가 주로 정치 관련 내용에 집중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권력의 감시가 가장 심한 부문이 정치 기사일 것으로 생각한 독자들은 정치면에 대한 관심도 줄어 들고, 신뢰도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또한 워낙 강력하게 통제하는 정치 권력에 대해 국민들은 무력감을 느끼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식도 줄어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⁴¹⁾

3.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화 시대 한국의 신문은 외형적인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한국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신문들도 기업화되면서 상업주의의 길을 걷게 되었다.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의 향상, 교육 기회의 확대로 독자층도 확대되어 대중화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40) '우리나라 신문 독자가 보는 신문상' 『신문과방송』 제172호, 1985. 4., 44-54.

(41) 채백(2013). 앞의 논문, 59쪽.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한국의 신문들은 질적인 면에서는 독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정치 권력의 언론 통제로 인하여 언론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독자들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것이다. 왜곡된 언론의 모습에 독자들의 불신은 점차 깊어지며 1970년대 초반 언론 화형식이라는 극단적 형태까지 등장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독자들은 <동아일보> 광고 사태에서 보듯이 권력에 맞서 싸우는 언론인들을 성원하고 참여하는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권력 앞에 무기력하기는 했지만 언론인들의 양심은 살아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에는 독자들이 언론을 성원하고 지원한 움직임은 찾아 보기 어렵다. 기대와 성원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자 그 불신은 더욱 깊어지기만 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 시기 신문과 독자의 신뢰

김세은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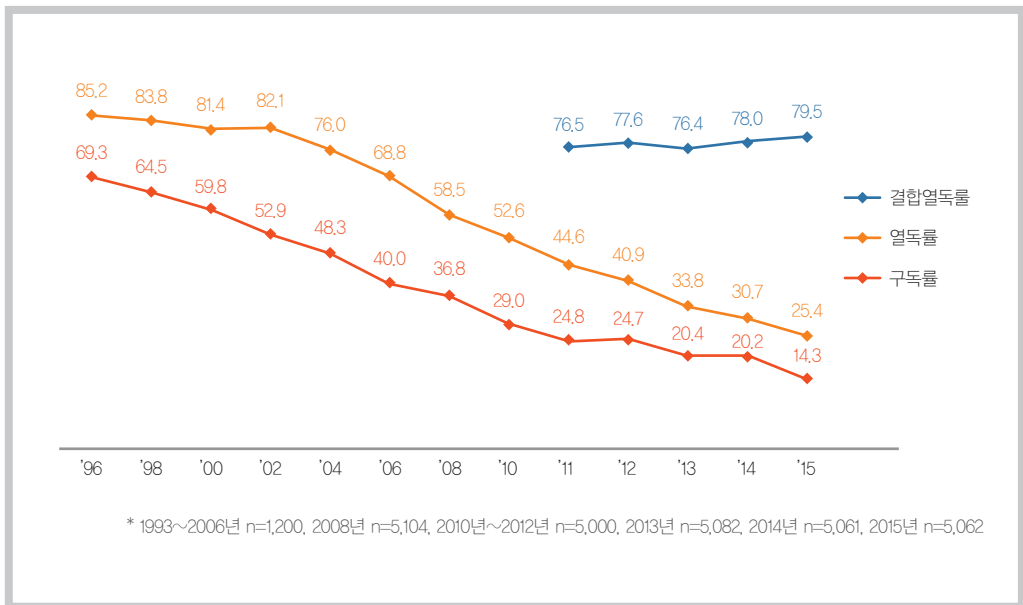
05

1. 신문의 ‘오늘’을 돌아보며

오늘날 ‘신문’은 중의적으로 쓰인다. ‘신문’을 안 보는 이는 없지만 정작 ‘신문’을 보는 이는 드물다. 이 말은 인쇄신문 즉 종이신문을 보는 이는 거의 없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는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신문 기사를 대부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 신문을 정기구독 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 독자의 특성 상 평균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우리나라 가정의 신문 정기구독비율은 2015년 현재 14.3%밖에 안 된다. 열 집 가운데 신문을 구독하는 집이 두 집도 안 된다는 얘기다. 2014년에는 겨우 20%에 턱걸이를 했는데, 1년 만에 무려 5.9% 포인트나 떨어졌다(그림 1. 참조). 이는 조사가 시작된 1996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당시 70% 가까운 수치였던 것을 생각하면 20년 동안 무려 55% 포인트가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신문의 정기구독비율이 극적으로 감소한 데에는 디지털 미디어의 보급이 자리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뉴스 소비의 주요 도구가 되면서 종이신문은 그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¹⁾

(1) 종이신문의 구독률이나 열독률 모두 줄어들었지만,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신문 기사를 이용했다는 결합 열독률은 2015년 현재 79.5%에 이르며 소폭이나마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신문이 콘텐츠 유통보다 콘텐츠 공급자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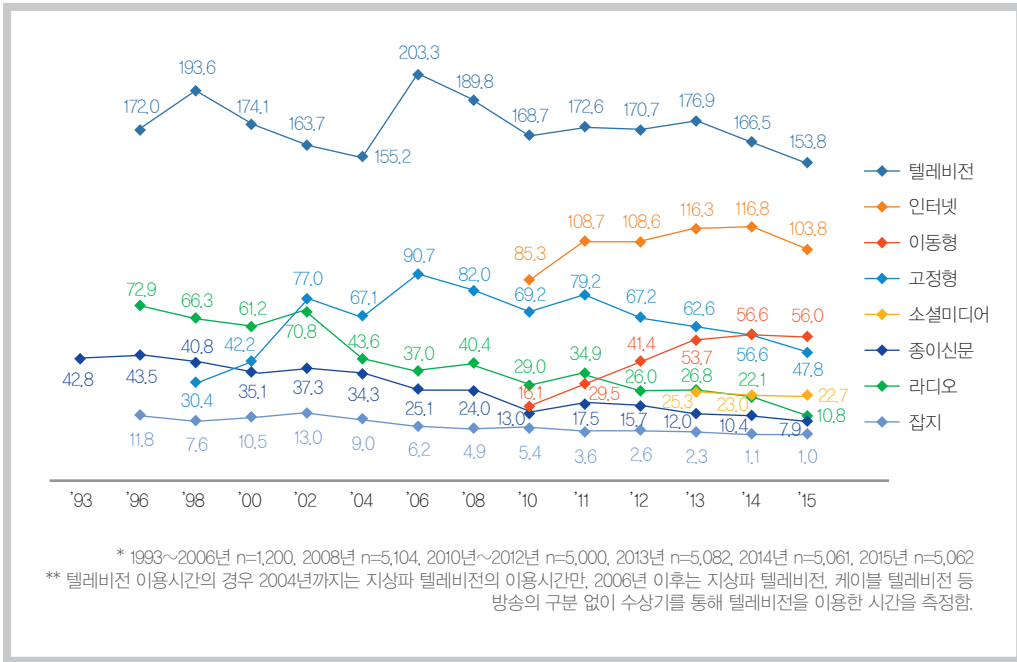


*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2015),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38쪽.

그림 1. 신문 열독률, 구독률, 결합열독률 추이(1996년~2015년)

조사 결과를 좀 더 살펴보면, 지난 1주일간 종이신문을 ‘매일 읽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한데 이는 2014년 대비 4.2%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²⁾ 더 내려갈 것 없다고 여겨졌던 수치에서 더 내려가 이제는 전 국민의 단 3%만이 종이신문을 매일 읽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신문을 읽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지난 1주일간 종이신문을 읽은 시간은 하루 평균 7.9분으로 2014년 대비 2.5분 감소하였다. 신문 열독 시간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75~78쪽), 향후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 구독률은 조선일보(4.7%), 동아일보(2.9%), 중앙일보(2.7%), 매일경제(1.0%), 한겨레(0.7%), 경향신문(0.6%), 한국일보(0.5%), 국민일보와 농민신문(각 0.4%), 한국경제(0.2%) 순이었고, 신문 구독자(n=726) 기준으로 한 구독자 점유율은 조선일보(33.1%), 동아일보(20.5%), 중앙일보(18.5%), 매일경제(7.0%), 한겨레(4.7%), 경향신문(4.3%), 한국일보(3.5%), 국민일보(3.0%), 농민신문(2.7%), 한국경제(1.6%) 순이었다(한국언론진흥재단, 110쪽).



*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2015).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31쪽.

그림 2.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 추이(1993년~2015년)

이렇게 신문 자체를 접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신문사들의 경영난은 불가피하다. 오죽하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방안까지 나왔을까.⁽³⁾ 그런데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발행부수 2백만 부를 넘는 신문들이 셋이나 있었으니 실로 격세지감이 따로 없다고 하겠다.⁽⁴⁾ 인터넷과 모바일이 일상화되기 전, 대부분의 시민들은 조간신문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신문을 보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특히 1980년대까지는 신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처우도 좋아서 언론인 지망생들에게 신문사는 방송사보다 선호되는 가장 좋은 직장이었다. 언론통폐합에서 살아남은 신문사들은 1도 1사 정책으로 ‘언론카르텔’을 형성할 만큼 독과점적 지위를 부여받았고, 자본주의의

(3) 윤관석 의원은 올해 6월 19일 주요 일간지, 지역신문, 경제지, 주간지 등 신문진흥법에서 정한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원까지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조운호, 2016, 6, 19).

(4) 한국ABC협회 발표에 의하면, 2002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발행부수가 200만이 넘었다. 2015년 전국일간지 24개사의 총 발행부수는 5,165,810부이고, 총 유료부수는 3,919,227부이다. 발행부수는 조선일보 1,673,049, 중앙일보 1,056,946, 동아일보 916,546, 한겨레 244,830, 경향신문 215,131, 국민일보 201,322, 한국일보 199,613, 문화일보 170,460부이고, 유료부수는 조선일보 1,294,931, 중앙일보 795,209, 동아일보 737,053, 한겨레 198,931, 경향신문 169,058, 문화일보 149,401, 국민일보 141,648, 한국일보 141,375부이다.

확장으로 기업이 성장하면서 늘어난 광고는 이들 신문사의 재정을 튼튼하게 받쳐주면서 산업적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장세에 있기도 했지만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충만했고, 이러한 정보 수요가 주요 정보공급원인 신문에 대한 소비를 증대시켰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글은 1987년 6.10 민주화 항쟁 이후 약 30년에 걸쳐 한국 신문이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는지 정치 권력과의 관계 및 편집에서의 변화, 독자의 신뢰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2. 민주화 이후 시기 정부의 언론 통제와 신문

한국 언론은 민주화를 거치며 생겨난 권력공백기를 틈타 새로운 권력으로 탄생했다(김주언, 2009, 502쪽). 민주화 시대가 되면서 강압적인 언론 통제가 약화되었지만, ‘자율언론’은 권력 대신 “시장의 포로가 된 권력기구로 전락”했다(양승목, 1995, 113쪽). 즉 국가개입이 감소하면서 언론의 권력기구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시장경쟁의 심화로 인해 시장의 포로가 되면서 판매부수 경쟁과 시청률 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언론의 공공성은 부차적인 목표로 전락하여 상업주의가 심화되었으며, 당연한 결과로 신뢰도가 점차 하락하고 따라서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은 감소하게 되었다(양승목, 1995). 시장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첫째, 이윤추구에 관심을 갖는 언론소유주(자본)으로부터 제기되는 내부적 간섭, 둘째, 광고자본으로부터 제기되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양승목, 1995, 129쪽) 등 직접적, 간접적 영향력으로 인한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협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언론민주화운동 등 시민사회의 압력 역시 언론에 대한 중요 변수로 가시화했다. 다음은 민주화 시기 이후 언론 통제 정책이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 정권별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노태우 정권: 개방과 경쟁시대의 포섭적 언론통제

노태우 정권의 언론 정책은 한 마디로 ‘은근하고 차별적인 포섭적 언론통제’라고 할 수 있다(윤영철, 1995). 보도지침은 폐기되었지만, ‘언론인 개별접촉보고서’를 통해 은밀하게 언론인을 접촉하고 기사 삭제와 뉴스순서 조정 요구, 안기부 등과 언론통제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언론에 대한 통제를 계속했다(김주언, 2009). 또한 정부의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언론개입이 약화되면서 생겨난 통제력의 공백이 자본과 시장으로부터의 통제로 채워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야당과 재야세력의 언론포섭 노력과 함께 광고와 소유주의 통제력이 회복되면서 경영합리화가 우선순위에 놓이는 효과를 거두었다(윤영철, 1995, 208쪽).

민주화와 더불어 언론사에도 노조가 결성되기 시작했다. 1987년 10월 <한국일보>를 시작으로 각 언론사에 노조가 결성되고 1988년 11월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설립되어 편집권 독립과 공정정보 운동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면서(김주언, 2009, 523쪽), 이러한 활동을 둘러싼 경영진과 언론노동조합 간의 갈등과 마찰 등이 끊임없이 생겨났다.

2) 김영삼 정권: 문민시대의 자유주의적 언론통제

‘32년만의 문민정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김영삼 정권에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은 크게 증가했고, 따라서 국가권력은 오히려 시민사회로부터 동의를 얻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윤영철, 1995, 211쪽). 신문시장 불공정거래조사 및 언론사 세무조사가 실시되었지만(김주언, 2009) 대체로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면서 강압적 통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으며 회유를 통한 포섭적 통제도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윤영철(1995)에 따르면, 김영삼 정권의 언론 정책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정부 부처의 홍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동의의 창출을 위한 홍보기능을 강화하면서 ‘타율적 복종’에서 ‘자발적 협조’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이다. 둘째, 법규와 윤리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미디어 전문인주의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범적 당위성을 내세움으로써 언론자유의 한계 설정을 정당화했다(216쪽). ‘사이비기자 및 비리언론경영인’ 처벌로 정부 출범 후 8개월 만에 100여명을 구속하고(217쪽), 이를 통해 언론사로 하여금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면서, 사법적 제재 예방을 위해 보도의 객관성과 사실성, 윤리성을 강조하는 미디어 전문직주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 자율규제 노력도 확대되었다. 셋째, 시장에 의한 언론통제가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중앙일간지의 경우 1991년 이후 매출액 증가율이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의 조절과 관리를 통한 정책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즉, 시장경쟁의 확산으로 인해 언론의 탈정치화, 보수화 경향이 초래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언론의 권력비판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정권유지에 기능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219쪽). 선정성, 오락성 강화로 공익성은 위축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부수공사(ABC) 제도가 도입되어 투명한 부수 관리를 통해 신문시장을 관리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3) 김대중 정권: 신문의 권력화와 세무조사

1992년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고 그의 재임 기간에 언론권력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굳힌 신문들은 1997년 대선에서도 ‘킹 메이커’를 자임하며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손석춘, 2012, 533쪽).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이회창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보도를 했고, 취임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이어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되면서 주요 언론사 사주들이 탈세와 횡령 혐의로 고발,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신문에 대해서는 언론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신문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으나(김주언, 2009, 540쪽),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단계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특정언론의 여론 독과점을 막고 언론자유를 균등히 배분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늘어났다(장호순, 2005). 언론자유보다는 다양성에 무게중심이 옮겨진 것이다. 그러나 무가지와 경품, 상품권이 난무하는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내건 각종 조치들은 보수신문과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세무조사뿐 아니라 2001년 사문화됐던 ‘신문고시’⁽⁵⁾를 부활시킴으로써 정치적 압박으로 보수신문을 통제한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김주언, 2009, 542쪽).

4) 노무현 정권: <오마이뉴스>와 안티조선운동

‘건강한 긴장관계’를 내세운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언론개혁 프레임 이어받아 보수신문을 중심으로 한 언론권력을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모든 시민이 기자”라는 기치 아래 2002년 출범한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을 힘입어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언론권력으로 부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조선일보의 인터뷰를 거절한 데 이어 대통령 당선 후 첫 인터뷰를 <오마이뉴스>와 가짐으로써 기존의 신문권력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시민사회의 언론개혁 운동이 신문법 개정과 ‘안티조선운동’으로 구체화되면서 보수신문과의 대립각 중심에 대통령이 자리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라는 특정신문에 대한 정치, 사회세력의 조직적 거부와 공격은 한국의 언론과 정치가 얼마나

(5) 신문고시의 원래 명칭은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다.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김세은, 2010). 나아가, 정치권력 대 언론권력뿐 아니라 신문 대 방송, 신문 대 인터넷, 보수신문 대 진보신문, 중앙지 대 지방지 등 언론장 내 대립구도 역시 복합화하면서 첨예하게 전개되었다. 제도적으로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신문법,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서 보수신문들의 반발을 자극하기도 했다.

공영방송 양사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에서는 연일 보수신문을 비판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언론 간 갈등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노무현 정권 시기에 한국 신문의 정파성 지형은 더욱 공고하게 양분되었고, 앞서 상업주의로 인한 신뢰 하락에 이어 정파성으로 인한 신뢰 하락이 이어지고 그 여파로 신문의 사회적 영향력은 점차 감소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노무현 정권 말기 감행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의 기자실 폐쇄 조치는 일부 진보신문들에게조차 지지받지 못함으로써(김주연, 2009, 501쪽) 정권에 대한 언론의 반감이 좀 더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5) 이명박 정권: 미디어법과 신문사의 방송 진출

1987년 6.10 항쟁 이후 무려 30년에 걸친 언론 민주화 노력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사 지배구조 장악을 통한 강압적 통제에 의해 기반이 약화되었다. ‘전방위적 언론장악’을 위해(김주연, 2009, 571쪽) 이명박 정권은 5년 간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주요 방송사 임원들을 특정학교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채웠고, 이에 반대한 언론인 450여 명에 대해서는 해직(19명), 정직(132명), 감봉/감급(66명), 경고(120명), 대기발령(66명) 조치했다.⁽⁶⁾

언론을 산업으로 보는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적 미디어 기업의 출현’, ‘미디어 산업 선진화’의 명분을 내걸고 신문방송 교차소유를 허가하는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자신의 당선을 도왔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등이 각각 주축이 된 4개 컨소시엄에 종합편성채널을 허가해 주었다(손석춘, 2012, 539~540쪽). 일부 전문가들은 KBS의 수신료 인상 및 광고 축소를 전제로 한다면 1~2개의 종합편성채널이 미디어시장에 진입해도 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KBS 수신료와 무관하게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

(6) 국회 문방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 발표 자료.

정책적으로 선정되었다(이상기, 2011, 28쪽). 2011년 12월 1일 TV조선, JTBC, 채널A, MBN⁽⁷⁾ 등이 개국했고 방송에 진출한 보수신문들의 정치적 개입은 더욱 노골화되고 그 영향력은 신문 부수 하락과 상관없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3. 민주화 이후 시기 신문의 주요 사건과 변화

1) <한겨레신문>의 창간

1980년대 후반은 한국 신문 시장의 구조를 바꾸어 놓은 시기라 할 수 있는데, 6.29 선언은 언론기업의 자율화를 선언하여 신문 발행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1987년 11월 10일 언론기본법 폐지안 및 정간물등록법,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국회 통과로 5공화국의 언론통제법인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대신 정간물등록법과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이 통과되어 언론시장이 자유화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1987년 12월 12일 문공부가 1980년 등록취소 정간물의 복간 허용 방침 발표하면서 각지에서 1980년 언론통폐합 당시 폐간되거나 통합되었던 언론사들의 복간이 줄을 이었다.⁽⁸⁾

이렇게 1987년 새로이 제정된 정기간행물에 관한 법률은 한국 신문시장을 독과점 체제에서 자유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박광순, 2008, 294쪽). <한겨레신문>은 이러한 법률 개정과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한겨레신문>의 창간운동은 1988년 5월 그 결실을 맺었는데, 이는 “제5공화국의 철권 통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운동이 직선제를 관철하고, 그에 따른 민주화 공간의 확대 속에서 진행”된 것이었다(고승우, 2004, 11쪽).

<한겨레신문>의 창간이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한겨레 이전에는 친정부 보수를 표방하는 신문들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반공, 친미, 친기업 등의 한국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신문 지면의 편집에 반영되어 재생산되고 있었다. 정경유착(政經癒着)이라는 말처럼 권언유착(權言癒着)의 세상이 1960년대 이래 별

(7) MBN의 경우 기존의 종합뉴스채널을 2011년 5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받고 2011년 12월 종합편성채널로 개국하였다.

(8) 한국신문협회 웹사이트 <http://www.presskorea.or.kr/> 참조.

도전이나 성찰 없이 지속, 가속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제도언론’이라는 말로 묶여있던 한국 언론에 일대 균열을 가져왔다. 1975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자유언론실천선언 등으로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과 1980년 군사정부에 의해 언론통폐합 당시 숙정 대상이 됐던 해직 언론인들이 <한겨레신문>의 창간발기인 모임의 주축이 되었고, 1987년 말부터 전국민 대상 창간 기금 모금운동을 벌여 27,223명으로부터 50억 원을 모금하면서 창간을 위한 인적, 물적 기틀을 마련했다(<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참조).



사진 1. <한겨레신문> 창간호

<한겨레신문>은 민주, 민족, 통일의 3대 창간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적 가치와 사회정의를 지향하면서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친 온갖 사실들을 언제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숨김없이 공정하게 보도할 것”이며, “노동자, 농민, 여성 등 기존언론이 소홀히 다루는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도할 것”을 천명했다. 5월 15일 한국 신문 최초로 한글

전용 가로쓰기 체제의 36면 창간호가 50만부 발행되었고, 이후 매일 8면을 발행하면서 월 구독료는 2,500원, 1부 100원으로 책정되었다(<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참조).

2) ‘자율경쟁시대’의 신문 편집: 다양한 시도와 변화⁽⁹⁾

민주화 조치 이후 신문 산업에의 참여자들이 <한겨레신문>뿐 아니라 급격히 늘어나면서 1990년대 들어 ‘신문전쟁’으로 일컬어지는 과열경쟁 양상이 벌어지게 되었다.⁽¹⁰⁾ 이로 인해 “개별기업들로서는 심각한 경영상의 문제와 시장행위 재조정의 필요가 생겨났으며, 더불어 전체 신문산업의 면에서는 중요한 사회정치적 역할을 하는 산업조직의 정당한 준립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김남석, 2001, 13-14쪽). 재벌기업의 신문 시장 진입도 1990년대의

(9) 전반적인 신문 약사는 한국신문협회 웹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주요 부분을 요약, 발췌했다.

(10) 6월 항쟁 당시 지방지를 포함해 30개에 불과하던 일간신문은 불과 3년만에 85개로 늘어났고, 주간지는 226개에서 1,028개로, 월간지는 1,298개에서 2,460개로 늘어났으며, 1998년 일간신문의 수는 115개로 늘어났다(손석춘, 2012, 506쪽).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한화그룹의 <경향신문>,⁽¹¹⁾ 현대그룹의 <문화일보>⁽¹²⁾ 등이다. 순복음교회의 <국민일보>, 통일교 재단의 <세계일보> 등 종교자본에 의한 신문도 이때 창간되었다.

이러한 경쟁은 저널리즘이 아닌 양적 경쟁에 치우친 채 물량 공세와 부수 확장에 매몰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신문의 내용적 측면은 시민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하고 있었다. 케이블TV, 위성방송, 온라인 신문 등 다양한 경쟁매체가 등장하면서 미디어 환경이 다변화되었지만, 신문은 그에 대해 효과적인 공동대응을 하지 못한 채 집안 싸움에만 열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었다.

(1) 증면 경쟁과 컴퓨터 제작

독자의 이탈과 광고의 감소로 인해 신문 산업이 위축되면서 신문업계는 지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치열한 증면 경쟁이 벌어지게 되어 1990년 24면, 1994년 32면, 1995년 40면, 1999년까지 40~48면이 발행되었다(박광순, 2008, 294쪽). 또한 이 시기에 신문 제작에 컴퓨터 기술이 도입되면서 그래픽 이미지, 정보그래픽, 특수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새로운 시각적 편집요소들이 지면에 등장하고 컬러사진의 게재 수도 증가되었다(박광순, 2008, 294쪽).

(2) 석간에서 조간으로, 세로짜기에서 가로쓰기로

석간 중심이던 한국 신문이 조간으로 바뀐 것도 이 즈음이다. 1991년 4월 <경향신문>을 시작으로 12월에는 <한국일보>가 조석간을, 1993년 4월 <동아일보>가, 1995년 4월 <중앙일보>가 조간으로 전환하면서, 광고 유치에 유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10개 중앙일간지 중 9개가 조간으로 전환하여 치열한 조간경쟁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손석춘, 2012; 한국신문협회).

또한 세로짜기 편집체제가 가로쓰기 편집체제로 전환된 것도 한국 신문 역사에서 커다란 변화이다. 1988년 <한겨레신문>에 이어 1995년에는 <중앙일보>가 전면 가로쓰기를,

(11) 경향신문은 1946년 10월 창간되었으나 폐간과 복간을 거쳐 1990년 8월부터 1998년 3월까지 7년 8개월 동안 한화그룹을 모기업으로 한 이른바 '재벌언론'의 소유구조를 유지하다, 1998년 4월 한화그룹과 분리된 후 사원들이 100% 신문사 주식을 소유한 완전사원 주주회사로 소유구조가 바뀌게 되었다(김남석, 2001, 20쪽).

(12) 1991년 11월 창간된 문화일보 역시 년 현대그룹이 경영에서 손을 떼면서 1998년 3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었고 같은 해 5월 문우 언론재단, 동양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주요주주가 되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996년부터 부분 가로쓰기에서 1998년 전면 가로쓰기로 전환되었다(박광순, 2008, 295쪽). 당시 신문들은 굵직한 사건들이 터졌을 때 호외를 발행함으로써 텔레비전과 속보성에서 경쟁하면서 독자에게 다가가려 애썼는데, 아래 호외 사진들을 보면 세로쓰기와 한자혼용의 편집을 볼 수 있다.



* 출처: 한국신문협회.

사진 2. 1990년대 발행된 호외

(3) 컬러화와 섹션화

또한 사회면의 컬러화와 신문의 섹션화도 이 시기에 단행되면서 각 계층의 독자들을 타겟(target)으로 하는 지면의 전문화가 시작된 시기라 할 수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지면의 컬러화가 증가하고 기획뉴스와 분석기사가 증가하면서 질적인 변화가 수반되었다(박광순, 2008, 295쪽). 섹션화는 〈중앙일보〉가 1994년 3월 제2창간을 선언하고 전문기자제를 도입하는 등 ‘품질제일주의’를 위한 일련의 변혁을 꾀하면서 결정한 지면체제상의 변화였으며, 이후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48면 증면과 함께 섹션 발행을 뒤따름으로써 섹션신문은 한국 신문의 전형적 판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이종숙, 2013,

291~292쪽).

(4) 신문부수공사제도(ABC) 도입

또한 허위 발행부수가 난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광고주협회 등이 신문업계에 신문부수공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체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1996년 6월 13일 5개 신문만을 대상으로 부수공사 1차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한국신문협회).

(5) 외환 위기와 재벌신문의 분리

1997년 11월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언론사도 구조 조정이 시작되어 1999년 2월까지 총 8,383명이 언론계에서 퇴직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때 재벌기업 신문들이 그룹으로부터 분리되면서 1998년 2월 <경향신문>이 한화그룹으로부터, 같은 해 11월에는 <문화일보>가 현대그룹으로부터, 이듬해 4월에는 <중앙일보>도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되었다(한국신문협회).

3) 경쟁 격화와 신문 전쟁의 정점: '자전거 신문'과 보급소 살인 사건

발행부수에 목을 맨 신문 간 극심한 경쟁은 급기야 보급소 살인사건으로 귀결되면서 세간에 충격을 주었다. 자전거와 선풍기 등 신문구독료를 상회하는 경품과 현금 지급 등 신문시장 질서의 난맥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1996년 7월 서울 인근 신도시에서 일어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보급소 간의 살인 사건은 질적 경쟁을 도외시한 채 벌이는 과열경쟁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비극적 실례이다. 당시 서울 인근 신도시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신문강제 투입, 이른바 '자전거 신문'으로 일컬어지는 판촉경품 제공 등이 일반화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과열 판매경쟁은 자금력이 튼튼한 주요 일간지들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주용성, 1996, 7, 17).

이런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신문업계는 한국신문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수습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신문사끼리 공정하고



* 출처: 정연구(2006, 12, 12). 왜 외국에는 '자전거·비데' 경품 없을까? <오마이뉴스>.

사진 3. 자전거 경품을 내세운 호객

정상적인 판매경쟁을 통해 품위있는 정보지식산업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견지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협회 내에 ‘신문판매질서 공동감시기구’를 설치하기로 했고 무가지(無價紙)가 유료 구독부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주용성, 1996. 7. 17).

4) 타블로이드 무료신문의 범람과 쇠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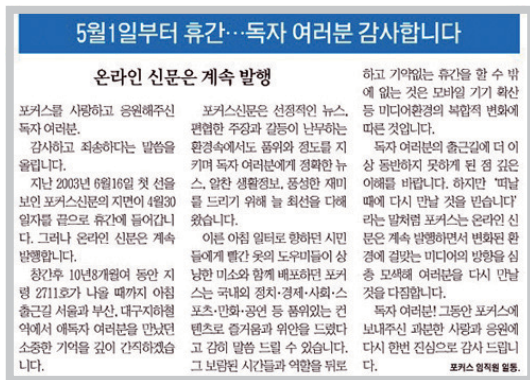
2000년대 들어 가장 눈에 띈 신문의 변화는 출근길 지하철역 앞에서의 무료신문 배포였다. 2002년 5월 31일 국내 최초로 등장한 무료신문 <메트로>가 성공을 거둔 이후 무료신문 창간 붐이 일어, 종합 시사지인 <데일리포커스>(2003년 6월 창간)와 <AM7>(2003년 11월 창간), 만화지인 <데일리썸>, 스포츠지인 <굿모닝서울>, <스포츠한국> 등이 잇달아 창간되었다.



사진 4. <메트로> 2002년 6월 11일자 제8호, <데일리포커스> 2002년 6월 16일자 창간호

한 때 ‘신문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등장했던 무료신문은 경기 침체와 광고 산업의 위축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2009년에 들어서서 콘텐츠의 60% 이상을 만화로 채웠던 데일리썸이 5년 만에 폐간되었다(이은주, 2009).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무료신문은 더욱 어려워졌다. 지하철에서 무료신문은

무료신문의 정점을 이룬 2007년 9월에는 수도권 기준 9개, 지방(<목포일보>, <광주매일해피데이>, <광주드림>, <메트로부산>) 4개 신문, 종합지 6개, 스포츠지 1개, 경제지 1개 등이 발행되고 있으며, 전체 신문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2006년), 수도권에만 뿌러지는 무료신문 부수는 약 300만 부에 이르렀다(선샤인 지식노트, 2008; 이은주, 2009).



* 출처: 기자협회보(2014. 5. 7).

사진 5. <포커스> 휴간 알림

스마트폰으로 대체되었고,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전체 신문 광고시장의 5~6%를 차지하던 무료신문 광고 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2년도 무료신문 매출액은 전년대비 -35.1%, 당기순이익은 -70.73%를 기록했고 <포커스>와 <메트로>의 2012년도 매출액이 2008년도와 비교하여 60.76% 수준인 494억 원으로 신문인쇄비와 가두 배포 및 거치대 운영에 필요한 유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다(심영섭, 2014. 7). 2013년 4월 <문화일보>의 자매지인 <AM7>이 무기한 휴간에 들어가고 석간으로 발행되던 무료신문 <시티신문>도 5월 24일자를 끝으로 폐간했다. 이후 대표적인 무료신문 <포커스>가 2014년 5월 지면발행을 중단하게 되었다(강진아, 2014. 5. 7). <데일리노컷뉴스> 역시 7월 폐간하고, 현재 <메트로>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5) <중앙일보> 베를리너판 전환

2000년대 전 세계를 휩쓴 무료신문은 유가지 신문에 부수 감소 및 경영 악화를 가져왔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신문들이 판형의 콤팩트화를 단행한다.⁽¹³⁾ 영국에서 불어닥친 종이신문의 소형화 바람은 타블로이드 무료신문의 범람으로 고심하던 한국 신문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간 일반적으로 권위지는 대형판(broadsheet), 대중지는 타블로이드판(tabloid)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젊은 독자를 유인하기 위한 혁신 방안의 하나로 판형 축소를 받아들이면서, 국내에서는 <중앙일보>가 2009년 3월 베를리너판(Berliner)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중앙일보>의 판형 전환은 무료신문뿐 아니라 “뉴미디어 기기들에게 점차 빼앗기고 있는 독자층을 묶어두기 위한 고육책”으로서 당시 <매일경제>, <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과 같은 주요 신문사들이 <중앙일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나(엄호동, 2009. 3. 16), <중앙일보>를 제외한 다른 신문들은 윤전기 교체에 필요한 초기 도입 비용의 문제⁽¹⁴⁾ 및 지면 감소로 인한 광고 효과 우려 등으로 인해 결국 판형 전환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중앙일보>의 시도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독자들의 생활 패턴 변화에 호응하려는

(13)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가 2003년 9월 타블로이드 판형 동시발행 이후 2004년 5월부터는 타블로이드 판형만을 발행했고, 타임즈(The Times)는 2003년 11월 타블로이드 동시발행을, 가디언(The Guardian)은 베를리너판형으로 전환했다(김세은, 2004).

(14) 중앙일보는 새판형 신문을 내기 위해 지난해 일본에서 윤전기 6대를 1500억원을 들여 도입했다(엄호동, 2009. 3. 16).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불과 몇 년 새에 급격하게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모바일화할 것을 예측하지 못한 근시안적 처방이었다는 점, 또한 내용의 혁신보다는 외형적 변화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 출처: 전은경·정은진(2009. 5). 베를리너로 판형 바꾼 <중앙일보>. <월간 디자인>.

사진 6. 신문 판형 비교

- 1 대판 391X545mm(대부분의 국내 신문 규격)
- 2 베를리너판 323X470mm(새로운 <중앙일보>의 크기)
- 3 타블로이드판 272X391mm(<인디펜던트> <월스트리트 저널>, 무가지 등)

6) 스포츠신문의 몰락

스마트폰의 일상화가 초래한 변화는 무료신문에 그치지 않고 스포츠신문에까지 몰락을 가져왔다. 스포츠신문은 2002년을 정점으로 무료신문에 밀려 급격히 무너지면서 스포츠신문 4장 중 하나였던 <스포츠투데이>가 2006년 4월 문을 닫았다.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등도 사세가 예전만 못해 구조조정을 겪었으며, 더 큰 문제는 종합일간지 역시 시장 흐름을 제대로 좇지 못할 경우 무료신문과 같은 처지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김창남, 2015. 10. 7).

스포츠신문은 트래픽을 겨냥한 선정적인 온라인 콘텐츠에 밀려 입지가 더욱 축소되면서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제작비 절감에 구조조정이 일상화됐고, 스포츠신문의 경쟁력이던 연예·스포츠 분야 고품격 콘텐츠는 줄어들고 트래픽을 올리기 위한 선정적 기사, 대기업 광고를 겨냥한 경제 관련 기사가 지면을 채우고 있다(김희영, 2014. 8. 20).



* 출처: 김희영(2014. 8. 20).

사진 7.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1면(2014년 8월 20일자)

4. 신문의 이념적 분화와 독자의 신뢰 변화

1) 신문의 이념적 분화와 정파성

앞서 살펴본 대로, 민주화 시대 자율경쟁 상태에서 한국 신문은 기업화와 함께 정치화, 권력화의 길로 접어들어 정치 권력과의 줄다리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저널리즘을 기반으로 여론 형성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파성을 무기로 스스로 정치 권력의 형성, 유지 과정에서 저널리즘 본령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참여자(player) 역할을 시도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하겠다.

더욱이 1990년 대 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문의 “이념적 차이가 양극단으로 확대되는 성향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를 윤영철(2001)은 ‘언론과 정당의 병행관계(press-party parallelism)’로 설명한다(37쪽). 다시 말해, “신문과 정당이 동일한 이념적 지향성을 드러내고” 이로서 “신문들 간의 이념적 대결양상은 헤게모니의 재정립 혹은 수정과정에서(...) 일종의 대리전 성격을 띠”면서 “사회세력의 이념적 시각을 대변하는 보도틀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윤영철, 2001, 37-40쪽).

언론의 이러한 정파적 행태는 이른바 ‘조중동’ 대 ‘한경대’⁽¹⁵⁾라는 보수신문과 진보신문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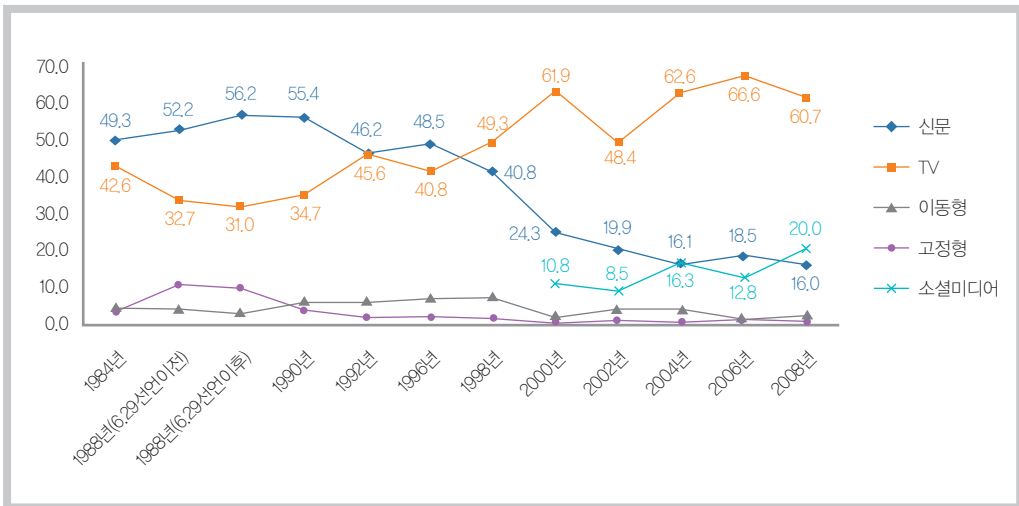
(15) ‘조중동’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한경대’는 한겨레, 경향신문, 대한매일을 가리킨다. 대한매일은 2004년 원래 제호인 ‘서울신문’으로 다시 바뀌었다.

대립구도를 만들었고, 이들의 대립은 지면을 통해 한국 사회의 많은 사안들을 평가하기에 따른 진영논리로 접근, 전개하는 갈등 양상을 초래했다(채백, 2015, 469쪽).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이 교차 집권함에 따라 이들 언론의 정파성은 더욱 강화되어 언론 개혁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대결과 분열이 조장되었으며, 이러한 행태는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양승목(2007, 179쪽)이 오늘날 언론이 직면한 신뢰도 위기가 언론만의 문제가 아닌 언론과 정부의 관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의 위기의 일부라고 한 지적은 바로 그런 점을 강조한 것이다.

2) 신문에 대한 독자의 신뢰 변화 및 현황

(1) 신문에 대한 신뢰 하락과 그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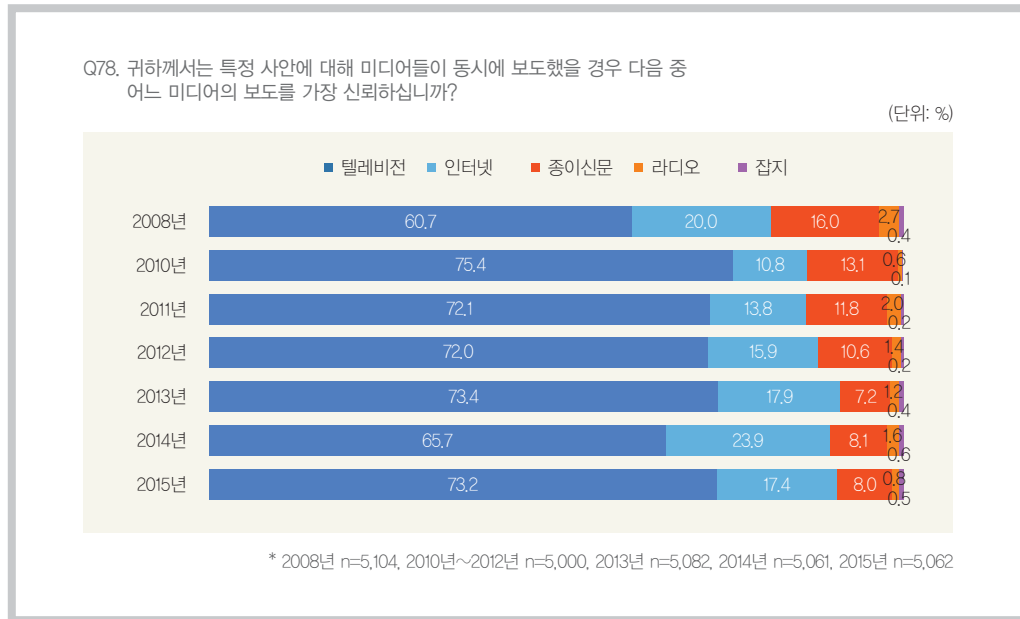
그림 3.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여러 매체가 동시에 보도했을 경우 어떤 매체의 보도를 가장 신뢰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인데, 1990년까지는 신문에 대한 신뢰가 다른 미디어에 비해 월등히 높았지만 1992년을 기점으로 텔레비전에 역전되는 현상을 보인다. 1996년 한 차례 상승했던 신문의 신뢰도는 1998년부터 견잡을 수 없을 만큼 떨어져 2000년에는 24.3%, 2002년에는 19.9%를 기록하게 되었고, 2008년 들어서는 인터넷에도 뒤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출처: 오수정(2008. 7). 148쪽.

그림 3. 동시보도 시 가장 신뢰하는 매체(1984~2008년)

이러한 신문 신뢰도의 하락 추세는 2008년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2015년까지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텔레비전에 이어 인터넷이 확고한 2위로 자리잡은 반면 종이신문은 2012년 10.6% 이후 2013년 7.2%, 2014년 8.1%에 이어 2015년 8.0%에 겨우 턱걸이한 상태이다. 과거 신문의 자리가 이제는 인터넷의 몫이 되어버린 것이다.



*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2015), 169쪽.

그림 4. 동시보도 시 가장 신뢰하는 매체(2008~2015년)

이렇게 신문의 신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신문에 대한 독자의 신뢰는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그에 대한 신문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독자들과의 종합적 인식에서 비롯된 평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양승목(2007)이 지적한 것처럼, 언론은 사회적 제도로써 사회 전체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언론의 신뢰도는 보도의 정확성,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형평성, 불편부당성, 유익성, 심층성 등은 물론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폭넓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151쪽).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신문의 신뢰 위기는 무엇보다 독자가 신문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모바일 환경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신문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채 민주화 이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달자라기보다는 자기이익을 추구하며 정치권력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신뢰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공정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정치권력과의 대립과 언론 간 갈등이 그러한 신뢰 하락에 큰 몫을 담당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준웅·최영재(2005)가 정리한 바와 같이, 경영 합리와의 소홀과 시장 지배력의 약화, 인터넷 등 새로운 뉴미디어의 도전에 따른 대응 부족, 신문 저널리즘 활동의 구조적 환경문제와 이에 근거한 신문의 내용적 부실, 신문의 정치적 개입에 따른 정파성, 한국 사회구성원의 이념적 분화에 따라 신문에 대한 요구와 평가기준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공정성 위기와 신뢰의 위기가 초래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언론사별 신뢰 현황

2008년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와 신뢰하는 매체는 KBS와 MBC가 1, 2위를 차지했고 네이버(3, 4위)와 다음(4, 5위) 순이었다. 신문의 경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영향력 있는 매체 4, 7, 9위와 신뢰하는 매체 4, 6, 8위에 올랐다. <한겨레>의 경우 신뢰하는 매체 10위였다.

표-1 2008년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와 가장 신뢰하는 매체(상위 10순위)

(단위: %)

영향력 있는 매체						신뢰하는 매체					
순위	언론사명	비율	순위	언론사명	비율	순위	언론사명	비율	순위	언론사명	비율
1	KBS	31.6	6	SBS	3.6	1	KBS	30.1	6	동아일보	3.1
2	MBC	21.8	7	동아일보	2.2	2	MBC	21.3	7	SBS	3.0
3	네이버	17.3	8	YTN	2.1	3	네이버	13.7	8	중앙일보	2.8
4	다음	4.1	9	중앙일보	2.0	4	조선일보	5.2	9	YTN	2.0
5	조선일보	4.0	10	야후	1.0	5	다음	3.3	10	한겨레	1.6

* 출처: 오수정(2008. 7), 14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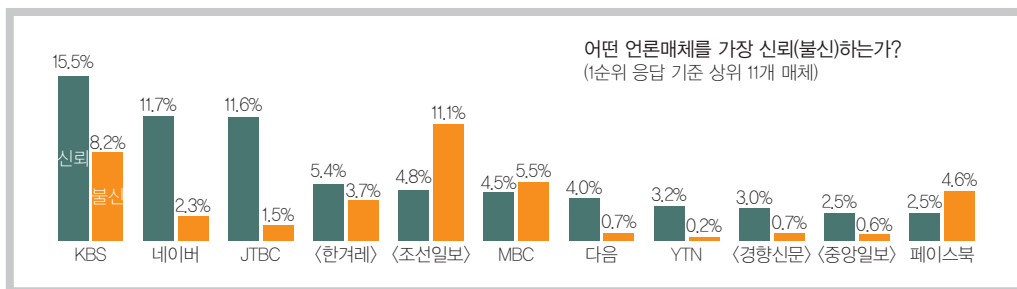
그렇다면 2016년 오늘날은 어떠할까? <시사인>과 <시사저널>의 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두 조사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시사인>의 조사는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사저널>은 10개 분야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① <시사인> 조사 결과

먼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사인> 조사 결과이다. “방송과 신문·포털·SNS 등 매체 형태를 불문하고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두 가지”를 물어본 결과,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순위 기준으로는 KBS 15.5%, 네이버 11.7%, JTBC 11.6%, <한겨레> 5.4%, <조선일보> 4.8%, MBC 4.5%, 다음 4.0%, YTN 3.2%, <경향신문> 3.0%, <중앙일보> 2.5%, 페이스북 2.5% 순서로 나타났고, 중복응답 기준으로는 KBS, JTBC, 네이버, MBC, <한겨레>, 다음, <조선일보>, YTN, <경향신문>, <중앙일보>, 페이스북 순으로 나타났다(전혜원, 2016. 9. 20).

네이버를 신뢰하는 언론매체로 보는 응답자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은 앞서 2008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주목할 만하다. <시사인> 조사에서도 네이버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이 2014년 7.5%, 2015년 8.6%, 2016년 11.7%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을 가장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2.5%를 기록한 반면,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중 신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모바일 시대 신문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징표와도 같다고 하겠다. <한겨레>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은 2014년 8.4%, 2015년 7.0%, 2016년 5.4%로, 조선일보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도 2014년 8.1%, 2015년 7.3%, 2016년 4.8%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전혜원, 2016. 9. 20).

<시사인>의 조사가 흥미로운 점은 불신하는 매체를 물었다는 것이다. 가장 불신하는 언론매체(1순위 기준)는 <조선일보>(11.1%), KBS(8.2%), TV조선(6.5%) MBC(5.5%), 페이스북(4.6%), <한겨레>(3.7%) 순서였고, 가장 신뢰·불신하는 언론매체 조사 결과(1순위 기준), JTBC와 네이버는 신뢰는 높고 불신이 낮은 범주로, <조선일보>·MBC·TV조선·페이스북은 신뢰는 낮고 불신이 높은 범주로 분석되었다(전혜원, 2016. 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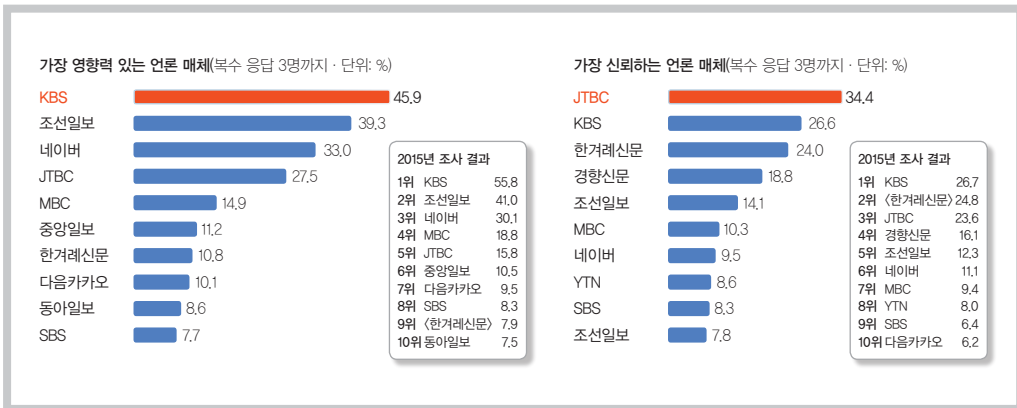
* 출처: 전혜원(2016. 9. 20).

그림 5. 가장 신뢰하는 매체와 불신하는 매체: <시사인> 조사 결과

② <시사저널> 조사 결과

<시사저널>의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의 경우 KBS가 45.9%로 선두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조선일보> 39.3%, 네이버가 33.0%였다. 신문의 경우 <중앙일보>가 11.2%, <한겨레>가 10.8%, <동아일보>가 8.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각각 6, 7, 9위를 차지했다.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15.8%로 5위였던 JTBC가 27.5%로 4위가 되었으며 7.9%로 9위였던 <한겨레>가 약간 상승했고 7.5%로 10위였던 <동아일보>가 9위로 올라선 것을 제외하면 순위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한편,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의 경우 2015년 23.6%로 3위였던 JTBC가 34.4%로 1위에 올랐다. KBS는 수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2위로 내려앉았고, 작년 24.8%로 2위였던 <한겨레>는 24.0%로 3위, <경향신문>은 4위로 순위 변동은 없지만 18.8%로 소폭 상승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영향력은 2위지만 신뢰도에서는 14.1%로 5위에 그쳤으며, 네이버 역시 신뢰도에서는 9.5%로 7위를 기록했다.



* 출처: 안성모(2016. 9. 13).

그림 6.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와 신뢰하는 매체: <시사저널> 조사 결과

5. 맺음말: 신문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적 가치

바야흐로 디지털 시대이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포털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뉴스를 보는 사람은 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또 포털을 통해 보는 뉴스는 어느 언론사 것인지 중요하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것이 요즘 대부분의 수용자들이다. 온갖 형태의 뉴스 서비스가 인터넷과 모바일 상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런 현실에서 '전통적'인 종이신문은 독자와 영향력의 감소라는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절박하게 모색하고 있다. 외국 유수의 신문들도 형편이 별다르지 않다.

과연 신문은 사라질 것인가? 이 글 맨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때 신문의 의미는 중의적이다. 종이신문과 뉴스, 즉 신문의 콘텐츠를 구별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종이라는 '신문 매체'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신문 콘텐츠'가 위기인 것은 아니다. 환경을 감시하고 정보의 홍수 시대에 믿을 만한 콘텐츠를 생산, 제공해주는 신문의 본래적 기능은 더욱 각광받을 수 있다. 일렬로 배치하는 포털이나 앱 상의 배열 대신 전문가가 뉴스가치와 의미를 해석하게 도와주는 신문 지면의 편집 기능이 필요할 수도 있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뉴스의 양식과 내용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지면서 수용자에게의 접근성을 더욱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문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무엇보다 저널리즘의 본질에 충실한 콘텐츠와 그에 기반한 독자의 신뢰가 자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상업주의와 정파성을 털어내고,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본래적 기능에 충실할 때 '신문'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 정보와 뉴스 없이 인간의 삶은 가능하지 않고, 민주주의 역시 존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바뀌지 않는 한 좋은 뉴스를 생산하는 신문은 결코 외면 받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여기에는 분명 독자의 몫도 남겨져 있다.

참고문헌

- 강진아(2014. 5. 7). ‘포커스’ 무기한 휴간... 무료신문의 추락: ‘메트로’ ‘데일리노컷’만 남아. <기자협회보>.
- 고승우(2004). <한겨레 창간과 언론 민주화>. 서울: 나남.
- 김남석(2001). 80년대 후반 신문산업의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구조변화를 위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5-61.
- 김세은(2004). <신문 산업의 경쟁과 변화: 영국을 중심으로>. 서울: 이채.
- 김세은(2010). 한국 보수신문의 유사성과 차별성: 조선-중앙-동아일보 사설의 이념성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15호, 37-78.
- 김주연(2009). <한국의 언론 통제>. 제2판. 서울: 리북.
- 김창남(2015. 10. 7). 무너진 무료신문 시장, 일간지는 안전할까: 뉴스 소비패턴 변화로 폐간·업종전환 잇달아... 시장변화 주시해야. <기자협회보>.
- 김택환(1995). 2000년대의 신문저널리즘. <관훈저널>, 59호, 113-136.
- 김희영(2014. 8. 20). 일상화된 구조조정... 스포츠신문의 몰락. <기자협회보>.
- 박광순(2008).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신문의 지면변화: 조선·동아일보(1984~2006)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권 4호, 278-298.
- 손석춘(2012). 언론권력의 출현과 언론 개혁 운동. 송건호 외, <한국언론 바로 보기 100년>(504~549쪽). 파주: 다섯수레.
- 심영섭(2014. 7). <포커스> 휴간을 계기로 본 무료신문의 과거, 현재, 미래. <신문과 방송>.
- 안성모(2016. 9. 13). [2016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언론매체 / 신뢰도 JTBC, 영향력 KBS. <시사저널>, 1404호.
- 양승목(1995).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의 성격 변화: ‘자율언론’의 딜레마. 유재천 외, <한국사회변동과 언론>(93~146쪽). 서울: 소화.
- 양승목(2007). 신뢰도 하락과 위기의 한국 언론. 임상원·김민환·양승목·이재경·임영호·윤영철, <민주화 이후의 한국 언론>(139~182쪽). 서울: 나남.
- 엄호동(2009. 3. 16). ‘베를리너판’ 중앙일보의 생존방식. <경향신문>.
- 연합뉴스(1996. 7. 25). 신문協, 자율경쟁규약 일차안 확정. <연합뉴스>.
- 오수정(2008. 7). 200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①. <신문과 방송>.
- 윤영철(1995). 사회변동과 언론통제. 유재천 외, <한국사회변동과 언론>(181~225쪽). 서울: 소화.
- 윤영철 (2001). <한국민주주의와 언론>. 서울: 유민문화재단.
- 이상기(2011). 언론의 상업주의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56호, 26-47.
- 이은주(2009). 무료신문의 현재와 미래: 무료신문의 성장과 독자와의 소통. <무료신문의 현재와 전망> 세미나 발제문.
- 이종숙(2013). 한국 신문 지면을 통한 ‘문화’의 구성: 1896~1996. <한국 신문의

사회문화사) (250~307쪽).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준용 · 최영재(2005). 한국 신문 위기의 원인: 뉴스 매체의 기능적 대체, 저가치 제공, 그리고 공정성 위기. <한국언론학보>, 49권 5호, 5-35.
- 장호순(2005). 신문산업 선진화와 민주주의: 신문시장의 다원화와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한국언론재단 주최 한국 사회와 신문저널리즘 세미나 발제문.
- 전은경 · 정은진(2009. 5). 베를리너로 판형 바꾼 중앙일보. <월간 디자인>.
- 전해원(2016. 9. 20). JTBC가 KBS · MBC 앞질렀다. <시사인>, 470호.
- 정연구(2006. 12. 12). 왜 외국에는 '자전거 · 비데' 경품 없을까? <오마이뉴스>.
- 정옥재(2006. 7). 창간 6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의 자발성은... <인물과 사상>, 99호, 150-158.
- 조운호(2016. 6. 19). 신문구독료 소득공제해주면 구독 늘어날까? <미디어 오늘>.
- 주용성(1996. 7. 17). 초점: 품질경쟁 벗어난 신문전쟁의 영향. <연합뉴스>.
- 채백(2015). <한국언론사>. 서울: 컬처북.
-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 <http://www.presskorea.or.kr/>
- 한국언론진흥재단(2015). <2015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부록. <중앙일보> 사례로 본 1990년대 이후 한국 신문의 주요 변화

신문의 미래: 빅데이터가 된 뉴스⁽¹⁾

박대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06

1. 들어가며

‘윤전기를 멈추다(STOP PRESS)’.

〈가디언〉(the Guardian), 〈더 타임스〉(the Times) 등과 함께 영국 4대 일간지 중 하나로 꼽히는 〈인디펜던트〉는 2016년 3월 26일 마지막 종이신문을 발간했다. 종이신문 폐지를 결정하고 온라인매체로 완전히 전환한 것이다.⁽²⁾ 지난 2014년 5월엔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의 혁신보고서(Innovation)가 공개되면서 국내에도 큰 화제가 됐다.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즉 종이신문보다 온라인 신문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신문의 미래를 보는 틀은 다양하게 있다. 예를 들어 종이신문 자체의 미래를 볼 수도 있다(김위근, 이홍천, 2015.10.). 종이신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김위근, 2015.10.). 하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종이신문은 발행부수도 줄고 영향력도 떨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은 종이신문을 보지 않는다. 종이로 만들어진 신문은 공통처럼 점차 종말에 다가가고 있다.

종이신문은 사라져가도 신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신문은 이미 인터넷신문으로

(1) 이 글은 필자가 한국언론재단에서 발간한 여러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해 종합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본문에 참고문헌으로 표기했으며, 그 목록은 참고문헌에 포함했다.

(2) https://en.wikipedia.org/wiki/The_Independent

변화해왔다. 《2015년 한국언론연감》에 따르면 2014년 종이신문의 수는 1,314개인 반면 인터넷신문은 2,332개에 달한다. 대부분의 유력한 종이신문은 인터넷신문을 갖고 있기도 하다. 종이신문에 실린 거의 모든 기사는 종이보다는 인터넷으로 훨씬 많이 소비된다.

인터넷신문의 미래, 더 정확히 말해 뉴스의 미래 역시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생산 측면에서 신문사는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디지털 혁신에 성공해 새로운 플랫폼을 소유한 거대 미디어그룹으로 재탄생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스타 1인 기자들의 신디케이트들로 쪼개져 인터넷 생태계로 편입될 것인가? 뉴스 기자가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은 물론 R이나 파이썬(python)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도 배워야 하는가? 뉴스 생산자들은 지금까지 전문 언론인으로 한정될 것인가 아니면 사용자가 생산에서도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인가? 기사의 포맷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기사 길이는 모바일 환경에 맞게 짧게 바뀔 것인가 아니면 길더라도 심층적이고 스토리텔링이 강화된 롱폼 저널리즘(long-form journalism)이 대세가 될 것인가? 사물인터넷에 사용되는 센서나 드론, VR 등 다양한 기기를 활용한 저널리즘 현상이 활성화될 것인가? 뉴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예컨대 블로그 콘텐츠나 페이스북의 뉴스피드(newsfeed)에 올라온 친구의 글도 뉴스로 볼 수 있을까? 또 소비 측면에서 독자들은 PC나 스마트폰은 물론 스마트워치(smart watch)나 홀로렌즈(hololens)와 같은 증강현실 기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어떻게 뉴스를 이용할 것인가? 사람들은 포탈이나 소셜미디어, 메신저 등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뉴스를 소비할 것인가? 여기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룰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는 종이신문의 미래보다는,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뉴스를 중심으로 신문의 미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이신문은 사라져가도 뉴스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인터넷신문도 등장한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2010년 이후 모바일 시대의 인터넷신문은 그 이전의 PC(personal computer) 시대의 인터넷신문과도 다르다(박대민 등, 2014.12.). 더 나아가 신문의 미래를 읽어내기 위해선 현재의 다양한 양상 가운데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갈 핵심 모멘텀을 선별해야 한다. 이 글에선 그러한 핵심적 현상을 뉴스 기사의 빅데이터(big data)화로 보았다.

이 글에선 우선 2장에서 인터넷신문의 역사를 간략하게 다루고 종이신문이 인터넷신문으로 대체되는 흐름을 간략히 제시할 것이다. 이어 3장에선 신문산업의 변화를 종이신문의 플랫폼 기능 약화와 사용자 참여의 확대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저널리즘의 대두로 이어진다. 4장에선 새로운 저널리즘으로 뉴스 기사를 데이터화하는 스트럭처 저널리즘(structured journalism)과 데이터화된 뉴스를 사람이나 기계가 재구성하는

알고리즘 저널리즘(algorithm journalism) 및 큐레이션 저널리즘(curation journalism)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 5장에선 데이터가 된 뉴스를 뉴스 빅데이터로 개념화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구현한 뉴스 빅데이터(news big data)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³⁾의 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6-8장에선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와 서비스, 플랫폼의 미래상을, 그와 연결될 수 있는 현재의 주목할만한 사례들과 함께 모색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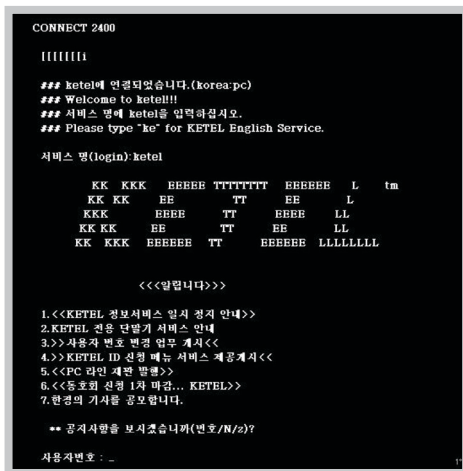
2. 인터넷신문의 역사

1) 인터넷신문의 역사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인터넷 신문 역사의 역사를 개괄해보자. 1991년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이 등장한 이후 미국 신문사들은 발 빠르게 온라인미디어 시장에 뛰어들었다. 1992년엔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이 미국 최초의 인터넷 신문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언론사에 종속되지 않은 순수 인터넷신문으로는 1999년 뉴저지주에서 <애틀랜틱 하일랜즈 헤럴드(Atlantic Highlands Herald)>가 최초로 주 의회 공식 승인을 받았다(이인희, 2013). 국내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1986년 한국경제신문이 데이콤에 ‘한국 경제 프레스텔(Korea Economic Prestel)’이란 이름으로 신문기사를 제공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1990년대 초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 PC통신에 언론사 뉴스가 제공됐다. 1994년 인터넷이 상용화된 뒤엔 1995년 3월 중앙일보가 인터넷뉴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언론사가 자체 인터넷뉴스 서비스를 담당하는 언론사닷컴을 자회사로 속속 설립하면서 인터넷신문 시대가 본격화됐다(최민재, 조영신, 2007.12.).

(3) www.bigkind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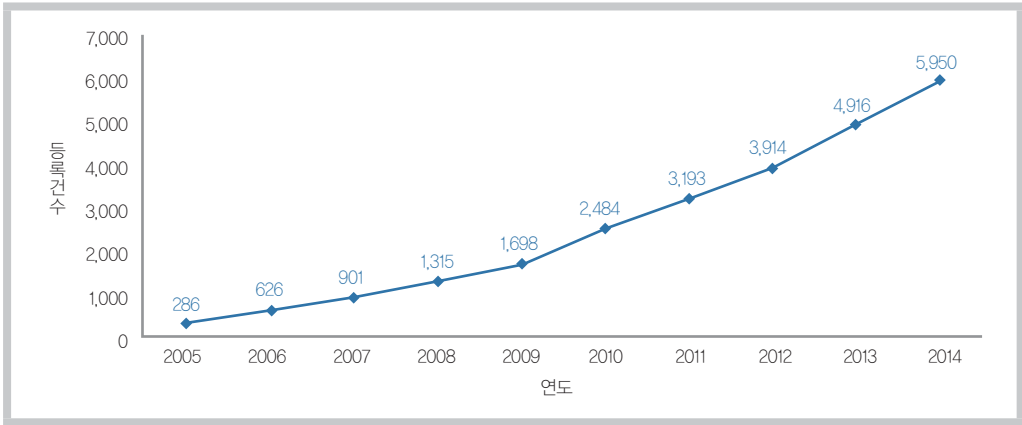
(4) <https://ko.wikipedia.org/wiki/%ED%95%98%EC%9D%B4%ED%85%94>



출처: www.thisisgame.com/webzine/series/nboard/212/?n=56767

그림 1. 한국경제 KETEL 접속 화면

언론사와는 별개로 웹진 형태에서 발전한 대안언론 형태의 독립형 인터넷신문도 등장했다. 1997년 11월 창간한 패러디저널 <보테저널>은 최초의 온라인 정기간행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98년 7월 창간한 <판지일보>를 비롯해, 2002년 2월 시민저널리즘을 표방한 <오마이뉴스> 등 다양한 인터넷신문이 등장했다. 이와 함께 2000년 1월 <머니투데이>를 시작으로 IT와 경제 전문 인터넷신문도 잇달아 창간됐다. 2000년대 전후로 인터넷신문이 속속 생겨나면서 관련 이익단체도 잇달아 생겨났다. 1998년 12월 언론사닷컴 중심의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생겨났고, 2002년 9월엔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2002년 10월엔 비교적 규모가 큰 인터넷신문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출범했다(최민재, 조영신, 2007.12.). 인터넷신문은 2005년 1월 제정된 신문법을 통해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인터넷 신문의 등록건수는 2005년 286건에서 2014년 5,950건으로 거의 20배 가량 늘어났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5a). 인터넷신문 외에도 이들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아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야후, 네이버, 구글과 같은 포털(portal)을 들 수 있다. 초창기에 검색할 콘텐츠가 풍부하지 않던 시절, 뉴스는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포털이 가장 초기에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 중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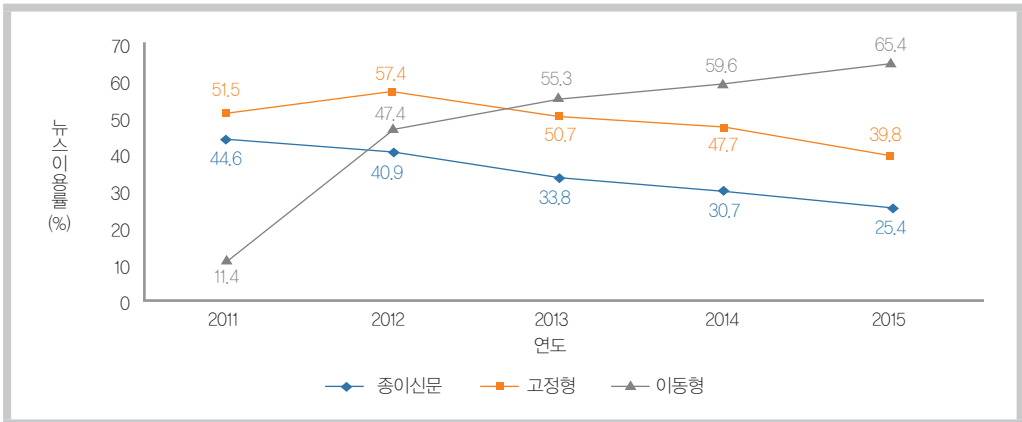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2015a)

그림 2. 등록된 인터넷신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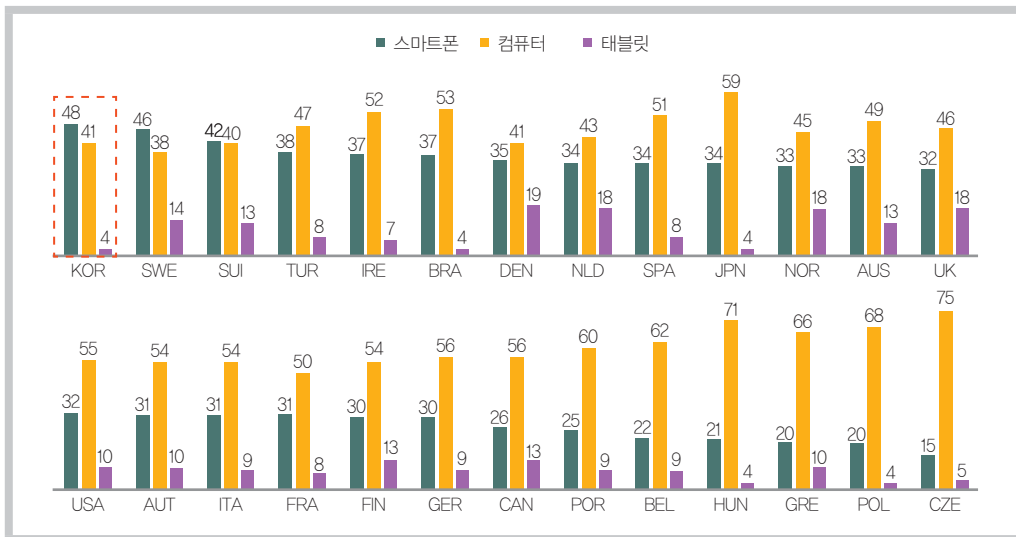
2) 뉴스 이용의 변화

국내서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은 2010년대에 들어 종이신문을 앞질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5 언론수용자의식조사에 따르면 미디어별 뉴스 이용률은 2015년 기준 인터넷 69.7%, 종이신문 25.4%로 2.7배나 차이가 난다. 특히 <그림 3>에서처럼 2013년부터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뉴스 이용이 PC를 통한 뉴스 이용보다 많아졌다. 2015년 현재 모바일 기기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65.4%로 PC를 통한 뉴스 이용률 39.8%에 비해 25% 포인트 이상 높았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5b).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2015b.)

그림 3. 미디어별 뉴스 이용률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2016.6.)

그림 4. 지난 주 온라인뉴스 소비를 위해 주로 사용한 기기

한국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뉴스 소비가 특히 활성화된 나라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영국의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와 함께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뉴스를 주로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비율은 한국(28%)이 그리스(35%), 스웨덴(34%), 노르웨이(33%), 핀란드(32%)에 이어 26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특히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온라인뉴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접하는 비율은 한국이 세계 1위(48%)를 기록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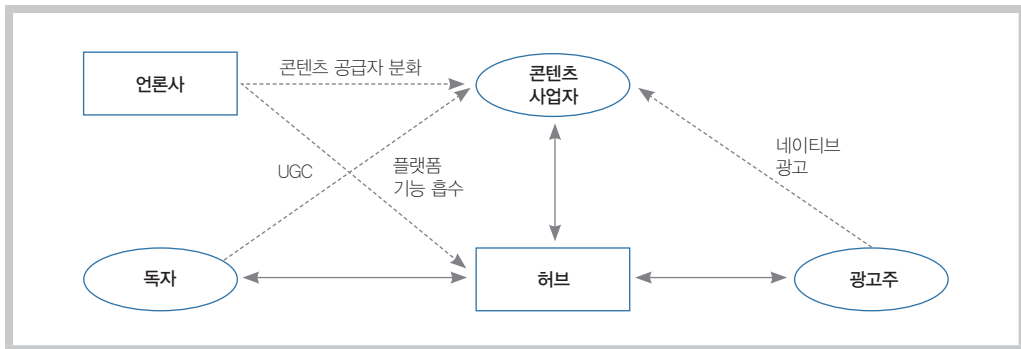
3. 2010년대 이후 신문산업의 변화

뉴스 포털의 등장으로 영향력을 잃어가던 신문은 2010년대에 들어 모바일 기기가 확산되고 소셜 미디어가 활성화되는 모바일 퍼스트 시대에 들어서면서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됐다. 신문의 위기론은 사회적 측면에서 저널리즘 가치의 위기, 산업적 측면에서는 광고 매출 감소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됐다. 둘은 분리된 내용은 아니다. 신문사의 매출과 이윤이 줄어들어 따라 정부나 광고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기사의 편향성이 강화되고 기사의 선정성이 심화된다. 임계점 이상으로 심화된 산업적 위기가 저널리즘 가치 손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1) 종이신문의 플랫폼 기능 약화

신문의 산업적 위기는 플랫폼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신문과 방송 등 언론시장은 전형적인 양면시장이다(Eisenmann, Parker, & Alstyne, 2006; Evans & Schmaleness, 2007; Rochet & Tirole, 2003). 언론사는 뉴스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여 시청자에게 판매하는 한편, 광고주에는 지면을 판매하고 광고를 내보낸다. 이 때 언론사는 시청자에게 낮은 구독료를 부과하는 대신, 광고주에게 높은 광고료를 추가하는 차별적 가격정책을 사용한다. 여기서 낮은 구독료로 인해 시청자가 많이 모일수록 광고 효과는 배가되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모형에서 언론사는 콘텐츠 공급자(content provider, CP) 겸 플랫폼으로서 수직적으로 통합돼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 이후 포털이나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이 새로운 시장지배적인 플랫폼으로 부상함에 따라, <그림 5>와 같이 언론사는 점차 플랫폼 경쟁력을 잃고 CP로 분화되어 간다. 언론사는 CP로서 포털 속에서 다른 종류의 CP와 경쟁하게 된다. 즉 한 언론사의 기사는 포털 안에서 타 언론사의 기사는 물론이거니와, 자사의 예능 콘텐츠나 다른 미디어 기업이 만든 음악이나 영화, 게임, 일반 사용자가 만든 카페, 블로그 등 1인 매체, SNS의 UGC(user generated content) 등과 무한경쟁을 하게 된다. 물론 언론사는 기존에 플랫폼으로서 구축한 브랜드 가치와 양질의 콘텐츠 생산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CP로서 나름의 경쟁력은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에서 적용되는 긴 꼬리(long tail)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수많은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들을 끌어 모으는 플랫폼이 언론사가 아닌 포털이나 SNS가 되면서, 언론사는 시청자와 광고주를 매개하는 플랫폼의 지위를 잃고 광고 매출 감소에 직면한다(박대민 등, 2014.12.).



출처: 박대민 등(2014.12.)

그림 5. 뉴스 플랫폼 시장의 변화

2) 뉴스 생산과 유통에서의 사용자 참여 확대

언론사가 플랫폼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저널리즘 가치는 지키되, 무엇보다 인터넷 기업으로서 기술적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모바일 환경에서 언론사가 인터넷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그림 6>에서 보듯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는 뉴스의 생산, 유통, 소비에 사용자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거 언론 모형에서는 기자 등 엘리트가 제작한 기사를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일방향적인 모형이었다. 반면 모바일 플랫폼에서는 사용자가 수시로 뉴스를 본 뒤, 이를 공유하고, 의견을 덧붙이고, 추천하고, 댓글을 달고, 삭제하면서 뉴스 유통의 핵심을 담당한다. 게다가 적극적 사용자는 홈페이지, 카페 게시판, 블로그, SNS를 통해서 다양한 UGC를 생산한다. 이러한 일들은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언론사가 CP로서 뉴스를 공급하는 포털이나 SNS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생산, 유통, 소비 측면에서 언론사의 뉴스와 사용자의 UGC간 차이가 줄어들고, 뉴스 콘텐츠가 다른 콘텐츠는 물론 사실상 무료로 제공되는 사용자의 UGC와도 경쟁하게 된다. 새로운 환경에선 사용자 생성 빅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좋은 품질로 다양하고 방대하게 구축하느냐가 플랫폼 경쟁력의 핵심이지만, 대부분의 신문들은 여전히 전문 언론인 중심의 생산, 유통 과정을 고수하면서 경쟁에 뒤쳐지고 있다(박대민 등, 201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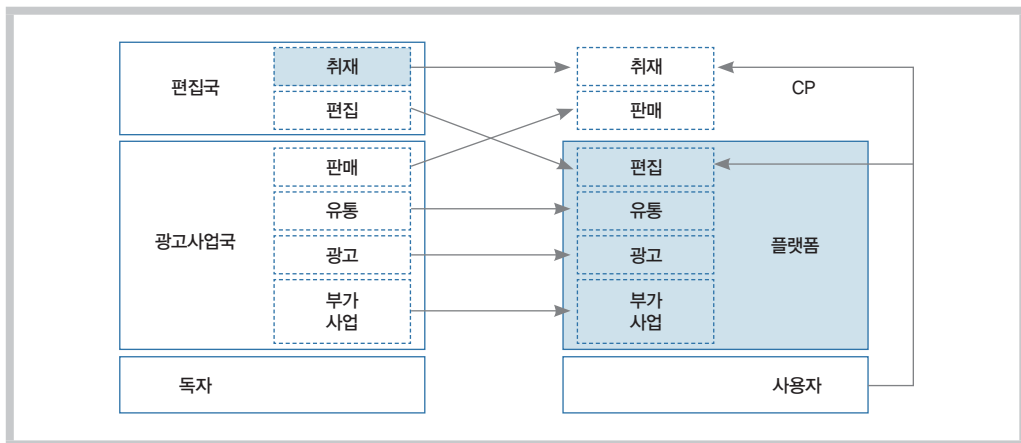


그림 6. 뉴스 생산과 유통에서 사용자의 역할 강화와 편집국 취재 영역의 위상 약화

4. 새로운 저널리즘의 대두

컴퓨터의 사용, 인터넷의 등장을 넘어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확산, 빅데이터의 활용,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저널리즘 활동도 많은 변화를 갖게 됐다. 주된 경향은 기사를 정형 데이터로 만들어 놓는 스트럭처 저널리즘, 데이터에 기초해 기사를 자동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알고리즘 저널리즘, 데이터화된 기사를 재가공하는 큐레이션 저널리즘 등 크게 세 가지다.

1) 스트럭처 저널리즘

스트럭처 저널리즘이란 기사를 데이터 단위로 쪼개 뒤,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저널리즘을 개념이다(오세욱 등, 2015). 스트럭처 저널리즘은 크게 두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뉴스 기사를 자연어처리를 통해 데이터화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재맥락화다. 하나의 기사는 현재의 단면이지만 동시에 다른 기사와의 맥락 속에 놓여 있다. 스트럭처 저널리즘은 이를 다양하게 재맥락화하여 기사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게 돕는다.

스트럭처 저널리즘의 사례로는 IBM왓슨의 <뉴스 익스플로어>(News Explorer)를 들 수 있다. <그림 7>과 같이 <뉴스 익스플로어>는 기사에서 인명과 기관명, 회사명을 인식하고 이를 연결망으로 시각화한다. 또 기사 속 장소 이름을 인식해 지도 위에 나타내고 기사에서 태그를 추출하여 워드클라우드로도 보여준다. 기사량도 타임라인으로 제시해준다. 연결망은 인명, 기관명, 회사명 등 세 종류의 결점으로 구성된 3원 연결망으로 시각화한다.



출처: news-explorer.mybluemix.net

그림 7. 뉴스 익스플로어 검색화면

2) 알고리즘 저널리즘

알고리즘 저널리즘은 스트럭처 저널리즘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데이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요청된다. 알고리즘이란 정의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수학적 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 절차적 규칙이다. 알고리즘 저널리즘은 자료 수집, 기사 작성, 기사 편집, 기사 유통, 그리고 기사 사용에 이르기까지 일련 과정에서 알고리즘에 기초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Anderson, 2013). 알고리즘 저널리즘은 기사자동 작성을 강조하는 로봇저널리즘(robot journalism)보다는 더 넓고, 저널리즘 활동에서 컴퓨터 사용을 뜻하는 컴퓨터 저널리즘(computational journalism)보다는 더 좁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알고리즘은 기사의 가중치 부여, 관련 기사를 묶어주는 클러스터링, 기사의 추천, 자연어처리를 통한 각종 특징의 식별과 매칭, 뉴스 검색, UI와 UX, 시각화, 기사에 대한 메타데이터 부여,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하게 활용돼 왔다.

알고리즘 저널리즘은 중립적이지 않다. 더 나은 알고리즘에 대한 규범적 지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규범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알고리즘은 편향될 수 밖에 없다. 보편타당한 하나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다양한 알고리즘 간의 경쟁이 필요하다. 때문에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했으며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 분석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비평이 요청된다. 다른 한편 알고리즘 저널리즘은 사용자의 행위를 분석해서 추구하는 저널리즘 지향에 대한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예컨대 숙의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이용을 분석도구(analytics)를 통해 선별해 이를 기사 품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언론인의 양심이 아니라 사용자의 클릭으로부터 도출되는 측정된 저널리즘(metered journalism)이 가능해진 셈이다(박대민 등, 2014).

3) 큐레이션 저널리즘

큐레이션 저널리즘도 그 과정을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동화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편집자의 선택에 무게중심을 둔 개념이다. 큐레이션이란 기존의 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구분, 검증, 구성하고 설명을 추가하여 관리, 보존, 배포하는 행위로 사람들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콘텐츠에 대한 요약과 공유, 순위 정하기, 병치하고 비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박혜진 등, 2014; 한경경제용어사전, 2014.9.18.; Clark & Aufderheide, 2009; Rugg & Sedgwick, 2007; Steven, 2011). 이를 뉴스에 적용한 것이 큐레이션 저널리즘이다. 큐레이션

저널리즘은 우선 언론사가 자체 제작 콘텐츠를 큐레이션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국내 언론사의 경우 기사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큐레이션하는 사례가 많은데 SBS의 스프스 뉴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큐레이션 저널리즘은 외부에서 만든 콘텐츠를 가져오는 방식이 더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큐레이션 서비스로는 미국의 허핑턴포스트나 국내의 피키캐스트를 들 수 있다.



출처: www.huffingtonpost.kr

그림 8.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메인 화면

큐레이션 저널리즘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큐레이션 저널리즘은 해설 저널리즘을 강화한 형태다. 중요한 가치는 단순한 팩트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뉴스의 맥락을 파악하고, 다양한 관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설명해주는 것이다. 둘째, 큐레이션 저널리즘은 취재기자와 같은 전문직 언론인보다는 편집자와 사용자의 역할에 무게를 둔다. 편집자는 물론 사용자 역시 뉴스를 다양하게 큐레이션할 수 있다. 또한 설사 사용자가 직접 뉴스를 큐레이션하지 않더라도, 편집자들은 큐레이션할 때 사용자 참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요컨대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는 해설 저널리즘을 보다 나은 사용자 경험을 통해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데이터가 된 뉴스, 뉴스 빅데이터

1) 뉴스 빅데이터의 정의

빅데이터는 흔히 3V라고 해서, 크기(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 측면에서 기존 데이터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Laney, 2001). 특히 정리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unstructured data)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빅데이터의 가치(value)나 데이터 공개와 관련한 가시성(visibility) 등을 강조한다.

뉴스는 빅데이터화됐다(박대민, 2013). 뉴스 데이터는 파일 용량 자체는 크지 않지만 건수는 매우 많다. 예컨대 카카오에 따르면 다음 뉴스 기준으로 하루 평균 27,000여 건의 뉴스가 매일 쏟아진다.⁽⁵⁾ 하나의 기사는 텍스트파일, 그림파일, 동영상파일, NewsML 파일 등 다양한 형식의 파일이 함께 저장된다. 많은 경우 기사는 메타데이터도 거의 없이 한 덩어리의 콘텐츠 형태로만 저장된 비정형 데이터이다. 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이슈에 대한 사실과 의견을 담고 있어 분석이 복잡하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은 이러한 뉴스 데이터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정형 데이터 상태의 뉴스 기사에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술을 이용해 분석해 다양한 정형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론이다. 예컨대 뉴스 기사 본문 안에서 인물, 기관, 장소, 수치, 직함, 상품명 등 다양한 개체명(named entities)과 각종 문장 등을 추출해 다중 분류하고 순위화하는 과정, 즉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와 의미연결망분석을 통한 정형화 과정이 필요하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저널리즘과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구분되는 개념이다. 간단히 말해 데이터 저널리즘은 <그림 9>의 우측 그림처럼 쪼개진 데이터를 하나의 기사로 만드는 방식인 반면, 뉴스 빅데이터 분석은 좌측 그림처럼 수많은 기사를 데이터로 쪼개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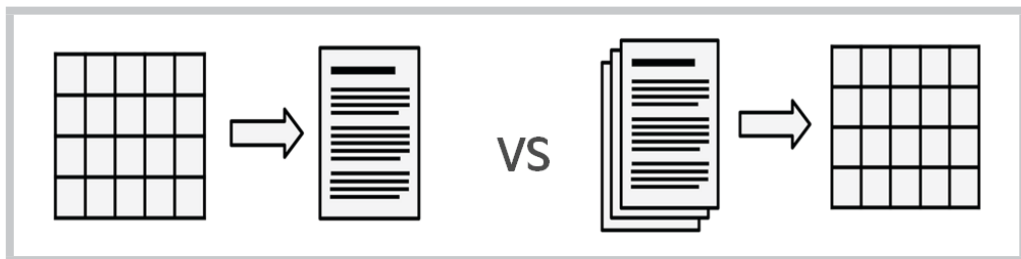


그림 9. 데이터저널리즘과 뉴스빅데이터 분석의 차이

(5) blog.kakaocorp.co.kr/412

2)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

<빅카인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6년 공개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다. <빅카인즈>는 뉴스를 단순히 저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뉴스를 손쉽게 재가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분석해 시각화하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빅카인즈>의 처리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우선 뉴스 수집 시스템이 언론사로부터 기사를 받아서 표준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형태소분석, 개체명 분석 등 자연어처리를 하여 기사에 담긴 인물, 기관, 장소, 사건 등과 인용문을 추출한다. <빅카인즈>는 크게 일반인버전과 전문가버전으로 나뉘지는데, 일반인버전에서는 키워드 검색, 뉴스 분석 시각화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언론사와 학계를 위한 전문가버전은 뉴스의 메타데이터와 자연어처리 데이터를 대규모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그림 10>은 <빅카인즈> 전문가버전의 메인 화면이다.



<http://tools.kinds.or.kr/adam/login.do>

그림 10. <빅카인즈> 전문가버전 메인 화면

<그림 11>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에서 추출한 자연어처리 데이터의 예이다. 기사 내 인용문과 인용문을 발언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함, 인용문이 다루는 주제들이 포함된다.

형용사를 추출하여 <그림 12>과 같이 시각화하고 신문사별 보도 경향의 차이를 살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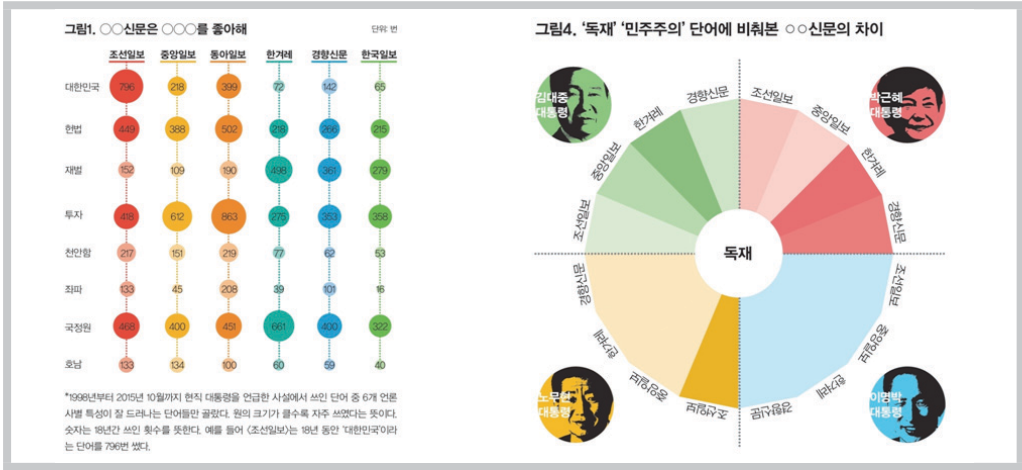


그림 12. <한겨레21>의 뉴스 빅데이터 활용 기사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상 자체를 살펴볼 수도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언론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한겨레 21>의 뉴스 빅데이터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도 밝혔듯이, 뉴스 빅데이터 분석은 언론 비평의 성격이 강하다. 즉 뉴스 빅데이터 저널리즘은 뉴스를 통해 언론을 드러내는 일종의 자기반영성(reflexibility)을 갖는 셈이다.

2) 뉴스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앤 인사이트

뉴스 빅데이터 분석의 장점은 기사가 DB로 축적돼 있는 한 수십 년간 수십 개 매체에서 작성된 기사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전문 웹진 <News Big Data Analytics & Insights>는 <빅카인즈>를 활용해 한류나 인공지능과 같은 주제별로는 물론 신문 보도 전체에 대한 역사를 분석하고 시각화한다. 예컨대 1호 <신문 26년>에선 지난 26년간 주요 중앙지 7개를 정보원과 주제 측면에서 분석했다(박대민, 2016.4.). 내용을 일부만 소개하면, <그림 13>에서 보듯 정치면의 경우 과거엔 야당 대변인(파란 색 표시)이 중요했지만, 2000년대 이후 대통령(붉은 색 표시)이 중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매체별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분석결과는 <그림 14>와 같이 정보원 연결망이나 주제 연결망으로 시각화할 수도 있다. 일종의 뉴스 역사의 시각화(visualization of history)로 볼 수 있다.

뉴스 빅데이터는 언론 현상에 관심을 가진 언론학자나 사회학자는 물론, 언론과 정치 또는 뉴스와 시장의 관계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나 경제학자 등 사회과학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더 나아가 뉴스 언어 분석에 관심을 가진 언어학자,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연어처리를 연구하는 컴퓨터공학자의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뉴스 빅데이터는 사료(historical records)로서 뉴스의 잠재력을 자동화된 장기 시계열 내용분석을 통해 실현시켜준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황제신문	한국일보	문화일보
1990 김대중 대변인	김대중 총재	장대철 의원	김동영 총무	권노갑 의원	임홍조 의원, 이수인 의원	박성 의원	null
1991 김대중 총재	김대중 총재	박희태 대변인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총재	박상천 대변인	박상천 대변인	null
1992 김대중 대표	김대중 대표	민자당	박희태 대변인	장학남 후보	김대중 대표	황인성 후보	null
1993 박지철 대변인	민중당	박지철 대변인	김영삼 대통령	이기택 대표	김영삼 대통령	황인성 후보	null
1994 박지철 대변인	홍준수 총장	박지철 대변인	박지철 대변인	박지철 대변인	박지철 대변인	민중당	null
1995 박지철 대변인	박지철 대변인	박지철 대변인	박지철 대변인	박지철 대변인	박지철 대변인	민중 의원	null
1996 국회의원 김대중 총재	국민회의	김상재 사무총장	김상재 사무총장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김상재 사무총장	국민회의	null
1997 중동일 대변인	중동일 대변인	중동일 대변인	김영삼 대통령	중동일 대변인	중동일 대변인	중동일 대변인	중동일 대변인
1998 한나라당	김철 (윤석) 대변인	한나라당	양항규 대변인	한나라당	김대중 대통령	한나라당	한나라당
1999 이회창 (후보) 총재	이회창 (후보) 총재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안학수 대변인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2000 한나라당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총재	김대중 대통령	민중당	한나라당
2001 민주당	강광근 수석부대변인	한나라당	한나라당	민주당	권철환 대변인	한나라당	한나라당
2002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	한나라당 남경필 (南靑弼) 대변인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	남경필 대변인	민주당	남경필 대변인
2003 정부 당국자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2004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2005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2006 노무현 대통령	우상훈 대변인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2007 친박선 청와대 대변인	강계성 대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나경원 대변인	친박선 청와대 대변인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2008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2009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2010 이명박 대통령	박지철 원내대표	민주당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2011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민주당	이명박 대통령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2012 이명박 대통령	※박종진 대변인	새누리당	새누리당	민주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영지대 교수
2013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2014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2015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우성 대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김우성 새누리당 대표	김우성 새누리당 대표

'대변인'은 푸른색, '대통령'은 붉은색, 'null'은 검정색, 'null'은 데이터 없음
 ※: 자연어처리 오류로 중요도 2 위를 표시한 경우

출처: 박대민(2016.4.)

그림 13. 뉴스 빅데이터로 본 전국중앙지 정치면의 변화



출처: <http://story.visualdive.co.kr/2016/04/newspaper26y/>

그림 14. <신문 26년> 홈페이지 메인화면

7. 뉴스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뉴스 빅데이터는 새롭고 다양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data driven service)를 만드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다양한 매체에서 생산된 요리나 여행, 또는 IT나 증권 등 기사만 자동으로 추려서 관련 전문매체를 어렵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 뉴스 포맷이 잘 정의된 템플릿들만 있다면, 자동으로 포탈, SNS, 스마트워치, 구글 글래스, VR기기 등 다양한 플랫폼과 기기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거의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또 사용자별로 세세하게 분석된 취향에 따라 개인화된 뉴스 서비스도 만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전문가에게 제공되는 뉴스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볼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뉴스 빅데이터 기반 전문가 서비스로 딱 맞는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원형이 될만한 서비스는 찾을 수 있다. 뉴스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news big data driven service)의 핵심은 뉴스 빅데이터를 공공데이터나 개인정보데이터, 다른 저작권 콘텐츠와 연계하여 뉴스 빅데이터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다.

여기선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로 팩티바(Factiva)와 블룸버그 프로페셔널 서비스(Bloomberg Professional Service), 그리고 IBM 왓슨(IBM Watson)을 소개한다. 팩티바는 뉴스 서비스에 가장 가깝다. 블룸버그는 뉴스를 적극적으로 외부 데이터와 연계하며 상업적으로도 가장 성공한 사례다. 팩티바와 블룸버그와는 달리, IBM 왓슨은 뉴스를 빅데이터로 가공해 활용한다. 미래의 뉴스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는 IBM 왓슨의 기술에 블룸버그나 팩티바의 서비스 모형을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1) 팩티바

다우존스앤컴퍼니(Dow Jones & Company)가 제공하는 뉴스 데이터베이스 팩티바⁽⁶⁾는 뉴스 중심 전문가 서비스로 볼 수 있다. 팩티바는 전세계 200여 개국 26개 언어로 작성된 31,000개 이상의 언론사와 보고서, 경제 전문 웹사이트 등 다양한 자료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해 놓고 있다. 뉴스를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해 깊이 있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스커버리 창(Discovery Pane)과 개념탐색기(Concept Explorer) 등을 제공한다.

(6) solutions.dowjones.com/collateral/files/DJ-factivacom-factsheet-Korean.pdf

영어 자동번역 기능과 뉴스레터나 팟캐스트 등의 편집 기능, 뉴스레터를 정보를 자동으로 갱신해 공유하는 기능 등을 갖췄다.



그림 15. 팩티바 서비스

2) 블룸버그 프로페셔널 서비스

블룸버그 프로페셔널 서비스⁽⁷⁾는 블룸버그 그룹 연 매출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블룸버그 그룹의 핵심 서비스이다. 금융 관련 뉴스와 각종 데이터를 결합하여 전세계 32만 명 이상의 전문가들에게 전용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제공한다. 자체 생산 뉴스는 물론 세계 각국의 200여 개 주요



그림 16. 블룸버그 서비스

언론사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주식, 채권, 외환,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마켓 정보와 다양한 분석 보고서 및 리서치와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며, 추가 분석을 위한 차트 시각화와 포트폴리오 및 리스크 분석, MS오피스와의 통합, 거래 중개 도구를 제공한다.

(7) <https://www.bloomberg.co.kr/>

3) IBM 왓슨

IBM 왓슨은 뉴스를 비롯해, 보고서, 논문, 소설, 각종 사전, SNS 등 다양한 비정형 자료를 분석해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2011년 미국 퀴즈 쇼 제퍼디!(Jeopardy!)에서 인간을 제치고 우승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특징으로는 기계학습을 이용해 자료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스스로 가설을 생성하고 이를 데이터에 기초해 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또 질의와 관련된 문서를 관련된 순위에 따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질의와 직접 연관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왓슨의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공개해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IBM 왓슨 생태계(IBM Watson Ecosystem)를 구성했다. 2015년 알케미(Alchemy)를 인수해 보다 높은 수준의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접목시켰다. 앞서 소개한 <뉴스 익스플로어>는 IBM 왓슨이 만든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자연어처리와 연결망분석에 기초한 뉴스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문제 전 분야를 다루며, 수많은 사회현상에 대한 해석과 대응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뉴스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시킨다면, 사회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다각도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의 예측이나 정책 대응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17. IBM 왓슨의 소셜 미디어 분석 화면

8. 뉴스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뉴스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은 뉴스 빅데이터 기반 콘텐츠와 서비스는 생산과 유통을 위해 필요하다. 핵심은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 content management system)과 지능형 검색엔진을 포함하는 SNS이다. 특히 얼마 전만 해도 페이스북과 같은 개방형 SNS가 중요한 뉴스 플랫폼이었지만, 최근엔 메신저를 통한 챗봇(chatbot)이 주목을 받고 있다. 챗봇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용자와 질의응답을 하듯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CMS는 과거 종이 중심의 조판시스템(CTS, 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을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 출판할 수 있도록 대체한다. 여기서는 CMS와 챗봇을 중심으로 근미래에 가능할 뉴스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1) SaaS 기반 CMS: 워싱턴포스트의 Arc와 조선비즈의 지쿵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가공해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CMS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워싱턴포스트(WP, the Washington Post)의 CMS인 Arc와 조선비즈의 CMS인 지쿵(Gcoop, Google Cloud based Omni Open Platform)을 소개한다.

Arc는 2013년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WP를 인수한 이후 자체 개발한 CMS이다. 기사, 동영상, 데이터 등을 편집해 테스트하고 출판할 수 있으며 데이터마이닝 기능도 갖추고 있다. WP는 Arc를 대학신문에게 무료로 배포한 뒤, 현재는 지방 중소 언론사, 기업 등에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

Arc의 가장 큰 특징은 워드프레스 (WordPress) 처럼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 기반의 여러 소프트웨어들을 묶어 활용한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필요한 기능만 조합해 쓰고, 자체 개발을 통해 기능을 보완하거나 확장할 수도 있다. 때문에 기자나 웹디자이너, 광고업체들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CMS를 활용할 수 있다. Arc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들은 <그림 1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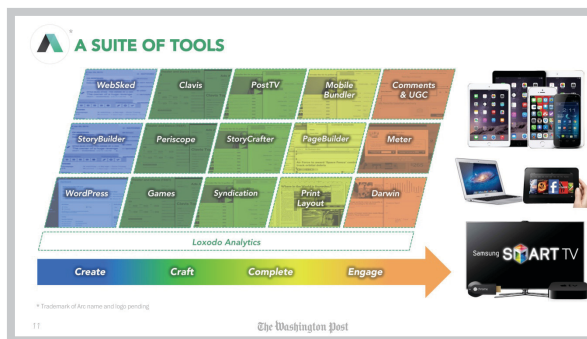


그림 18. Arc의 구성

국내에선 조선비즈가 SaaS(Software as a Service)⁽⁸⁾와 클라우드 서버 기반 CMS를 사용하고 있다.⁽⁹⁾ 우선 비즈니스용 구글앱스(GoogleApps)를 이용해 이메일, 게시판, 기사 작성 기능을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협업 솔루션 콜라베이트(Collavate)를 구글앱스에 접목했다. 이어 콜라베이트로 제작한 기사 콘텐츠를 웹사이트, 모바일앱, 신문조판시스템, 블로거 등 다양한 레거시 시스템으로 출고할 수 있는 지국을 만들었다. 모바일 버전 CMS를 활용하면 기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콜라베이트 모바일에서 기사 작성, 미리보기, 수정, 웹 출고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19. 콜라베이트 모바일에서 클라우드 CMS를 실행한 화면

Arc는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모듈처럼 활용한다는 점, 지국은 SaaS와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는 직접 CMS를 개발할 필요 없이 목적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찾아서 적절히 조합하고 개선해서 사용하면 된다. 덕분에 CMS 개발과 운영에 드는 비용이 대폭 감소하며 서버 구입 비용도 필요 없다. 기능 개선도 각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알아서 대신해준다. SaaS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기기에서든 앱을 깔고 로그인만 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사는 물론 스타트업이나, 일반인들도 고성능 CMS를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다. 미리 뉴스 빅데이터 분석

(8) 필요한 기능만 서비스 형태로 배포된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네트워크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이용한다. 구글문서(Google Docs)가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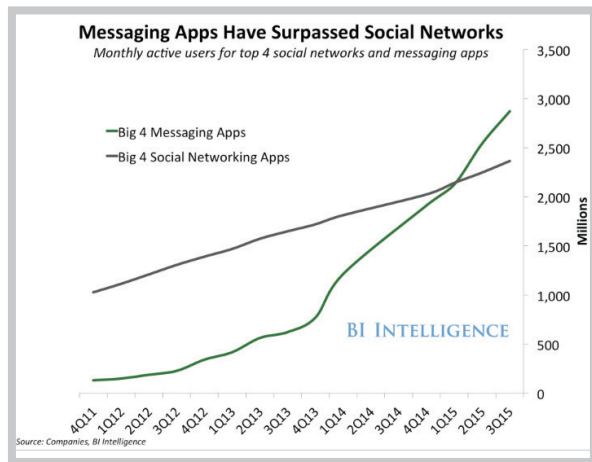
(9)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2/2016042201270.html

시스템과 연동해놓는다면, 작성된 기사가 실시간으로 뉴스 빅데이터로 축적되어 다른 뉴스 빅데이터 기반 콘텐츠나 서비스에 활용될 수도 있다.

2) 인공지능을 이용한 챗봇

2010년대 들어 트위터(tweeter)나 페이스북(Facebook)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예컨대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응답자의 62%가 페이스북, 트위터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얻는다고 응답했다(Pew, 2016.5.).

그러나 최근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메신저가 소셜미디어 이상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이미 2015년 1분기에 왓츠앱(WhatsApp), 페이스북 메신저(Facebook Messenger), 위챗(WeChat), 바이버(Viber) 등 4대 메신저의 월간 순사용자수(MAU, monthly active user)가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



출처: www.businessinsider.com/the-messaging-app-report-2015-11

그림 20. 4대 소셜미디어와 4대 메신저의 월간 순사용자 추이

인(LinkedIn),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4대 소셜미디어의 MAU인 21억 2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McKitterick, 2014.11.).

언론사들이 메신저를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례로 BBC는 2014년 네팔 지진 사태 때 왓츠앱을 통해 시민들이 찍은 현장 사진 등을 보도에 활용하기도 했다.⁽¹⁰⁾ 특히 메신저를 통한 뉴스 제공 방식으로 새롭게 주목 받는 기술이 챗봇(chatbot)이다.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람과 자동으로 대화를 나누는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챗봇을 활용하는 언론사도 늘고 있다. 일례로 WP는 키크(Kik)이란 메신저를 통해, CNN은

(10) www.bbc.com/news/technology-35471694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챗봇은 문장으로 된 일상어를 이해하는 자연어검색, 검색결과를 문장이나 표, 그래프 등 최적화된 형태로 제시하는 지능형 검색,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질의에 대해서도 관련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계학습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가장 잘 실현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뉴스 챗봇의 경우 사용자의 질문을 분야(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따라 5W1H(who, what, where, when, why, how) 중 중요한 것을 제시하는 일종의 토론기계(debating machine)가 될 수 있다(Park, 2016). 예컨대 정치 관련 질문에 대해 정치인이나 정치평론가들의 발언을, 경제 관련 질의에 대해선 가격 정보나 각종 수치를 핵심이나 개요, 또는 상술하는 문장을 대화체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1. <워싱턴포스트>의 챗봇

9. 나가며: 신문이 지켜온 저널리즘 가치의 미래

2012년 2월 1일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 신청을 하면서 ‘해커의 길(The Hacker Way)’이라는 제목의 투자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했다. 여기서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¹¹⁾

페이스북은 원래 회사가 되려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좀 더 열린 그리고 좀 더 연결된 곳으로 만들려는 사회적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돈 벌기 위해 서비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돈을 벌니다.

(11) www.looah.com/article/view/738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뭔가 만드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단순히 이익극대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믿는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페이스북의 핵심 서비스는 뉴스피드(newsfeed), 즉 뉴스 공급이다. 이 때 뉴스의 개념은 확장된다. 친구의 소식은 뉴욕타임즈의 정치 뉴스만큼 중요하다. 친구가 좋아하고 공유하는 뉴스는 BBC가 전하는 소식보다 더 개인의 사회적 삶에 밀착되어 있다. 이는 사실 새로운 건 아니다. 대항해시대에 향신료를 가득 담은 선단의 입항 소식을 알리던 시장 중심의 뉴스 전통과 더불어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이웃을 소식을 알리던 오래된 지역신문에 보존되어온 사회 중심의 뉴스 전통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IT 기술을 통해 개인은 전세계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디에서나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게 된 것뿐이다.

언론사는 광고 사업을 통해 뉴스 생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왔다. 그 뉴스는 이념적으로 시장 가치로부터 독립된 저널리즘 가치, 즉 사회적 가치를 핵심으로 한다. 그런데 인터넷의 확산 이후 모든 신문사는 사실상 인터넷기업이 돼야 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기술을 신문사들은 따라가지 못했다. 결국 산업적 위기가 닥치면서 저널리즘 가치에 대한 생각도 변한 것처럼 보인다. 기자들은 자신을 직장인으로 여긴다. 일부 언론사주는 노골적으로 생존을 위해 비즈니스를 저널리즘보다 우선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록 운전기는 멈춰가더라도, 신문의 미래는 뉴스의 미래이며, 뉴스의 오래된 미래는 저널리즘이 지켜온 사회적 가치이며, 사회적 가치는 비즈니스와 시장, 자본주의의 미래이다. 이는 저커버그가 세계 자본주의의 꽃인 미국 주식시장에 페이스북을 상장할 때,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자에게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이자 페이스북이 비즈니스 측면에서 세계 최대의 확장된 뉴스 공급자가 될 수 있던 이유이다. 페이스북이 내세운 사회적 가치, 그리고 신문이 수백 년간 지켜온 저널리즘의 사회적 가치야말로, 미래에 뉴스가 데이터가 되어 수많은 콘텐츠로 부활할 가치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논문, 보고서

- 김선호, 김위근(2016.6.).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6: 한국>.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위근(2015.10.). 신문독자 인식 설문조사. <미디어이슈>.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위근, 이흥천(2015.10.). <신문 인세의 현재와 미래>.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대민(2013). 뉴스 기사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서 뉴스정보원연결망분석. <한국언론학보>, 57권 6호, 233-261.
- 박대민(2016.4.). 신문 26년: 뉴스 빅데이터로 본 신문 보도의 역사. <News Big Data Analytics & Insights>, 1권 1호.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대민, 김선호, 양정애(2014.12.). <스마트 미디어 뉴스 혁신 전략>.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혜진 · 김진욱 · 김진우(2014).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 환경에서 정보에 대한 맥락 단서가 이용자의 자각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맥락적 메타데이터에 대한 자기 인식 효과와 지각된 자기 반영.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75-1178.
- 오세욱, 김선호, 박대민(2015.12.). 스트럭처 저널리즘, 데이터 저널리즘을 넘어서. <해의 미디어 동향> 2015년 6호.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오세욱(2016.6). 챗봇, 혁신적 저널리즘 출구될까. <신문과방송>. 2016년 6월호.
- 이인희(2013). <뉴스 미디어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민재, 조영신(2007.12.). <인터넷신문의 뉴스 생산과 소비>.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2015a). <2015 한국언론연감>.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2015b). <2015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Anderson, C. W.(2013). Towards a sociology of computational and algorithmic journalism. *new media & society*, 15(7), 1005-1021.
- Clark, J., & Aufderheide, P.(2009). *Public media 2.0: Dynamic, engaged publics*. DC: Center for Social Media.
- Eisenmann, T., Parker, G., & Van Alstyne, M. W.(2006). Strategies for two-sided markets. *Harvard Business Review*, 84(10), 92.
- Evans & Schmaleness,(2007). The industrial organization of markets with two-sided platforms.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3(1). 151-179.
- Laney, D.(2001). 3D data management: Controlling data volume, velocity and variety. META Group Research Note, 6, 70.
- McKitterick, W.(2015.11.). The Messaging App Report: How Instant Messaging Can Be Monetized. Business Insider.
- New York Times(2014.3.). Innovation. 조영신, 박상현 옮김(2014.8.). <뉴욕타임스 혁신>.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Park, D.M.(2016, January). Toward a debating machine: A news sentence network analysis algorithm based on similarity and cooccurrence. In Proceedings of HCI Korea(pp. 491-498). Hanbit Media, Inc..
- Rochet, J., & Tirole, J.(2003), Platform competition in two-sided Market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4), 990-1029.
- Rugg, J., & Sedgwick, M.(Eds.).(2007). Issues in curating contemporary art and performance. Bristol: Intellect Books.
- Rosenbaum, S.(2011). Curation nation: How to win in a world where consumers are creators. McGraw-Hill Education.
- Pew Research Center(2016.5.). News Use Across Social Media Platforms 2016. Pew Research Center.

2) 기사, 블로그

- 황예랑, 김효실(2016.1.28.). <○○일보와 △△신문의 다른 단어 사전>. 서울: 한겨레21.
- 이후(2014.11.1.) <[좌충우돌] 11월 1일 - 하이텔의 전신, 한경 프리스텔 서비스 시작>. 서울: ThisisGame.com.(온라인자료: www.thisisgame.com/webzine/series/nboard/212/?n=56767)
- 선주성(2016.4.22.) 조선비즈, 구글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관리시스템(CMS) 'Gcoop' 구축. <조선비즈>.(온라인자료: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2/2016042201270.html).
- Neagle, F.(2016.2.). How people use WhatsApp to share breaking news with the world.(온라인자료: www.bbc.com/news/technology-35471694)
- 카카오(2015.9.14.). 맞춤형 추천뉴스 루빅스를 소개합니다. 카카오블로그.(온라인자료: blog.kakaocorp.co.kr/412).
- Zuckerberg, M.(2012.2.1.) Mark Zuckerberg's Letter to Investors: 'The Hacker Way'.(온라인자료: www.looah.com/article/view/738).

3) 온라인자료

- 빅카인즈 일반인 버전: <http://www.bigkinds.or.kr/>
- 빅카인즈 전문가 버전: <http://tools.kinds.or.kr/adam/login.do>
- 한글 위키피디아 <하이텔> 설명:
- <https://ko.wikipedia.org/wiki/%ED%95%98%EC%9D%B4%ED%85%94>
- 큐레이션 한경경제용어사전 용어 설명(2014.9.18.).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7045&cid=42107&categoryId=42107>
- Huffington Post Korea: www.huffingtonpost.kr
- IBM Watson News Explorer: <http://news-explorer.mybluemix.net/>
- Wikipedia <The Independent> 설명: https://en.wikipedia.org/wiki/The_Independent

국립중앙도서관 신문자료 현황과 역할

정연숙
前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운영과 사무관

07

1. 국립중앙도서관 신문자료 수집

신문자료는 도서관법의 납본조항에 의해 수집되는 법정납본자료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2014)과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4~2018》(2013)에 근거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국가문헌의 영구보존을 위한 중요한 수집자료 중 하나이다.

신문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연간 연속간행물 수집량의 57%를 차지하는 수량적으로 방대한 자료이며, 도서관이 수집하고 있는 연속간행물 중 간기가 가장 짧아 수집의 신속성과 결호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하는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고 있는 신문자료에 대한 업무 전반의 상황을 점검하고, 2008년도와 2015년도의 통계를 비교하여 도서관에서의 신문자료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인쇄자료와 온라인자료의 수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신문자료의 수집현황과 신문자료의 보존 및 서비스업무 현황, 온라인신문컬렉션과 외부협력활동, 외국도서관의 온라인신문컬렉션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2015년 이후 도서관에서의 신문자료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처하고 향후 도서관의 신문자료의 수집 확대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 신문자료의 납본수집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은 인쇄본 신문자료를 수집하여 영구보존과 대국민 이용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신문 납본수집 종별 소장량을 분석해보면 전체 6,822종 중 일반신문 6,375종(93.4%), 정부기관신문 126종(1.9%), 대학 및 학회발간 신문 288종(4.2%), 아동신문 33종(0.5%)으로 일반신문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정부기관과 대학 및 학회의 신문발간율이 현저히 낮고, 아동신문이 소량 발행되어 소장되어 있다.

표-1 납본신문 종별 소장현황(~2015)

연도	납본신문 종수 (계)	일반신문 (종)	정부기관신문(종)	대학, 학회신문 (종)	아동신문 (종)
~2015	6,822 (100%)	6,375 (93.4%)	126 (1.9%)	288 (4.2%)	33 (0.5%)

납본신문의 형태별 소장량은 전체 2008년 5,589종에서 2015년 6,822종으로 증가하였으며, 제본신문 종수는 2008년 5,290종에서 2015년 6,505종으로, 마이크로필름(MF)신문은 116종에서 132종으로 증가하였으며, 축쇄 및 영인본 신문은 185종으로 동일함을 보이고 있다. 신문자료는 휴간, 폐간 등이 두드러진 자료로 2008년과 2015년도의 소장수량이 계속수집자료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내발간 납본신문의 전체적인 납본수량으로는 의미가 있는 통계이다.

표-2 납본신문 형태별 소장현황(2008/2015)

연도	신문소장합계(종)	제본신문(종)	MF(종)	축쇄 및 영인(종)
~2008	5,589	5,290	116	185
2009~2015	6,822	6,505	132	185

납본신문자료의 간행빈도별 발행종수로는 전체 소장량 6,822종 중 일간신문 586종(8.6%), 주간신문류 2,524종(37%), 월간신문류 2,443종(35.8%), 계간지류 375종(5.5%), 연간류 80종(1.2%), 격년간류 3종(0.04%), 부정기간이나 간기불명 등 기타자료 811종(11.9%)로 주간단위신문 종수가 가장 주목할 만하다.

표-3 납본신문 간행빈도별 수집량(~2015)

납본신문 전체(종)	일간	주3회 ~주간	격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반년간 ~연간	격년간 ~3년간	기타
6,822종	586 (8.6%)	2,524 (37%)	2,443 (35.8%)	375 (5.5%)	80 (1.2%)	3 (0.04%)	811 (11.9%)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KOLIS)을 통해 국내신문의 납본수집 현황을 분석해보면, 납본신문은 2008년 1,865종, 2015년 1,613종으로 집계되어 전체적으로 252종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납본자료의 경우 통계적으로 평균 1종당 95부를 발간하므로 7년간 23,940부의 수량적 감소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접납본의 수량이 8%정도 증가하여, 납본대행사를 통한 수집량보다 직접납본을 통한 수집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납본은 주로 개별납본 또는 납본대행사를 통해서 수행되는데, 개별납본자료는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와 납본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신문을 배포하는 최종 종착지인 신문보급소를 통해 납본 독려, 결호 독촉 및 수집, 구독료 지급 등을 하고 있다.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온라인신문이 납본자료에 포함되는 시점에 있어, 신문수집을 위한 신문발행기관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은 고려해 볼만한 문제이다.

표-4 신문자료 납본수집 경로별 비교(2008/2015)

연도	납본신문 합계(종)	직접 납본(종)	한국신문협회 납본대행(종)	지방신문보급소 납본대행(종)	한국잡지협회 납본대행(종)
2008	1,865 (100%)	862 (46.2%)	252 (31.4)	73 (3.9%)	345 (18.5%)
2015	1,613 (100%)	938 (58.2%)	374 (23.2%)	62 (3.8%)	239 (14.8%)
증감	△252	76	122	△11	△106

국립중앙도서관 인쇄본 신문자료의 연간 수집량은 2015년 1,628종 151,909책이며, 납본신문 1,603종 145,242책, 구입신문 16종 6,642책, 교환신문 2종 18책, 수증신문 7종 7책 등이다.

표-5 연간 인쇄본 신문수집 현황(2015)

납본		구입		교환		수증		자체생산		계	
종수	책수	종수	책수	종수	책수	종수	책수	종수	책수	종수	책수
1,603	145,242	16	6,642	2	18	7	7	0	0	1,628	151,909

※ 전자구독신문은 제외한 수량임

비도서형태의 납본자료는 중앙일간지 발행기관이 제작하는 마이크로 필름(MF)자료가 대부분이며 국내발행자료이므로 납본대상이나, 각 신문사에서 해당자료의 판매처를 별도로 두고 신문사와는 별개로 판매하며, 납본을 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도서관은 망라적인 수집을 위하여 일부자료를 구입을 통해 수집하고 있다.

표-6 국내신문 비도서자료 구입 현황(2015)

구분	수량(종/롤)	예산(천원)
경향신문 등 주요일간지	8종 200여롤	19,910(천원)

국립중앙도서관의 신문자료는 도서관법을 근거로하여 2부가 수집된다. 1부는 접수·등록하여 실시간으로 신문자료실에서 이용하게 되며, 2년 이용 후 폐기된다.

나머지 1부는 제본하여 도서관 장서로 편입되는 보존용 신문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구보존되는 인쇄자료이며 동시에 실시간자료가 폐기된 후, 이용서비스에 제공되는 자료이다.

대부분 신문의 경우 간기에 적합하게 적시성있는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도서관에서는 연간 1,600여종의 신문자료의 결호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KOLIS)에 입력된 발행일예측정보 및 입수일예측정보를 통해 미입수, 지연 또는 결호인 자료에 대하여 전화, 메일, 엽서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수집을 하고 있으며, 단순하고 노동집약적이나 대국민서비스와 영구보존을 위한 중요한 업무중 하나이다.

신문자료의 결호도려는 연간 1,174회로 7,444부의 결호를 적시에 입수하였으며, 결호 수집은 납본수집량의 약 5.12%정도이다.

표-7 신문자료 결호독려 현황(2015)

연도	결호독려 횟수	신문 부수
2015	1,174	7,444

신문제본자료는 연간 74,000부의 신문을 4~5회 발행기간 동안의 자료를 모아 제본 후, 도서관 장서에 편입시켜 보존용신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일반신문의 지질은 잡지나 단행본자료의 용지와 다른 재질로 만들어져 얇고 취약하므로 제본을 해야하는 경우, 제본이 가능한 기간의 신문이 모여질 동안 제본대상 신문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신문자료실의 서고공간은 등록 및 정리가 완료된 자료와 더불어 제본대상 자료의 보존을 위한 채광, 항온항습이 이루어져야한다.

표-8 신문자료실 제본신문 소장 현황(2015)

구분	수량(책·부)	자료현황
신문자료실서고(3층)	73,645부	해당년도 제본대기 자료
	3,800책	제본완료(정리대기)자료

신문제본은 제본두께를 일정하게 맞춰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단위인 15일 내지 30일의 발행분으로 나누는 동시에, 전년도 신문과 제본단위를 일치시켜야 자료의 물리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

신문자료 제본방법으로는, 신문자료가 일반자료 만큼의 여백이 없이 발간되어 책등을 자르지 않고 제본해 원본을 훼손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실제본이 적합하다. 또한 실제본으로 제본할 경우, 마이크로필름제작이나 디지털원문구축 시 해체가 편리하며 가볍고 잘 펼쳐져 이용에 편리한 장점이 있다. 다만, 일반잡지 제본단가의 2배에 해당하는 비용문제가 있으나, 제본두께가 두꺼울 경우 복사 시 중앙 부분이 검게 출력되어 이용자의 불편을 주게 되므로 신문제본예산은 현실성있게 운영 중이다.

표-9 신문자료 제본 현황(최근 3년간)

연도	수량(책)	예산(천원)
2013	4,310	72,190
2014	3,927	73,300
2015	3,800	77,230

※ 소요예산은 잡지제본비 포함 내역임

2) 외국신문자료의 구입 및 구독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의 인쇄자료 해외신문 구독현황은 2015년 현재 16종으로 2008년 29종에서 13종이 감소하였다. 이는 외국연속간행물 구독을위한 외부전문가(15명) 의견조사(2012.11.15.)를 통해 일부신문을 구독중지하고 2종의 신규자료를 구독하는 등 신문구독방향을 재점검하고, 외국학술지 구입비 절감 계획(2013.11.28.)으로 전자저널(Web DB)로 구독중인 신문을 구입대상에서 제외하여, 동일종의 신문자료에 대한 중복구입으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마이크로필름(MF)형태의 구입자료인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Los Angels Times〉 등의 자료의 구입은 전면중단하였다.

표-10 해외신문 구독 종수 비교(2008/2015)

연도	일본	중국	북한	카자흐스탄	미국	영국	호주	홍콩	러시아	독일	프랑스	합계
2008	6	5	2	1	5	2	1	2	2	2	1	29
2015	6	2	1	0	2	2	1	0	1	1	0	16

국립중앙도서관은 2009년 디지털도서관 개관과 더불어 전자신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구독중인 국내전자신문은 2015년 11종이며, 디지털도서관에서 이용가능하다.

표-11 국내전자신문 구독종수

연도	국내전자신문	종수
2015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전자신문, 일간스포츠, 코리아타임즈	11

외국신문자료를 볼 수 있는 해외신문 웹DB 구독 종수는 2015년 2종이며, 해당 DB를 통한 구독신문은 3종이다. 웹DB로 구독하는 신문자료는 오랜기간 신문자료를 인쇄본으로 이용했던 이용자들의 요구와 상충되어, 인쇄본 신문자료 이용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외국신문구입 예산의 적절한 집행이 요구된다.

표-12 신문 해외 웹DB 및 구독신문 종수(2015)

DB명	신문명	종수
ProQuest Historical Newspaper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1908-2003) The New York Times(1851-2013) The Wall Street Journal(1889-1999)	3
ProQuest Central	South China Morning Post The Washington Post	2

국립중앙도서관의 연간 납본 및 구독을 통한 전체신문 종수를 2008년과 2015년 비교하면, 2008년도는 1,895종으로 납본수집 1,865종, 구입 29종이며, 2015년도는 납본수집 1,615종, 구입 16종이다. 마이크로필름(MF)자료의 경우는 2008년 29종, 2015년 16종으로 감소하였으며, 전자구독 신문은 2008년 1종, 2015년 16종이다. 인쇄본신문의 종수가 현격히 감소한 반면 전자구독신문의 종수가 증가하여 전반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표-13 연간 납본 및 구독 신문 종수(2008/2015)

연도	신문(MF)(종)	납본신문(MF)(종)	해외구독신문(MF)(종)	전자구독(종)
2008	1,895(13)	1,865(13)	29(3)	1
2015	1,645(8)	1,613(8)	16(0)	16

2. 국립중앙도서관 신문자료의 보존 및 서비스 현황

1) 신문자료의 보존 현황

제본신문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신문자료 전체를 보존서고동으로 이관하고자 검토하였으나, 원본자료를 보존 및 이용서비스에 동시에 활용하여야하는 한계로 인해, 보존만을 위하여 보존서고동에 비치할 경우 이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겁고 크기가 큰 자료를 이동하여야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렵고, 또한 대출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로 이용자의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본관에서 서고와 자료실이 함께 연결된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한 공간을 유지하고 있다.

표-14 신문자료실 서고자료 소장 현황

구분	수량(책·부)	자료현황
보존서고동(귀중본서고)	673책	신문자료 귀중본
3층서고	9,400부	중앙일간지 및 지방신문
	9,557롤	마이크로필름(관보 포함)
3M층서고	205,744부	전문신문, 외국신문, 경매지
7층서고	125,861책	중앙일간지, 전문신문
7M층서고	114,933책	중앙일간지, 지방지, 영인본신문, 축쇄판신문

2) 신문자료의 서비스

신문자료는 물리적으로 크기가 크고 자료 이용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자료이므로, 신문자료실은 면적의 확보 및 서가배치, 책상배치 등이 중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 신문자료실은 자료실내부에 제본신문, 축쇄본, 영인본신문, 전문신문, 외국신문, 고신문을 이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용자와 부동산 경매지, 일간신문, 마이크로필름형태의 신문이용 등 다양한 수요가 혼재하여 서비스에 어려움이 많은 자료실이다.

신문자료실은 개가자료(3층)와 실시간자료(2층 휴게공간) 2개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시간 전문신문과 외국신문, 영인본 및 축쇄본 고신문자료 등 전문성있는 신문자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자료실내 서가배치를 방사형으로 배치하였고, 단순한 신문의 열람기능을 2층의 휴게공간에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여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신문자료실내의 민원감소를 비롯해 자료의 전문성을 정착화하였다.

또한 신문자료실 내부에 마이크로필름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자료이용안내, 기기조작 등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15 신문자료실 개가자료 소장 현황

구분	수량(책·부)	자료현황
신문자료실(3층)	1,326책 4,056부	전문신문 및 외국신문
마이크로필름실(신문자료실 내)		고신문(영인본, 축쇄본)
신문자료실 II(2층 휴게공간)	28종 297부	국내 주요일간지 등 28종

신문자료실 연간 이용자수는 2008년 76,089명, 2015년 28,834명, 이용책수는 2008년 245,038책, 2015년 133,926책으로 감소추세이다. 이는 3층 신문자료실의 전문신문서비스를 위주로 한 통계산정이므로, 2층 신문자료실(휴게공간)의 이용통계산출이 제외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인쇄자료에서 전자신문으로 매체가 전환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언론연감》(2015)에 의하면 2008년 전자신문종수가 1,300여종인데 비해 2015년 6,600여종으로 급증하였다. 통계수치를 통해 전자신문의 증가를 눈여겨보아야하며, 인쇄신문의 발행수량의 감소가 두드러져 납본수집목표치를 현실화해야할 필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표-16 신문자료실 연간 이용현황(2008/2015)

연도	이용인원(명)	이용책수(책)
2008	76,089	245,038
2015	28,834	133,926



그림 1. 신문자료실



그림 2. 신문 보존서고

3. 국립중앙도서관 신문디지털컬렉션과 외부기관과의 협력

1) 신문디지털컬렉션

한국인터넷진흥원(구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2008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6세 이상 국민 3,536만 명 중 63.4%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다.

60% 이상이 인터넷과 종이 신문을 병행하고 있고, 그 중에서 35%는 아예 인터넷으로만 신문을 읽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도서관에서의 신문서비스에 대한 시사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정기간행물 종별 신문등록현황을 2008년과 2015년을 비교해보면 인쇄본 일간신문은 2008년 264종, 2015년 383종인 반면 인터넷신문은 2008년 1,315건, 2015년 6,605종으로 인터넷신문의 발간이 급증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표-17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현황(2008/2015, 단위 종)

연도	일간			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반년간	인터넷 신문	계
	신문	통신	기타							
2008	264	3	362	2,847	3,870	504	1,158	379	1,315	10,702
2015	383	20	378	3,427	5,046	697	1,564	592	6,605	18,712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와 같은 인터넷신문의 증가로 인한 인쇄본 신문자료 이용 감소에 따른 이용서비스에 대처하고자 소장신문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신문자료의 디지털화는 귀중신문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귀중신문은 구한말 근대시대 태동부터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한국전쟁 등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역사를 담고 있는 자료로, 보존과 활용성 측면에서 매우 가치가 높은 역사적자료이며 역사적 사건 및 시대적 사회상을 알 수 있어 사회문화적측면의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신문서비스(<http://www.nl.go.kr> 소장원문-신문)에는 2008년까지 31종의 고신문 원문기사 1,064,482건을 수록한 신문기사원문데이터베이스를 구축되어 있으며, 이어 2013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하는 국가DB구축 중장기 로드맵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 고신문 7종, 기사 146,736건, 2014년 고신문 8종 기사 156,629건, 2015년 고신문 6종, 기사 210,594건이 구축되어, 현재 총49종 1,578,441건의 귀중신문 디지털원문이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다. 또 다른 신문서비스로는 조선총독부관보서비스(<http://www.nl.go.kr> 소장원문-신문)가 있으며, 1895년부터 1945년까지 발행된 구한국 관보 및 조선총독부 관보를 디지털화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조선총독부에 의해 발행된 관보는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표-18 귀중자료 고신문DB 구축 현황

연도	신문명	종수	기사수
~2008	중외일보 등	31	1,064,482
2013	국민신문 등	7	146,736
2014	제국신문 등	8	156,629
2015	가정신문 등	6	210,594
계		49	1,578,441

※ 연도별 구축 종수와 합계는 2008년이후 동일자료 추가 구축분과 제외변경 등 포함 수량임

표-19 귀중자료 고신문 현황

연도	신문명	종수
~2008	중외일보, 동명일보, 전국노동자신문, 대동신문, 대중일보,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문화일보, 조선중앙일보, 동광신문, 동방신문, 매일신보, 민주일보, 민주중보, 강원일보, 해양연구소보, 현대일보, 황성신문, 예술통신, 무역신문, 고려시보, 공립신보, 농민주보, 만선일보, 만세보, 민보, 상업일보, 시대일보, 신한민보, 우리신문, 중외신보	31종
2013	국립신보, 대한독립신보(민보), 독립신문, 독립신보, 민중일보, 조선중앙일보(서울석간), 중앙신문	7종
2014	제국신문, 연합신문, 한성일보, 현대일보, 황민일보, 광주민보(동광신문), 남선결제신문, 제주신보	8종
2015	가정신문, 제국신문, 동광신문(광주신보), 민주중보, 국산신문, 조선신문	6종

2) 외부기관과의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은 인쇄자료의 보존 및 서비스제공과 더불어 인터넷시대에 적합한 디지털정보의 연계와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디지털시대의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9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고신문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상호협력 협정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구 한국언론재단)은 1991년부터 카인즈(KINDS)를 통해 종합일간지, 경제일간신문, TV방송뉴스, 인터넷신문, 영자일간지, 지역주간신문과 고신문 및 90년대 이전신문 등을 포함한 신문기사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 4월부터 기존 카인즈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카인즈의 신문기사 3,000건을 기반으로 빅카인즈(BIG KINDS)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국내에서 고신문을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데이터베이스를 공동활용하여 통합서비스를 하게 되며,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고신문데이터 중 독립신문(한글판, 영문판) 등 1883년부터 1945년까지 발행된 데이터를 제공받아, 현재 구축중인 고신문서비스플랫폼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표-20 한국언론진흥재단 고신문DB 현황

종수	신문명	내용
11종	독립신문(한글판, 영문판),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 국한문, 매일신보, 황성신문, 협성회회보, 매일신문, 한성순보, 한성주보	한국언론진흥재단 구축 - 이미지파일로 수록, 검색어, 발행일, 기사유형별검색서비스 제공 - 전문수록으로 본문 및 발행일서비스
17종	대공보, 공립신보, 해조신문, 대동공보, 신한민보, 신한국보, 국민보, 독립신문(상해), 시대일보, 선본, 단산시보, 중외일보, 태평양주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 한민, 북미시보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제공 - 이미지파일 및 기사제목 검색서비스

4. 외국도서관의 온라인신문컬렉션

선진국에서는 국립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자국의 신문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수집과 더불어 역사의 기록으로 여겨지는 신문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기사원문을 서비스하는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다. 여러 나라들 중 미국과 영국의 온라인신문컬렉션을 살펴보았다.

1) 미국 온라인신문컬렉션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LC)은 일찍이 신문자료를 수집하여 왔다. 1874년에 미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전반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였고, 1901년에는 외국 신문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외국 신문에 대해서는 마이크로필름으로만 영구적으로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1953년 미국도서관협회와 협력하여 목재 펄프 용지를 사용하였던 시기의 미국 신문들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마이크로필름 제작 협력 사업을 개발하였다. 더불어 신문자료의 접근 공유를 위한 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하여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활동 등으로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된 신문들을 방대하게 소장하게 되었다.

1982년에는 미국 연방정부와 각 주별 단위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미국신문프로그램”(United States Newspaper Program: USNP)을 추진하였다. 미국신문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역사적인 신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8세기 이후 미국에서 발행된 신문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하여 신문의 소재위치, 목록작성 및 보존에 관한 정보를 협력하여 구축하는 사업으로 1982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간 추진되었다. 소요예산은 미국인문학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이 제공하고 기술부문은 미국의회도서관이 지원하였다. 2007년까지 연방정부 예산 5,110만 달러와 주 정부 예산 1,930만 달러가 투입되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50개 주와 컬럼비아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가 참여하여, 단일의 거대한 신문 리포지터리가 구축되었다. 목록은 보존용 예산 지원을 받는 8개 기관에서 작성하여 OCLC로 연결되었다. OCLC는 신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53,500대의 지정된 전용단말기를 통해 목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록을 통해 소재가 확인된 신문은 OCLC의 상호대차 프로그램을 통해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신문프로그램은 미국인문학기금과 미국의회도서관이 1982년부터 2011년까지 20여 년간 진행한 국가 차원의 협력 프로그램 네트워크 사업으로, 미국의회도서관은 보존용 마이크로필름에 대한 표준과 메타데이터 및 목록을 위한 표준을 제정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14만 종의 신문에 대한 목록이 작성되었고, 90만 건의 소장 레코드가 생성되었다.

미국신문프로그램을 성공리에 마친 미국의회도서관과 미국인문학기금은 신문 디지털화 사업인 전국디지털신문프로그램(National Digital Newspaper Program)을 추진하였다.

2003년에 전국디지털신문프로그램에 대한 목적과 기관별 책임을 분담하고 전반적인 지원에 대한 정식 협정을 체결하였다. 2004년에는 미국 역사의 연구를 증진시키기 위해 2년 주기의 전국디지털신문프로그램 상을 마련하였다. 수상 기관은 문화유산기관으로서 전국디지털신문프로그램의 참여기관이 되어 디지털화할 수 있는 지면 수를 할당 받고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화 된 신문은 미국의회도서관에 제공하게 된다.

미국의회도서관은 디지털화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준을 구축기관에 제공했다. 디지털 파일의 기준은 보존을 위한 마스터 이미지로 300-400 dpi의 TIFF 이미지와 데이터 손실이 없는 JPEG 2000와 PDF 파일이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 구조의 디자인용으로 METS XML

스키마, OCR 인식 정보와 해당 정보와 매핑용으로 ALTO XML 스키마, 보존과 이미지용 메타데이터로 PREMIS와 MIX, 목록의 기술용으로 MARC와 MODS 등이 적용되었다. 2014-2016 전국디지털신문프로그램 기술(technical) 가이드라인에는 RDA MARC 연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편리한 이용 접속을 위해 오픈 액세스와 무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쟁고 기반(Django-based)의 웹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리포지토리를 구축하였다.

전국디지털신문프로그램은 현재 서유럽 언어로 된 신문만 제공 중이나, 2~3년 후 동유럽 언어와 아시아 언어(한중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5년 1년간의 통계를 보면 연간 390만여명이 사이트를 방문하여 447만여면이 이용되었다. 평균적으로 이용자의 80%가 미국이용자이며 이용자의 40%가 신문이용에 10분정도를 소요하고, 사이트의 접근은 미국의회도서관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보다는 구글 키워드검색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 미국의회도서관은 대표적인 온라인신문컬렉션인 미국신문연대기사이트(Chronicling America, <http://www.loc.gov/chroniclingamerica/>)를 운영하고 있다. 1836년부터 1922년까지 발행된 신문을 제공하며, 현재는 1690년(미국 최초 발행 신문)부터 1960년(저작권법 개정)까지의 미국에서 발간된 모든 신문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2015년 현재 44개의 주 및 자치령의 주립 도서관, 역사협회, 대학 등이 참가했으며, 1,945종 10,244,477면의 방대한 신문이 서비스되고 있다.

미국연대기사이트의 정보들은 미국신문디렉토리(US Newspaper Directory)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다. 1690년부터 현재까지의 미국에서 출판된 지방신문을 포함한 153,642건의 원문은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별도의 뷰어없이 PDF와 JPG 원문이미지로 이용할 수 있다. OCR을 통한 텍스트 추출도 가능하며, MARC레코드의 서지데이터와 50만종 이상의 소장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회도서관은 대량으로 증가하는 신문자료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하여 반영구적인 보존처리를 실행하고, 신문에 대한 수집과 접근, 보존에 따르는 사안들을 협력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점이 신문 컬렉션에 대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신문

토마스컬렉션(The Thomason Collection of Tracts)은 영국온라인신문컬렉션 가운데 시대별로 가장 오래된 신문컬렉션으로, 17세기 Newsbooks 신문들의 디지털컬렉션이다. 17세기 영국 역사의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며, 정치, 종교 논쟁과 올리버 크롬웰에서 연방정치시대의 시대상을 설명하는 영국정치사의 중요사료로써 주로 1640에서 1661년까지 런던에서 발행된 인쇄물로 구성되어 있다.

버니컬렉션 데이터베이스는 찰스 버니 목사(1757~1817)에 의해 수집된 1603에서 1817년까지의 신문과 뉴스 팜플렛 700권으로, 영국 런던에서 출판되거나 일부 지방 아일랜드어와 스코틀랜드의 논문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컬렉션에는 1,271종이 있다.

영국 신문의 망라적인 수집은 1840년부터 시작되었고, 1869년부터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신문 발행자들로 하여금 1부씩을 국립도서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정 납본을 시행하였다. 납본 대상은 일간지와 주간지가 모두 포함되며, 현재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발행되는 1,500여종의 일간지와 주간지를 납본받고 있다. 해외 신문은 영연방에서 발행된 신문을 포함하여 영어와 유럽언어로 발행된 신문을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종의 해외 신문을 수집하고 있다. 신문 컬렉션의 규모는 책자 형태로 제본된 신문 664,000권, 마이크로필름 630,000롤, 디지털 사본은 706종 1,717만 페이지에 이른다.

영국국립도서관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영국정보시스템합동위원회(The 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JISC)로부터 300백만 파운드를 지원받아 게일(Gale)사와 협력하여 3백만 면을 디지털화하였다. 이 사업의 결과, 영국의 모든 대학에서 디지털화된 신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는 Brightsolid사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화가 추진되었으며, 이들 파일에 대해서는 일정한 구독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2010년 5월에는 가족사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출판업체인 Findmypast와 신문 4,000만면을 디지털화할 계획으로 10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조상의 취미와 업적,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외부의 지원에 의해 추진된 신문의 디지털화의 결과로 영국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등 101개 지역에서 1800년부터 1950년까지 발행된 신문 약 1,200만면 이상을 디지털화하였고, 2015년 기준 552종, 12,527,049면의

신문자료가 공공도서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디지털화에는 5대의 Zeutschel A0 스캐너가 사용되었으며 24비트 컬러의 400dpi의 고품질 디지털 이미지로 스캔하였다. 스캔된 이미지는 JPEG2000 형식으로 변환되어 아카이브에 저장되고 OCR 처리 후 전자텍스트로도 저장된다. 신문의 편리한 검색을 위해 제호, 날짜, 기사, 제목, 카테고리 등을 작성하여 각 신문 지면에 텍스트와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XML 파일을 함께 구축한다.

영국신문아카이브는 유료로 제공되나, 신문서비스를 위한 방대한 자료 보유와 편리한 기능 구현으로 온라인을 통해 세계적인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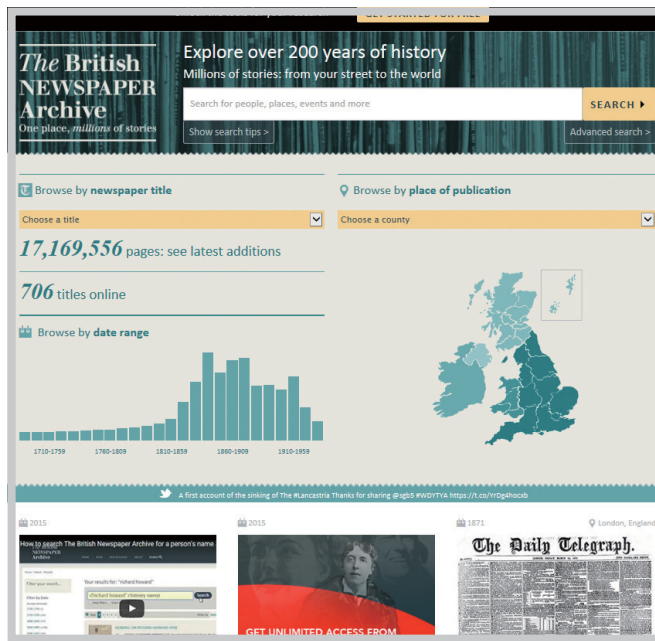


그림 4. British Newspaper Archive 홈페이지

영국국립도서관은 2009년 문화부로부터 3,300백만 파운드를 지원받아, 2013년 기존 콜린데일에 있던 신문자료관을 폐쇄하고, 2015년 보스턴스파에 신축한 전국신문자료관(National Newspaper Building)으로 이전하였다. 최첨단 시설의 전국신문자료관은 3세기에 걸친 6,000만 이상의 신문자료를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수용력을 가졌다. 저산소의 자동서고 시설이며 서가는 22m 높이의 고밀도형으로 길이는 33km에 달한다. 대규모 서가를 로봇 크레인이 검색시스템에 따라 움직여 출납을 담당한다.

종이신문이 대체자료나 이용제한이 없는 경우, 런던의 세인트 판크라스관과 보스턴스파관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전국신문자료관에 보존되는 종이신문이 보스턴스파관에 도착하는 데는 48시간이 소요된다. 이렇듯 신문에 대한 수집과 정리, 이용서비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철저하고도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세계적인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신문은 저널과 달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기록한 1차 정보원으로써, 그 자체가 역사의 기록이나 다름없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신문을 중요한 자료로 다루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문헌으로서의 신문자료에 대한 위상을 다시 정립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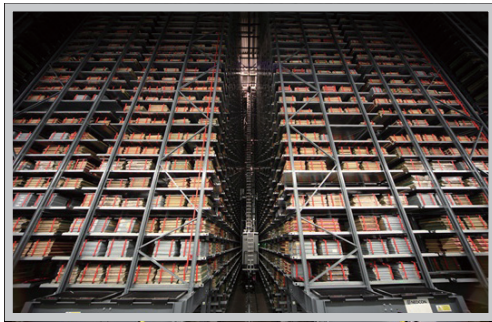


그림 5. 보스턴스파 신문자료관 자동서고
© Kippa Matth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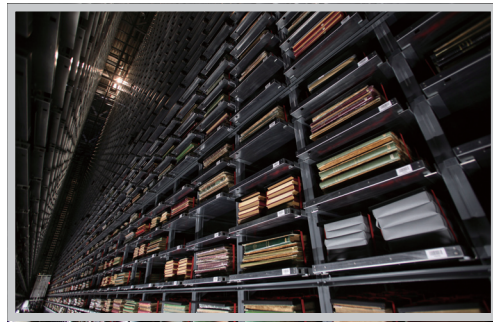


그림 6. 보스턴스파 신문자료관 서가
© Kippa Matthews

결론

이상과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신문수집 현황과 국립중앙도서관 및 선진국의 신문온라인컬렉션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되는 도서관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6년 2월 도서관법의 개정 이후 8월 4일부터 온라인자료의 납본이 시행되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경우 의무적으로 납본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신문자료는 대부분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를 부여받지 않는 대표적인

자료이며, 일반도서처럼 도서관이나 서점, 유통사의 관리나 유통을 위하여 ISSN이 활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인쇄본신문자료의 출판량 감소와 인터넷신문으로의 전환에 주목하여, 인쇄본 외국신문의 경우 구독 종수를 줄여 웹DB로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외부기관과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및 한국연구재단과의 정보 공유를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더 많은 외부기관의 협력활동을 확장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현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구축되어있는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기능을 보완하여 저작중심의 표출구현과 더불어, 신문의 소장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가신문자료종합목록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검색자료의 표출기능을 강화하여 신문기사 검색이 더욱 용이하도록 기능을 전면개편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British Newspapers 1620 – 1900: Final Report
<http://www.webarchive.org.uk/wayback/archive/20140614080134/http://www.jisc.ac.uk/media/documents/programmes/digitisation/blfinal.pdf>
- The “State of the Art”: A Comparative Analysis of Newspaper Digitization to Date
https://www.crl.edu/sites/default/files/d6/attachments/events/ICON_Report-State_of_Digitization_final.pdf
- The British Newspaper Archive
<http://www.britishnewspaperarchive.co.uk/help/about#digit>
- British Library opens National Newspaper Building
<https://www.bl.uk/press-releases/2015/january/british-library-opens-national-newspaper-building>

2016년 도서관 기획대담

08_ 디지털혁명과 미래의 신문 · 141

디지털혁명과 미래의 신문(2016.7.20.)

08



사회 : 김영희(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책임연구원)

패널 : 구본권(한겨레신문사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김영주(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센터장),
김익현(지디넷코리아 미디어연구소 소장)

김영희 안녕하세요. 기획대담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도서관』 제390호(2016년)에 신문을 주제로 한국 신문의 역사를 개관하는 원고들과 함께 신문의 미래를 살펴보는 특집대담을 기획한 것에 대해 미디어 역사 연구자로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신문에 대해 일반인들이 그 역사를 이해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획으로 『도서관』을 읽는 독자들이 신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화기에 근대적인 신문이 출현한 이후, 신문이라는 미디어는 한국사회의 일상생활 여러 모습을 가장 실감나게 기록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문은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보물창고로 볼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문헌과 정보를 보존, 관리하면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역할 역시 신문과는 다른 의미에서 정보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서관과 신문은 그 역할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대담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혁명 과정에서 신문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와 관련해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과 전망을 듣고자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여기에 참석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신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디지털 미디어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동안 학술 단체, 연구기관, 언론계 등 여러 곳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주제입니다. 특히 오늘 대담자의 한분으로 참석하신 김영주 연구센터장께서 계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 대담은 『도서관』을 읽는 독자들이 인터넷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문의 미래 또는 미래의 신문을 이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대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디지털혁명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구본권 디지털혁명이라고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는 디지털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를 기계화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분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만이 인식의 주체이며 글 쓰는 행위의 주체였고, 이런 사람만을 강조하여 모든 환경이 만들어졌었는데, 디지털혁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 또한 사람처럼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되는, 그래서 과거에 사람만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인식과 판단의 주체였던 시기와는 다른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 가운데 우리는 미디어의 변화, 대중매체의 변화 그 중에서도 신문에 대해 주목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익현 저는 신문이란 관점에서 디지털혁명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디지털혁명으로 인해 정보의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굉장히 좁혀졌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문 제작기간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런 변화가 갖는 의미가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제가 처음 신문에 입사하던 1990년대 초반 해도 신문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큰 일이었습니다. 콘텐츠 생산보다 그 콘텐츠를 가지고 신문을 만드는 과정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제작 과정 자체가 매우 축소됐습니다. 이제 무게중심이 제작과정보다는 콘텐츠 쪽으로 확연하게 넘어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정보의 시간적, 공간적 장벽이 무너진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는 개별적인 기사들은 파편화되어서 당일이나 신문 패키지 내에서만 읽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거리가 붕괴가 된 거죠. 이런 과잉맥락화로 인해 가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지만 신문이라는 상품의 기본 성격에 대해서 상당히 변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일상에서 디지털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지가 거의 한 세대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리안이나 유니텔과 같은 PC통신을 사용했던 것이 벌써 20년이 훌쩍 지난 일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디지털혁명이라는 용어 안에서 나름 질적인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최근의 관심사인 스마트폰 혹은 모바일이 가져온 혁명이 과거의 그 어떤 디지털혁명의 발전 속도 이상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매체가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TV를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이 TV를 앞질렀습니다. 정확한 응답률로 말씀드리면, 가장 생활에서 필수적인 기기는 스마트폰 46.4%, TV 44.1%이었습니다. 종이신문은 아주 낮은 비율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결과를 봤을 때, 신문의 미래 혹은 미래의 신문을 고민할 때는 특히 디지털 영역 안에서 모바일,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희 미디어 역사 연구자로서 신문 출현이후의 사회적 역할과 디지털혁명시대 신문의 역할이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신문이 처음 출현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19세기 말 개화기입니다. 신문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신문을 매개로 한 공공영역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배달되는 신문이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전하고, 서구 근대국가의 새로운 제도 와 문물을 소개하면서, 독자들에게 우리나라에 개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키고, 또 독자들이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한국미디어사> 과목의 수업시간에 꼭 소개하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농운이라는 18세 기생이 보낸 기서(독자투고)가 3회로 나누어 실렸어요. 제가 개화기 독자투고를 연구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기서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물포에 사는 어린 기생이 신문이라는 존재를 모르다가 어느 날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농운은 신문을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 알게 된 현실에 많은 충격을 받은 농운은 좀 더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생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공부하러 가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농운은 이제 자신은 일본에 간다고 하면서 신문을 보는 독자들에게 모두들 각성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개화하자는 내용의 기서를 보낸 겁니다. 신문이 독자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신문은 그전에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매체로 출현하여, 매일 새로운 소식과 정보로 독자들을 계몽시키고, 독자들이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신문 보급이 늘면서 그 사회적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처럼 신문은 역사적으로 여론형성이나 국민 계몽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영향력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미디어 환경 속에서 독자가 감소하면서 신문의 위기가 말해지는데 과연 오늘날의 신문의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구본권 신문의 역할에 스마트폰과 모바일에 더하여 온라인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보기 위해 도서관을 가거나 신문을 봤지만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케언 크로스의 <거리의 소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거리의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속에서 디지털을 맞이하다보니 모든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세계의 환경 자체가 거의 전복되다시피 했고, 그 중에서 신문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거죠. 김영희 선생님께서 근대에서의 신문이 근대적 주체와 근대적 여론 공간에 끼친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환경에서 신문이 과거에 점유, 전담해 왔었던 근대적인 여론의 역할을 지금 달라진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봅시다.

김익현 각 시대별로 신문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개화기 때는 정보 수요층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뉴스의 수요자들은 인텔리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자들은 계몽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무게중심이 소식 전달보다는 계몽 쪽에 더 쏠려 있었습니다. 대중매체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보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보의 생산자들도 대중화되었습니다. 일반적 정보는 기자 외에 많은 사람들이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자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사실

보도 영역에서는 경쟁력을 갖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는 당연히 기자란 일의 기본 개념 자체에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전문적인 식견,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보다는 '왜?' 라는 통찰을 정리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갈수록 신문들도 대중매체 영역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김익현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개화기 시절에는 계몽이 신문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대화, 산업화 시기에도 계몽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문 수나 열독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신문이 늘어나고 있고 여전히 계몽과 각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화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입니다. 기자보다 더 전문적이거나 더 빠른 독자와 대중들이 존재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신문의 역할을 계몽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언론이 계몽자로서의 역할을 고수한다면, 반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문도 시대와 독자가 바뀔에 따라 같이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의 역할이 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문이 담당해 온 공론장의 역할을 포털이나 새로운 로봇이 대신 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 중심의 매체인 TV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신문이 담당해야 할 공론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시대의 신문의 역할은 더 어려운 숙제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 세 분 말씀은 이전에 신문이 담당해 왔던 역할을 디지털시대에 담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여전히 신문은 공론장의 역할, 여론 형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익현 선생님은 그 대안으로 신문이 단순한 사실 보도영역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우므로 전문적인 식견과 통찰을 보여주는 역할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영주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층이 가장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소비행태가 변화되면서 종이신문 독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이에 따라 광고주의 이탈로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고품격 정보와 심층적 기사를 만들어내는 환경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운데, 과연 디지털시대에 신문이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을까요?

구본권 저는 27년째 기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한 사회의 지적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그 사회가 어떤 대중적인 신문을 갖고 있는냐인데, 아이러니한 환경에 부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자적 입장에서 본다면 신

문의 역할은 생활의 필수적인 정보획득의 도구였습니다. 과거에는 정보획득 수단 자체가 제한적이었기에 신문이 생활필수품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정보에 대해 누구나 거의 실질적 대가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정보이용이 편리해졌으며, 여론의 공간이 가장 활발해질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이상의 환경에까지 기술적으로 접근가능해진 상황이지만 과연 현실이 그러한가, 신문이 과연 그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시스템 적으로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는 이것 역시 이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기사는 과거에 40만 부, 50만 부, 100만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제한적인 접근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유통될 수 있는 플랫폼이기에 전달력이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현실은 오히려 퀄리티 저널리즘이 제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독자들에게 접근하기 좋아졌고 구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접근이 용이해졌지만, 제대로서 신문기업이 탄탄한 구조를 갖고 있느냐 묻는다면 전 세계적으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에 독자층을 지닌 유명 매체들도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답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신문이라는 것을 시장에만 맡기면 될 것인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들이 온라인에서 횡행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저널리즘이 위기를 처한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이 발전에 맞추어서 성숙된 민주주의와 식견 있는 시민(informed citizen)이 되어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는 사실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합니다.

김익현 신문의 위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더 많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문과 그것을 운영하는 언론사들은 위기를 맞고 있지만 수요자들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신문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때는 이런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종이 신문만 놓고 현 상황을 생각할 경우엔 위기탈출을 위한 바람직한 해답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독자들에게 종이 신문을 보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대가 흘러가면서 이젠 모바일 기기로 뉴스를 보는 데 익숙한 층들이 사회 주도층으로 계속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신문 영역의 위기만을 보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뉴스 패러다임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로 접근해야 합니다.

김영주 동의합니다. 신문의 위기는 개별 언론사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기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망해서 문을 닫는 언론사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계속해서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차원에서 보면 경영의 위기가 결과적으로 저널리즘의 위기로 직결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심층적 기사를 쓸 수 있는 언론인들에 대한 투자와 교육, 시스템이 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과거에는 독자들이 뉴스를 찾아다니며 봐야 했지만, 지금은 뉴스가 독자를 찾아가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뉴스는 넘쳐나고 독자는 희소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기자와 편집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와 독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독자의 입장에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다양하게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자가 있는 곳으로 뉴스가 찾아갈 수 있게끔 새로운 양식과 도구들이 필요하며, 언론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익현 모바일 시대가 도래 하면서 과거 언론사 단위의 소비가 갈수록 사라진다고 봅니다. 기사 건별 소비가 늘어나면서 언론사 브랜드가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예전엔 특정 신문을 구독했습니다. 인터넷 시대로 전환한 뒤에도 개인 PC에 자신이 자주 찾는 사이트를 북마크 해놓고 매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소비 행태가 사라졌습니다. 이젠 포털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개별 기사를 소비하는 독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언론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언론고유의 역할인 아젠다 세팅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언론사 사이트를 직접 방문할 때는 그 시간 톱뉴스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젠 옆문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모바일이나 SNS 공간에 떠다니는 뉴스를 보는 독자들은 언론사가 아젠다 세팅해 놓은 관문을 거치지 않습니다. 지난 해 하반기에 구글보다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비중이 더 많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기자 개인 브랜드를 키우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진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언론사 모델도 조직보다는 개인에 무게중심이 더 쏠리는 로펌이나 MCN⁽¹⁾ 같은 모형으로 진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 세 분 모두 현재 신문의 위기 또는 신문 산업의 위기는 전 세계적인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답이 없다고 하는 점이군요. 디지털시대가 신문이라는 매체에는 매

(1) MCN(Multi Channel Network, 다중채널네트워크): 1인 혹은 중소 콘텐츠 창작자들과 제휴해 마케팅, 저작권 관리, 콘텐츠 유통 등을 지원, 관리하는 사업

우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수용자 입장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획득할 수 있으므로 더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선호하기도하므로 구본권 선생님은 고급저널리즘(quality journalism) 형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을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개별 신문사의 위기는 어떻게 적응을 해서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영의 위기로 언론인에 대한 투자와 교육이 무너지면서 저널리즘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는 김영주 선생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군요.

결국 디지털시대 신문의 위기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올바른 그러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들이 온라인에서 더 많이 퍼지고, 수용자들이 실제 더 많이 의제 설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저널리즘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모두 동의)

구본권 초기 신문은 정치집단의 전달 수단인 하나였습니다. 권력층의 이해에 부합한 식으로 정보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다음 대중화되긴 했지만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정보이용의 문턱이 낮아지고 정보 채널이 다양해졌습니다. 동시에 제도화되고 상업화되었고 그 구조는 자본주의 사회에 더 공고화되었습니다. 미디어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지만,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민주화되면서 미디어 제작자 입장에서 보면 종전의 방식이 통하지 않게 시작했습니다. 이걸 정보의 민주화와 같다고 봅니다. 정보의 민주화가 극대화된 것이 지금입니다. 민주화와 동시에 시장에 내맡겨지면서 퀄리티 저널리즘이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신문의 위기를 떠나서 근대의 민주사회가 대의정치로 신문에 부여했었던 기능이 어떻게 디지털 사회에서 변화되었는가, 어떤 기능을 지향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주 독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대부분의 독자들이 포털에 모여 있기 때문에 포털을 중심으로 한 모든 뉴스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언론이 포털에서 벗어나는, 혹은 포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털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또 다른 플랫폼, 예를 들어 페이스북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의 의존과 같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포털이나 소셜미디어를 포함하는 건강한 뉴스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에게 다가서려는 언론인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개별 언론사나 언론사 개인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기에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하고, 포털을 포함해서 이런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희 김영주 선생님께서 공동기획하신 연구보고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학계와 언론계에서 신문의 위기가 거론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되면서 2010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신문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언론계와 학계의 전문가 50여명이 집중 연구, 토론해서 <한국 신문의 미래전략: 디지털시대의 건강한 뉴스 생태계를 위하여>라는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이 보고서는 다양한 주제들을 광범하게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 주목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개별 신문사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층적인 보도가 생산될 수 있는 취재환경과 언론인들의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범위에서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익현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GEN 서밋 컨퍼런스⁽²⁾에 다녀왔습니다. 서양, 특히 유럽 미디어들의 고민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가 포털에 대해 고민할 때 비슷하게 페이스북이 압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언론사들이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져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들의 위협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들이 주도하는 질서에 동화되고 맞춰가는 것이 현재 미디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란 얘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표된 로이터 보고서 연구 결과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독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뉴스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을 받은 것은 내가 전에 본 뉴스를 토대로 추천해주는 뉴스였습니다. 편집자들이 골라주는 뉴스는 그 다음이었고요. 또 내 이웃들이 관심 가질 만한 뉴스를 골라주는 것이 편집자 추천 뉴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독자들은 의외로 언론사 편집자들이 골라주는 뉴스에 대한 선호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본권 이걸 시장에만 맡기면 그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신문에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하는가? 신문의 공적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맡겨놨더니 과거에 그것이 부작용이 나타났고 지금은 순기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본 뉴스 기준으로 보면 아무 영양가가 없습니다. 사실 독자를 찾아가는 뉴스라는 말도 어폐

(2) GEN 서밋 컨퍼런스: 비영리 언론단체인 'Global Editors Network'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언론 종사자와 미디어 이론가, 혁신가 등 1,0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행사 주제는 '플랫폼 주도 뉴스의 대두(The rise of platform-driven news)'였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 미디어가 퍼블리셔들을 압도하는 현실에 대해 찬찬히 따져보자는 것이 이번 서밋의 전체 주제였다. 하지만 이번 서밋에서는 플랫폼 문제 뿐 아니라 로봇과 가상현실(VR) 같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뉴스 스타트업 경연대회도 중간 중간 쉬어서 참가자들의 흥미를 더했다.

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뷔페나 먹거리 장터에 데리고 가서 너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영양학적인 가이드를 해주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뉴스가 디지털화되어 사용자 위주로 변화되면서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었고 시장에 맡겨두면 말초적 뉴스로만 소비되기에 사회의 공적인 기능을 유지해야하는 것처럼, 신문도 디지털화되면서 신문의 공적인 기능을 더욱 요구할 필요가 있고 시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닌 정부나 공동체의 역할을 신문업계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미디어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김익현 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어디까지 지원해야 할까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이신문 매체만 지원해주어야 할까요?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워낙 미디어가 다양화 되고 가변화되었기에 기관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희 구분권 선생님은 사용자위주로 변화된 디지털시대에도 신문의 공적인 역할, 독자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중요한지 가이드하는 지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디지털시대에 저널리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공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김영주 선생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2010년 보고서에는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읽었는데, 보고서가 간행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김영주 2010년 ‘신문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토론회’는 종이신문의 위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종이신문의 위기를 극복하게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모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프랑스처럼 미래의 독자인 청소년들에게 신문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유통지원사업을 강화하거나 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종이’신문을 살리고자 하는 사업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뉴스미디어의 미래를 위한 대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 모바일 세상에서 뉴스 미디어의 미래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뉴스 미디어 기업들의 디지털 모바일 혁신을 어떤 식으로 도와줄 것인가, 소비자들을 위한 어떤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것인가 등을 고민했습니다. 신문사가 아닌 뉴스콘텐츠, 뉴스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품질 제고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유럽을 보면 언론에 대한 지원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신문사의 경영을 도와주는 직접 지원도 해왔

고, 정치적인 지향이 뚜렷한 진보 보수의 이념을 가진 신문 지원, 지역에서의 여론다양성을 위해 1위 신문에 대응할 수 있는 2위 신문사들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소수 민족, 소수 언어로 발행되는 신문에 대한 직접 지원도 합니다. 최근에는 유럽의 경우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이러한 신문들이 모바일 디지털 혁신을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연구나 미디어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언론에 대한 지원이 종이신문 위주의 기존의 언론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개별 언론사가 아닌 좋은 콘텐츠를 위한 지원과 언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에 기여해야 하고, 지원의 목표 역시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그렇군요. 종이신문사에 대한 지원 사업에서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 디지털모바일 혁신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지원 방향에 변화가 있었군요. 유럽에서 정부가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보수, 진보의 이념적 색채가 뚜렷한 이등 신문사를 지원하는 방식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미디어 소비가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미디어 소비자 교육에 대한 실질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권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의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는 더 미디어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고 따라서 앞으로 평생학습이 중요해지는데, 이는 미디어를 통해 얼마나 주체적으로 미디어 수용능력을 갖춘 시민이냐를 말합니다. 학교 졸업 후에도 주체적으로 잘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어능력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요구되고 단순히 수용자 교육을 넘어서야 합니다.

김영희 구본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현대사회는 미디어 의존사회입니다. 수용자들이 태어나서 삶을 마칠 때까지 평생 아마 가장 많이 접하고, 의존하는 것이 미디어일 겁니다. 따라서 수용자들이 주체적으로 미디어를 읽고, 비판하고,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 각 교육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 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10년도 더 이전부터 거론된 이야기입니다. 오래 전에 언론학계에서 관련 교재도 개발했고요. 하지만 제한된 수업시간에 새로운 과목이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기존

교과영역과 충돌하는 영역 싸움이기도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워낙 입시위주 교육이다 보니 정말 필요한 교육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고요.

김영주 프랑스는 미디어교육이 공교육 교과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나마 자유학기제에서 미디어교육을 선택하는 학교에 한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익현 미디어리터시교육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정보의 소비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디어가 우리를 지배할지는 모르겠지만 소셜미디어는 주변을 통해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는 한 사람이 건전한 시민으로 자라기 위해서 교육의 필요성이 절대적입니다.

김영희 세 분 모두 미디어 리터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프랑스 공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특히 디지털시대에 미디어 수용자 교육이 매우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수용자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문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미디어 수용자 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되는군요. 미래의 신문을 살펴보면 꼭 언급해야 할 추가 사항들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권 신문이 담당해왔었던 기능위주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하지 않나 합니다. 과거에는 전파지 역할,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용자가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 정보를 수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나 합니다. 한 사회의 지적수준을 과연 신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냐를 지금 신문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것은 중요 합니다. 모바일 디지털 환경에서 뉴스가 어느 때보다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왜 신문, 저널리즘의 위기를 논하는지와 공급자-퀄리티 있는 저널리즘, 수용자-판별능력, 제도자-지원을 하고 있지만 과연 언론의 수준이 높아졌는지 측면에서는 모두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디어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영주 요즘 대학생들은 신문이 재미가 없어서 안 읽는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뉴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내가 언론사를 팔로우 하거나 친구들이 기사를 보고 추천이나 공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뉴스 자체가 별로 많이 올라오지 않고 올라오더라도 잘 보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들은 여행, 음식, 맛집 등 정말 일상적인 것들이고 흥미로운 동영상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정보들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체 문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

저야하는 부분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회문제에 무관심하고 뉴스를 멀리하는 젊은 세대도 문제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변하지 않는 신문도 문제입니다. 신문도 변해야 합니다. 예전 독립신문이나 현재의 조선일보나 신문의 형태나 편집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종이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미래의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자들이 변화에 상당히 보수적인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익현 생산자의 변화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재미가 없습니다. 뉴스 만드는 일을 하는 제가 봐도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전 IT 매체 쪽 기자인데, 저희가 중요하게 처리하는 뉴스 중 하나가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 발표하는 소식입니다. 대개 시차 때문에 그런 뉴스는 새벽 3시, 4시쯤 나옵니다. 상당수 기자들은 이 뉴스를 처리하기 위해 새벽 일찍 일어나 일을 합니다. 아침에 기사를 보면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있지요. 그런데 기자들이 쓴 글보다 그 분야 전문가들이 쓴 글들이 훨씬 더 읽을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야구 메이저리구나 유럽축구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덕후’로 불리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스토리텔링들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배경 정보도 훨씬 더 풍부하구요. 이런 사람들한테 기자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해왔던 기자, 더 나아가 언론사들이 이런 시대 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위기 상황이고, 또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김영희 대학생과 같이 젊은 수용자들의 관심사가 일상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므로, 신문이 젊은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흥미를 끝만한 소재와 방식에 대한 고민, 덕후라는 사람들의 이야기 방식 등이 왜 공감을 받는지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공교육에서 공동체의식과 사회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이 되어있다면 자연스럽게 사회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공적인 문제를 다루는 뉴스에 더 주목하겠지요.

구본권 미래의 신문을 이야기할 때 신문의 역할은 중요한 정보의 필터 노릇을 계속 할 것으로 봅니다. 접근방식이 바뀌고 정보의 범람시대에서 우리는 뉴스를 많이 봤지만 무엇을 봤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정보를 캐치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정보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제한된 주의력을 어디에 할당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진짜 정보는 무엇이지? 그걸 판단하고 제시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신문입니다. 그것에 가장 적합한 것이 종이신문이었습니다. 1면에 실을 수 있는 기사가 몇 개 안되기 때문에 정보를 추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설적으로 이런 공간의 제약이 갖는 한계로 인해 신문은 앞으로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뉴스범람의 시대에 정보의 옥석은 누가 가려줄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이를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용자들에게 정보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보다 스마트한 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계몽자로서의 언론의 역할은 미래의 독자들에게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범람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디지털혁명이 지니고 있는 동전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 이 흐름 속에 누가 옥석을 가릴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언론과 언론 소비자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익현 제가 기자들이 계몽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건 구한말 기자들이 맡았던 그런 역할을 의미한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제너럴리스트에서 조금은 스페셜리스트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단 의미였습니다. 정보의 옥석을 가려주는 부분에 대해선 김영주 박사님 의견에 대체로 공감합니다. 사람들은 ‘관심 있을 만한 도서’ 같은 걸 추천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깜짝 놀랄 뉴스를 접하는 즐거움을 맛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반론은, 제대로 추천해주기 위해선 개인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자연스럽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는 반론입니다. 둘 모두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맞춤형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편집자가 일방적으로 뉴스를 골라주는 방식과 개인맞춤형의 중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쪽이든 종이신문들이 전성기를 누렸던 ‘좋았던 그 때’로 돌아가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구본권 저는 디지털화된 세상은 정보를 기계가 처리하고, 정보와 유통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범람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과거의 모델과 다를 수 밖에 없고 두 가지 방법, 즉 검색과 편집 두 가지를 통해 접근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편집밖에 없었습니다.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도 검색이라는 환경에 맞춰 독자 전달방법을 고민해야 저널리즘의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익현 토론 주제가 디지털혁명과 미래 신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언론사는 사실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미래 언론사는 어떤 모델일까, 미래의 기자는 어떤 형태로 일하게 될까 생각해본 적도 있구요. 전 언론사는 갈수록 양극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사의 구조자체가 로펌이나 MCN 같은 구조로 변해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로펌은 조직도 중요하지만 개인 변호사들의 역량과 전문성이 훨씬 더 중요한 구조입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매체 브랜드

를 등에 업고 일하던 시대는 서서히 종말을 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 브랜드화된 기자들의 개별적 기사들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예전엔 언론사란 조직이 앞서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개별 기자들의 브랜드에 좀 더 무게중심이 쏠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언론사 모형입니다.

김영주 로봇이 기사를 쓰는 시대입니다. 뉴스를 브리핑해주는 로봇도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 시대, 독자들이 변하고 있기에 언론사도 언론인도 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저널리즘의 원칙 같은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인데, 저널리즘 원칙이라는 말 앞에 디지털을 붙여 디지털 시대의 저널리즘 원칙은 무엇일까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적용되던 저널리즘 원칙 중에 유지해야 할 것과 수정되어야 할 것,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또 다른 숙제를 남겨두었다 생각합니다.

김영희 미래 신문의 모습에 대한 김익현 선생님의 전망이 흥미롭습니다. 신문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기자들로 조직되고, 어떤 신문의 기사인가가 아니라 어느 기자가 쓴 기사인가가 더 중요해지는 개인 브랜드 시대라는 전망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미래의 신문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적인 문제에 대해 보도하고 논평하는 저널리즘 기능이 여전히 중요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일 겁니다. 지금까지 <디지털혁명과 미래의 신문>을 주제로 전문가 3분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담을 마무리한다면, 디지털시대 신문의 저널리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기자들의 노력, 수용자 교육이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습니까.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도 연구현황

09 _ 2016년도 연구현황 · 157

도서관정책기획단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정책기획단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증장기 발전 방안 연구 |

- **연구책임자:** 강필수(채움씨앤아이)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센터 및 참여도서관을 선정하여 현황을 조사하여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초 자료연구, 실태조사 및 도서관 정보화 관련 최신동향 연구 등을 수행하여 책이음서비스 발전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주제가이드의 한국근대문학 분야 보안을 위한 후속 연구 |

- **연구책임자:** 노영희(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근대문학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참고정보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 구축된 한국근대문학 분야의 주제가이드를 보완하여 완전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글로벌 오픈엑세스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

- **연구책임자:** 남영준(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오픈엑세스 환경의 학술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학술정보 유통의 선순환 체제 정착에 기여하며 논문게재료를 기반으로 기존 유료학술지의 오픈엑세스화를 추진하는 최근 글로벌 오픈엑세스 환경변화에 대하여 국내 오픈엑세스 거버넌스 체제의 범국가적 대응전략 수립

국내 근대문학 소장실태(주요종합잡지 1894~1945) 및 매일신보 연구 |

- **연구책임자:** 방민호(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내 근대문학자료 소장 실태 조사를 통해 조사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종합목록 및 원문 DB 구축 사업을 위한 기초 자료로의 활용

사서교육훈련 효과성 입증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 |

- **연구책임자:** 박옥남(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사서교육훈련 평가 현황 분석(2013~2016 집합교육대상) 등을 통해 사서교육훈련(新)평가체계 마련 및 4단계 평가도구 개발과 사서교육훈련 교육성과 평가 매뉴얼 개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 **연구책임자:** 송기호(공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공공도서관의 교육정보서비스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서 청소년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학교도서관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학교 밖 청소년 독서심리 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한윤옥(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 등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독서심리 코칭 프로그램의 단계적 개발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제고를 위한 기준 및 매뉴얼 개선 연구

- **연구책임자:** 배경재(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국제 기준과 국내의 지침과 매뉴얼을 반영하면서도 도서관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실제적인 장애유형별 세부 기준과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 평생학습 환경 조성과 복지 증진에 기여

활용도 높은 데이지도서 기반 독서보조기기 개발 타당성 연구

- **연구책임자:** 임순범(숙명여자대학교 ICT융합공학부 교수)

데이지도서 기반의 독서보조기기 개발 타당성분석을 통해 장애인이 쉽고 편리하게 데이지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독서보조기기 개발·보급에 대한 올바른 방향정립과 효율적인 지원 시책 수립

점자자료(점자도서, 점자악보) 점역 및 출판지침 표준화 연구

- **연구책임자:** 민혜경(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회)

점자자료의 점역지침 및 출판지침 표준화를 통한 점자자료 제작의 일관성 유지, 제작의 효율성 제고,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이용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또한 국내 점자자료 제작기관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표준 마련

국립중앙도서관 고신문 디지털컬렉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신문 디지털 컬렉션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다
고신문 목록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 고신문 목록]

순번	신문명	제공 기간	발행처	발행주기	언어	비고
1	가정신문(家政新聞)	1946.03.25 ~ 1947.07.26	서울	일간	국문 및 국한문	
2	군산신문(群山新聞)	1947.11.15 ~ 1949.06.29	군산	일간	국한문	
3	동광신문(東光新聞)	1946.06.20 ~ 1948.12.31	광주	일간	국한문	
4	민주중보(民主衆報)	1945.09.20 ~ 1946.12.31	부산	일간	국한문	
5	제국신문(帝國新聞)	1898.08.10 ~ 1899.05.31 / 1899.10.12 ~ 1901.08.27 / 1902.08.11 ~ 1902.12.29	서울	일간	국문	
6	조선신문(朝鮮新聞)	1924.01.01 ~ 1925.08.30	서울	일간	일어	
7	광주민보(光州民報)	1945.11.20 ~ 1946.06.19	광주	일간	국한문	東光新聞으로 제호변경
8	남선경제신문(南鮮經濟新聞)	1950.01.01 ~ 1950.06.25	대구	일간	국한문	
9	연합신문(聯合新聞)	1949.01.22 ~ 1949.06.29 / 1950.01.01 ~ 1950.06.27	서울	일간	국한문	
10	제주신보(濟州新報)	1947.01.01 ~ 1948.04.20	제주	(격)일간	국한문	
11	한성일보(漢城日報)	1946.02.26 ~ 1950.06.15	서울	일간	국한문	
12	현대일보(現代日報)	1947.01.29 ~ 1947.06.10	서울	일간	국한문	
13	황민일보(皇民日報)	1942.06.25 ~ 1942.12.31	경성	일간	일어	
14	국민신문(國民新報)	1939.04.03 ~ 1942.08.30	경성	주간	일어	무가지
15	대한독립신문(大韓獨立新聞)	1945.11.03 ~ 1947.02.14	서울	일간	국한문	민보로 제호변경
16	독립신문(獨立新聞)	1946.12.27 ~ 1948.12.31	서울	주간 → 일간	국한문	
17	독립신보(獨立新報)	1946.05.26 ~ 1948.12.30	서울	일간	국한문	
18	민보(民報)	1947.02.15 ~ 1947.06.15	서울	일간	국한문	
19	민중일보(民衆日報)	1945.09.18 ~ 1948.05.30	서울	일간	국한문	
20	서울석간(서울夕刊)	1947.07.01 ~ 1949.09.15	서울	일간	국한문	조선중앙일보로 제호변경
21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	1974.07.01 ~ 1979.09.15	서울	일간	국한문	서울석간에서 제호변경
22	중앙신문(中央新聞)	1945.11.01 ~ 1948.04.07	서울	일간	국한문	
23	강원일보(江原日報)	1947.10.08 ~ 1949.06.30	춘천	일간	국한문	
24	경남일보(慶南日報)	1909.11.05 ~ 1912.08.09	진주	(격)일간	국한문	
25	고려시보(高麗時報)	1933.05.01 ~ 1941.06.14	개성	월2회	국한문	
26	공립신보(新韓民報) 共立新報(新韓民報)	1907.04.26 ~ 1909.01.27	샌프란시스코	주간	국문	



고신문 디지털 컬렉션
열람하기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http://dcollection.nl.go.kr>) → 소장원문
→ 원문유형별검색 → 신문(~1950) → 신문날짜별 검색, 색인어 검색

27	광명일보(光明日報)	1947.05.01 ~ 1947.08.14	서울	일간	국한문	
28	농민주보(農民週報)	1945.12.29 ~ 1947.12.30	서울	주간	국문	
29	대동신문(大東新聞)	1945.11.25 ~ 1947.12.30	서울	일간	국한문	
30	대중일보(大衆日報)	1946.06.02 ~ 1948.06.27 / 1949.09.08 ~ 1950.06.20	인천	일간	국문	
31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4.08.04 ~ 1905.03.09 / 1905.08.11 ~ 1910.08.28	서울	일간	국한문	
32	동방신문(東方新聞) DongBang Times	1950.01.08 ~ 1950.06.09	강릉	일·주간	국한문	경제기사 중심
33	동방신문(東邦新聞) DongBang Press	1948.09.25 ~ 1949.01.25 / 1947.07.01 ~ 1950.06.15	대전	일간	국한문	
34	만선일보(滿鮮日報)	1939.12.01 ~ 1940.09.30	장춘(중국)	일간	국한문	
35	만세보(萬歲報)	1906.06.17 ~ 1907.07.22	서울	일간	국한문	
36	매일신보(每日新聞)	1910.08.30 ~ 1945.08.16	서울	일간	국한문	
37	무역신문(貿易新聞)	1947.09.08 ~ 1948.09.22	서울	일간	국한문	1947년 제호는 '新貿易', 1948 제호는 '貿易新聞' (1948년 신문명 바로 밑에 "新 貿易 改題"라 기록되어 있음) 후에 商業日報로 제호변경
38	상업일보(商業日報)	1947.10 / 1948.11 ~12	서울	일·순간	국한문	貿易新聞에서 商業日報로 제호변경
39	예술통신(藝術通信)	1946.11.05 ~ 1947.03.02	서울	일간	국한문	文化日報로 제호변경
40	문화일보(文化日報)	1947.03.11 ~ 1947.09.24	서울	일간	국한문	藝術通信에서 文化日報로 제호변경
41	민주일보(民主日報)	1947.01.01 ~ 1947.07.26 / 1948.05.05 ~ 1948.12.11	서울	일간	국한문	
42	시대일보(時代日報)	1924.03.31 ~ 1926.07.31	서울	일간	국한문	
43	신한민보(新韓民報)	1902.02.10 ~ 1947.12.25 / 1949.01 ~ 1950.12.28	로스앤젤레스	주간	국문, 영문	
44	우리신문	1947.05.17 ~ 1948.05.25	서울	일간	국한문	
45	전국노동자신문 (全國勞動者新聞)	1945.11.01 ~ 1947.08.08	서울	(격)주간	국한문	
46	조선중앙일보(여운형) 朝鮮中央日報(여운형)	1933.03.07 ~ 1936.09.04(영)	서울	일간	국한문	
47	중외신보(中外新報)	1946.04.19 ~ 1947.06.27	서울	일간	국한문	
48	중외일보(中外日報)	1926.11.30 ~ 1931.06.19	서울	일간	국한문	
49	황성신문(皇城新聞)	1898.09.05 ~ 1905.11.17 / 1906.02.13 ~ 1910.09.14	서울	일간	국한문	

■ 2013년 국가DB 구축 ■ 2014년 국가DB 구축 ■ 2015년 국가DB 구축

귀중본 고신문 디지털 컬렉션 해제

“동마다 넓은 집으로 신문종람소를 정하고 저녁을 먹은 뒤에 남녀노소가 각각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둘러앉아 혹 담배를 피우고 혹은 아이를 안고 혹은 일거리를 하되, 유식한 한 사람이 높은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낭독한 뒤에 뜻을 설명하면 내외국의 사정과 고금의 형편을 모를 것 없이 다 알게 되었다.”

(김유탁, 「신문 광포(廣佈) 의견서」, 『서우』, 1907. 8)



가정신문 家政新聞

1946.03.21 ~

1946년 3월 21일 극우지였던 「대동신문」의 자매지로 여성전문 일간지였다. 여성 전문지였기 때문에 대부분 한글 위주로 편집이 진행되었지만 이후에는 국한문을 혼용하기도 하였다. 신문의 논조는 이승만과 김구를 옹호하는 우편향 신문이었다. 신문의 상태는 한글 전용 신문의 경우는 읽기 편하지만 이후 국한문 혼용으로 바뀌면서 종이의 질이 떨어지고 보관상태가 좋지 못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46년 3월 25일자(5호)부터 1947년 7월 26일자(259호)까지 서비스하고 있다.

군산신문 群山新聞

1947.11.15 ~ 1961.03.01

창간사에 좌도 우도 아닌 중립적인 필법을 내세우겠다고 했지만 이미 좌익이 힘을 잃은 지 오래되었고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기 일보직전이었기 때문에 우파의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김구와 한독당 계열의 기사가 많이 실리기도 했다. 군산신문은 지역 기사를 다수 수록하였다. 신문의 보관상태는 양호하며, 한국전쟁으로 북한군이 군산을 침입한 7월 18일까지 신문을 발행했는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47년 11월 15일 창간호부터 1949년 6월 29일(509호)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신보 國民新報

1939.04.03 ~ 1942.08

1939년 4월 3일에 창간된 「국민신보」는 「매일신보」의 자매지로 주간지이자 무가지 개념으로 발행되었다. 일본을 찬양하는 내용의 논설과 사설, 문학작품이 주로 실려 있으며 사진과 삽화가 적절하게 편집되어있다. 전쟁기간에 발행된 신문으로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일제의 황국신민화 논리에 충실하여 쓴 글 등이 남아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신문이다.

남선경제신문 南鮮經濟新聞 /

경제신문 經濟新聞

1946.03.01 ~ 1950.08.01

1946년 3월 1일 대구에서 창간된 경제일간지로서, 우익계열의 신문으로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1950년 3월 22일자부터 「경제신문」으로 제호를 바꾸고, 1950년 8월 1일 대구매일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했고, 1960년 7월 7일 「매일신문」으로 개칭했으며 1980년 언론통폐합을 거쳐 현재에도 발행되는 신문이다.





독립신문 獨立新聞

1946.12.27 ~ 1948

중경 임시정부에서 1945년 10월 11일 창간되어 15호까지 발행되었던 「독립신문」은 1946년 12월 27일 속간되었다. 독립신문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896년 4월 7일 서재필이 창간한 신문이고, 둘째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간한 신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독립신문이 중경임정에서 발행한 독립신문으로 국내에서 다시 속간된 신문으로서, 기사는 주로 김구와 한독당(韓獨黨)의 입장 표방을 내용으로 삼았다. 1948년 11월 9일 최윤엽에게 판권이 양도되면서 일반 사실보도 중심으로 지면이 개편되었다.

독립신보 獨立新報

1945.05.01 ~

1946년 5월 1일에 창간된 「독립신보」는 좌익계열 상황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1946년 신탁통치안을 지지하면서 좌익지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한 예로 '제주도 파업·폭동'이라고 보도한 다른 신문들과 달리, 1947년 3월 18일자 사설에서 '제주도의 궤기'라는 제목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남한 단독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후에 1947년에 들어서는 좌우합작에 지지를 표명하는 내용의 기사가 주를 이루게 되었으며, 박헌영 계열의 활동에는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동광신문 東光新聞 / 광주민보 光州民報

1945.10.10 ~ 1950

창간당시 제호는 「광주민보(光州民報)」로 158호까지 발행되고 이후 159호부터는 「동광신문」으로 개칭한 동인제로 창간된 신문이었다. 광주민보는 전반적으로 지역 기사를 중심으로 중앙의 뉴스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좌익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썼고, 이후 호남지방 한민당의 기관지로 넘어가게 된다



대한독립신문 大韓獨立新聞 / 민보 民報

1946.03.21 ~

1945년 11월 3일, 이승만 박사의 귀국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우익 일간지다. 창간호는 신문이라기보다 선전지에 가까운 모습이며, 타블로이드 2면의 등사석판 인쇄 신문으로 활자가 아닌 등사인쇄 신문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1947년 2월 14일에는 "민주언론 창달의 임무를 일층 강력하게 수행하고자 일체의 구각을 탈각하고 2월 15일부터 (민보)로 개제함과 동시에 혁신적인 보도와 주장을 가지고 명실 상부한 재출발을 하겠다"는 사고를 내었고, 이에 따라 267호를 마지막으로 제호를 '민보'로 바꾸게 된다. 민보로 개제한 이후 경영진의 교체는 따로 없었다.

민주중보 民主衆報

1945.09.20 ~ 1949

1945년 9월 1일 「중보」를 발행하였다. 8.15 광복 직후 혼란기에 새소식을 전하는 부산지역 유일의 신문이었으며, 1945년 9월 20일 「민주중보」로 제호가 바뀌었다가 후에 다시 「민주신보」로 바뀌게 된다. 논조는 중립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총파업에 대한 보도에서는 다소 좌경적인 보도 태도를 보여 주었다. 부산을 중심으로 경상남도에서 일어난 소식을 보도하는데 힘썼다.



민중일보 民衆日報

1945.09.18 ~ 1948.12.02

1945년 9월 18일 역사학자 장도빈(張道斌)이 창설한 중도우익 일간지로, '국사강좌', '지사(志士)의 추억', '명사(名士)의 편영(片影)' 등 역사에 관한 연재물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1947년 6월 6일 윤보선(尹潽善)이 판권을 인수하여 속간 제1호부터 새로 발행되었다. 광복 직후 좌우대립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에서 민족주의 언론의 정도를 걸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1948년 12월 2일 정부 비난 선동 혐의로 결국 폐간되었다.



연합신문 聯合新聞

1949.01.22 ~ 1962.01.01

1949년 1월 1일 창간한 대판 4면제의 석간신문이다. 창간 무렵 월 구독료는 400원 이었는데, 독특하게 가두판매에 적극 나서 신문 1부를 3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당시 신문용지로는 혁신적인 대판 4면제 신문을 창간하였고, 한국전쟁으로 휴간 되었다가 1951년 1월 1일 부산에서 속간호를 냈는데, 1953년 8월 31일 국회간첩단 사건으로 주필 정국은이 구속 사형되고 발행인 양우정도 실형을 선고받아 신문 발행이 중단되어 버렸다. 김성곤이 1954년 3월 판권을 인수하여 신문을 다시 발행 했고, 1960년 7월 11일부터 제호를 「서울일일신문」으로 바꿔 발행하다가 1962년 1월 1일 자진 폐간하게 된다.

제국신문 帝國新聞

1898.08.10 ~ 1910.08.02

원명은 「태국신문」이었으나, 1903년 7월 7일 「제국신문」으로 제호를 바꿨었다. 과감한 논조로 무능한 정부와 관리의 부패 및 일본세력의 국권침투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하며 순한글로 발행되어 접근하기 쉬워 민중을 계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주신보 濟州新報

1946.01.26 ~ 1962.11

1946년 1월 26일 창간한 격일제 제주신문이다. 1948년 4·3사건이 발발하자 신문은 20여일간 휴간하였고, 1948년 10월에 제주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4·3사건 진압 명분으로 파견된 서북청년단이 이 신문을 인수하여 10개월 간 발행하기도 했다. 창간 무렵 지역적인 고립과 인쇄시설 미비와 함께 한국전쟁과 4.19 의거를 겪으면서도 제주도 유일의 지방일간지로 성장했다. 1947년 1월 1일부터 1948년 4월까지 3·1 발표사건을 시발로 1948년 4·3봉기로 이어지는 제주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를 담고 있는 신문이다.



조선신문 朝鮮新聞

1908.12.01 ~ 1942.02

한국에서 일본인이 발행한 일본어 일간 신문으로 「경성일보(京城日報)」, 「부산일보(釜山日報)」와 함께 당시 한국 내 발행 일본어 3대 신문의 하나로 꼽힌다. 인천에서 발행되던 「조선신보(朝鮮新報)」와 조선타임즈가 합병되어, 창간된 신문으로 한국 거주 일본인의 '민간지'로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와 대비되는 민간지를 자처하였다. 1942년 조선총독부의 언론 통제 정책에 따라 경성일보에 흡수되면서 1942년 2월 폐간되는데, 조선신문은 일제 시기 재한 일본인 사회와 일제의 침략·통치 정책 등 연구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조선중앙일보 朝鮮中央日報 / 서울夕刊

1947.07.01 ~ 1952.04.15

서울석간은 1946년 1월 30일 창간되어 81호까지 발행한 신문이며, 이후 82호부터 조선중앙일보라는 신문명으로 1947년 7월 1일자 발행한 일간신문이다. 82호 속간호를 내면서 [서울석간 改題] 라는 표식을 제호 바로 아래에 인쇄하여 한달간 발행했다. 여운형이 1933년 창간했던 '조선중앙일보'와는 전혀 다른 신문이다. 서울 석간이 반탁을 내세운 우익계 일간지였다면, 82호로 지령을 승계하여 속간된 '조선중앙일보'는 속간호에서 김일성의 사진을 1면에 게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좌익지에 속한다.



중앙신문 中央新聞

1945.11.01 ~ 1948.07.08

1945년 11월 1일 창간된 일간신문으로, 국민신문보다는 이름으로 발간하려다가 경영진과 직원사이에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 협의하는 과정에서 명칭이 바뀌었다. 해방후 「조선민민보」, 「자유신문」과 함께 언론계를 이끌던 신문 가운데 하나였다. 좌·우익 양측을 같은 비중으로 다룬 중도지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좌익지와 더불어 신탁통치안의 찬성에 앞장서며 우익청년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는 등 미군정의 강력한 언론단속으로 무기정간 처분을 당하였다. 이후 1947년 4월 19일 간행이 재개되면서 좌익계 기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변화를 꾀하였으나 '남북연석회의', '5·10'선거 등에 소극적 지지표명으로 1948년 7월 중간하게 된다.





한성일보 漢城日報

1946..02.26 ~

1946년 2월 26일 창간된 일간신문으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와 함께 대표적인 우익 일간지 가운데 하나였다. 1946년 9월 총파업으로 휴간했다가 그해 10월 1일 속간했고, 1949년 2월 인쇄사정을 이유로 다시 휴간했다가 그해 9월 1일 속간하였다. 한국전쟁 전까지 보수적 논조로 일관했으며, 전쟁 후 사장 안재홍이 납북 당하여 폐간당하게 된다.

현대일보 現代日報

1946.03.25 ~ 1948.11

1946년 3월 25일 창간된 대표적인 좌익계열의 일간신문으로, 1946년 9월 6일 미군정 비방혐의로 포고령 2호 위반으로 무기정간 되기도 했는데, 이후 우익인 대한독립청년단의 서상천이 판권을 인수하여 1947년 1월 29일 166호로 속간했다. 간행주체가 우익으로 바뀐 뒤에 편집에 큰 차이는 없지만 등장인물들이 좌익에서 우익으로 전면 교체되고 있다.



황민일보 皇民日報

1942.06.25 ~ 1945

1942년 06월 25일 「경성일보」가 발행한 자매 일간지로 창간되었다. 「경성일보」는 1906년 이토히로부미가 「한성신보」와 「대동신보」를 합병하여 통감부 기관지로 창간하였는데 1910년 한일합방으로 총독부의 기관지가 되어 일제침략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등 「황민일보」외에도 「소국민신문」, 「월간소국민」, 「연성화보」등의 일간과 주간, 월간 간행물을 발행하여 전쟁완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강원일보 江原日報

1945.11.27 ~

해방 직후 창간된 동인지 계열의 신문으로
10월 24일날 '평오통신'이란 이름으로 신문을 발행하다가
한달만인 11월 27일 신문 이름을 '강원일보'로 바꾸면서
오늘날 강원일보로 이어지게 된다.

경남일보 慶南日報

1947.02.10 ~ 1948.0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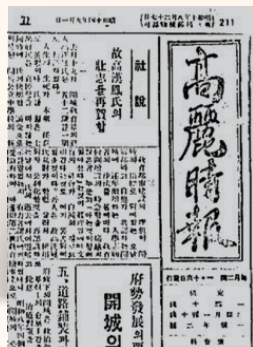
1909년 10월 15일에 경남 진주에서 발행된
대한민국 최초이자 가장 역사가 오래된 지방 신문이다.



고려시보 高麗時報

1933.04.15 ~ 1941.04.16

개성 지역을 기반으로 함도문화의 계발,
지방의 발전 등을 기치로 내걸고 1933년 4월부터
1941년 4월까지 월 2회 발행된 종합지이다.





공립신보 共立新報

1905.11.22 ~ 1909.02



신한민보 新韓民報

1909.02.10 ~

공립협회의 기관지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된 신문이 공립신보 후에 신한민보로 제호가 변경되었으며, 일제의 한국 침략에 맞서는 강력한 항일 민족운동 기관이기도 하였다

광명일보 光明日報

1947.05.01 ~ 1947.10.04

'중외경제신문'을 1947년 5월 1일 '광명일보'로 제호를 바꾸어 발간된 신문으로 경제신문을 종합 일간지로 바꾸어서 발행된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한 신문이다.



농민주보 農民週報

1945.12.17 ~ 미군정 철폐시

미군이 수립한 주한미군정청의 공보과에서 설치한 선전지 가운데 하나로서, 미군정의 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대동신문 大東新聞
1945.11.25 ~ 1957

대표적인 극우신문으로 사장인 이종형은 대표적인 친일인사이며, 주필에는 황석우, 김옥근, 편집국장 최원식, 이동욱 등이 거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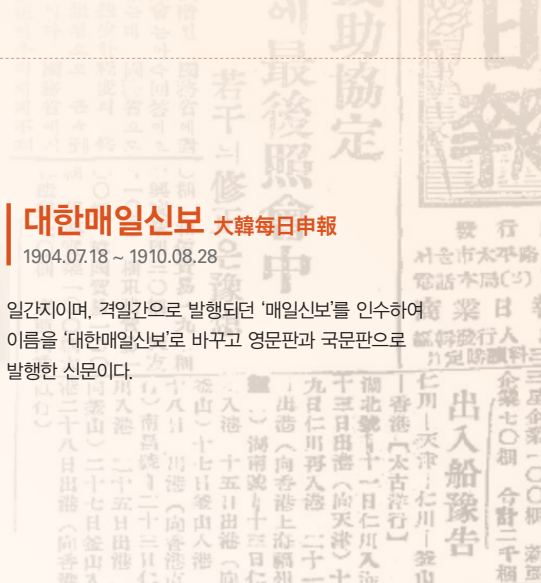
대중일보 大衆日報
1945.10.17 ~ 1950.09

타블로이드판 2면 신문으로 광복 이후 인천 최초의 민간 정론지로서, 1950년 9월에 '인천시보'로 제목을 바꾼 것은 중앙지의 성격을 가졌던 '대중일보'에서 지방지의 성격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대한매일신보 大韓每日申報
1904.07.18 ~ 1910.08.28

일간지이며, 격일간으로 발행되던 '매일신보'를 인수하여 이름을 '대한매일신보'로 바꾸고 영문판과 국문판으로 발행한 신문이다.



方針制定言明



동광신문 東光新聞

1945.10.10 ~ 1950

광주에서 창간된 신문으로 창간 당시 제호는 '광주민보'로, 좌익계 신문으로 후에 한민당으로 운영권이 넘어가며 한민당의 기관지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반공보수지이다.



동방신문 東方新聞

1945.09.07 ~ 1947.07.16

강릉에서 발행된 신문으로, 강원도의 지방 소식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하였고, 정치관계의 뉴스가 주었던 당시의 신문에 비해서 경제문제에 중심을 두고 외신을 많이 실기도 했다.



동방신문 東邦新聞

1949 ~ 1950

식민지 시기 발행되던 중선일보가 해방 이후 중앙일보와 인민일보 등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발행되다가 다시 동방신문으로 이름을 바꾸어 간행된 신문이다.



만선일보 滿鮮日報

1937.10.21 ~ 1945.08

만주국新京(滿洲國 新京, 현 중국 長春)에서 발간된 친일적 성격의 한국어 신문이다.

만세보 萬歲報

1906.06.17 ~ 1907.06.29

일간지이며, 천도교의 기관지로서 창간되었지만 창간 목적을 민중의 계몽에 두었고 실제 지면에서도 논설, 시사 등 종합지의 성격을 갖추고 있었다.



매일신보 每日新報

1910.08.30 ~ 1945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서 일제의 선전 도구 기능을 하였지만 한국어로 발행되는 신문으로서 한국어 문예 작품의 수록지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무역신문 貿易新聞

1947.09.08 ~ 1948.09.22

무역신문이 상업일보로 지령을 승계하면서 주간지에서 일간지로 바뀌었다. 종합지가 되면서 김구 중심의 우익 진영을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상업일보 商業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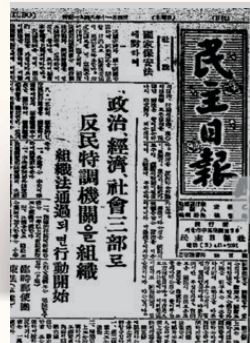
1948.10.05 ~ 1949

세계무역사정협회가 창간한 타블로이드판 2면의 경제지로, 처음에는 주간지로 발간되었으며, 당시 제호는 '신무역'이었고 1948년 2월 중순 무역신문사로 발행사가 변경되면서 제호도 '무역신문'으로 고쳤다.

민주일보 民主日報

1946.06.1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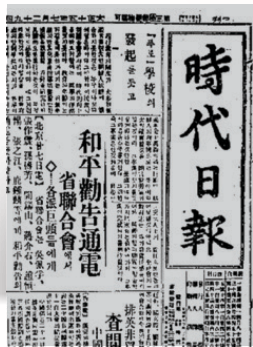
임시정부의 독립투쟁노선을 지지하면서 귀국 이후 임정의 노선을 반영하고 있었다.



시대일보 時代日報

1924.03.31 ~ 1926.08

1922년 최남선(崔南善)의 주도로 시사 주간지 동명(東明)이 창간되었고 주간지 동명이 일간지로 전환되어 창간된 신문이 시대일보이다.





예술통신 藝術通信

1946.11.05 ~ 1947.03.02



문화일보 文化日報

1947.03.11 ~ 1947.09.24

프린트 판형으로 창간된 '예술통신'은
해방공간 영화와 예술계 소식만을 언론사에 제공해 온
매체이며 후에 문화일보로 제호변경하였다

우리신문

1947.02.10 ~ 1948.05.26

좌익이 미소공동위원회 2차 대회를 앞두고 발간한
신문으로서 노유환이 1947년 2월 10일 편집발행 겸
인쇄인으로 창간한 좌익계열 일간지로서
국한문을 섞어서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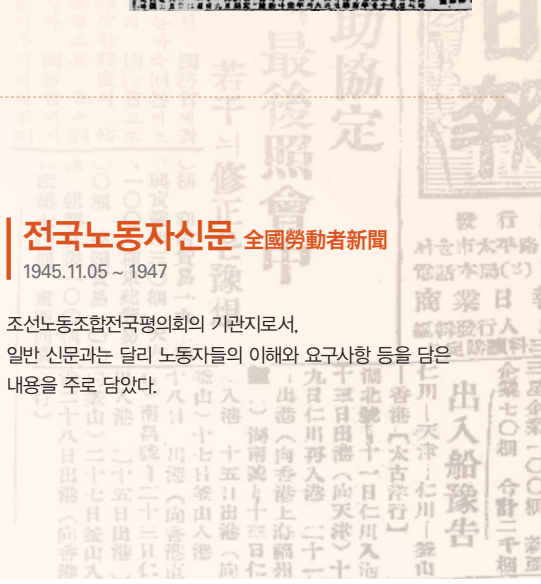


전국노동자신문 全國勞動者新聞

1945.11.05 ~ 1947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기관지로서,

일반 신문과는 달리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사항 등을 담은
내용을 주로 담았다.





조선중앙일보 朝鮮中央日報
1933.03.07 ~ 1937.11.05

중외일보가 1931년 중앙일보로 제호를 바꾸고
1933년 지령을 그대로 조선중앙일보로 신문 이름을 바꾸었으며,
중앙일보의 역사를 계승한 한국어 민간신문이다.

중외신보 中外新報
1946.04.19 ~ 1947.08.27

편집 겸 발행인인 강진희가 재정지원을 받아서
1946년 4월 19일 타블로이드판 2면으로 창간된
좌익계 일간신문이다.



중외일보 中外日報
1926.11.15 ~ 1931.06.19

시대일보의 발행 허가가 1926년 9월 소실되면서
새롭게 발행 허가를 얻어 창간된 신문이 중외일보이다.



황성신문 皇城新聞
1898.09.05 ~ 1910.09.14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논설을 실어
침략자 일제와 일제에 협력한 정부 대신들을 규탄하였다.





도서관

통권 제 390 호

2016

비매품

기획·편집 |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총괄과

인 쇄 | 2016년 12월 12일

발 행 | 2016년 12월 15일

발행처 | 국립중앙도서관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 화 | (02)590-0799

팩 스 | (02)590-0546

웹사이트주소 | <http://www.nl.go.kr>

인쇄처 | (주)계문사

DOSEOGWAN

vol. 390

December 2016

Publishing office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 Banpo-daero, Seocho-gu, Seoul, Korea

Tel | (02)590-0799 Fax | (02)590-0546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